

30 7/16/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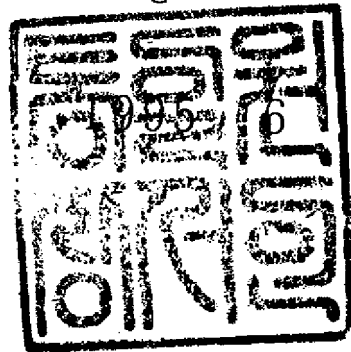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시 대비

남북한 군사문제 쌍방 주요쟁점 자료집

(1972~1995)

3256
257L (290 311)

227L



227L
257L

남북한 군사문제
주요쟁점 자료집
평화협정
군사문제
군사문제
북가리평정회
남북한 군사문제

통 일 원
(남북회담사무국)

- 본 자료집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시에 대비하여 그동안 진행된 남북회담 및 남북한 쌍방이 발표한 성명, 담화, 보도 등의 내용 중 군사문제와 관련된 내용만을 발췌·정리한 것으로써 회담 전략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

목 차

I. 남북한 군사문제 기본입장.....	3
1. 신뢰구축·군축 문제	3
2. 불가침 및 평화협정 문제	6
3. 군사훈련 문제	12
II. 남북회담시 주요쟁점별 쌍방주장 비교	16
1. 신뢰구축 및 군축 문제	16
가. 주한미군 철수	16
나. 신뢰구축·군축	22
다.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한반도 비핵지대화	48
2. 불가침 및 평화협정 문제	61
가. 불가침	61
나. 평화협정	80
3. 군사훈련 문제	99
가. 팀스피리트 훈련	99
나. 기타 훈련	112
[부 록]	
1. 군사문제 쌍방주장 전문(성명, 담화, 논평 등)	121
가. 신뢰구축 및 군축 문제	
나. 불가침 및 평화협정 문제	
다. 군사훈련 문제	
2. 군사문제 관련 합의서	219
가. 남북기본합의서	
나.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	

I. 남북한 군사문제 기본입장

1. 신뢰구축·군축 문제

- 기본적으로 우리측은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군비축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측은 군비축소가 먼저 이루어지면 신뢰구축은 당연히 뒤따른다는 군비축소 우선의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음.
- 북한측이 군비축소를 먼저 실시하자고 주장하는 이면에는 주한 미군의 철수를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북한측은 남조선을 무력적화통일하기 위해서는 주한 미군이 최대 장애물이라는 인식에서 미군철수 주장을 전개해 오고 있음.
 - 해방이후 우리측은 전쟁발발을 막기 위해 국군이 전쟁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의 군비증강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한 미군철수를 늦추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북한은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주한 미군철수를 요구하였음.
- 6.25전쟁 이후 제네바 정치회의('54.5.22)에서 우리측은 「한국 통일방안 4개항」을 제시하고, 중공군은 선거일 1개월전 전면철수를 완료하고, 유엔군의 점진적 철수는 전한국이 통일한국정부에 의해 효과적으로 관할된다는 것을 유엔이 증명하기 전에 완료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으나
 - 북한측은 비례적 원칙을 준수하면서 가능한 한 짧은 기간내에 조선 지역으로부터 모든 외국무력을 철거하기 위한 대책을 취하자고 주장하였음.
- 이후 북한측은 주한 미군철수를 계속 주장해 오고 있는 바, 주요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측은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5차 회의('71. 4. 12)에서 「평화통일 8개항목」을 제시하고 미군의 완전철수, 미군철수후 남북 병력 10만 이내 감축,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조약의 폐기를 주장

- 이에 대해 우리측은 외무부 장관의 담화('71. 4. 14)를 통해 8개항의 제의를 거부하고 유엔의 한국통일에 관한 책임과 원칙을 수락할 것을 촉구하면서 미군철수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음.

○ 80년대 들어 북한측은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의 상설회의 연석회의('84. 1. 10)에서 남·북한 및 미국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제의하고 의제에 외국군대의 철수문제를 포함시켰으며,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정부원 연합회의('88. 11. 7)에서도 「포괄적 평화방안」을 채택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존재가 가장 큰 장애로 된다』고 주장하는 등

- 현실성없는 주한 미군철수 일정을 내놓고 주한 미군과 핵무기의 단계적 철수를 주장하는 등, 실천을 위한 제안이 아니라 협상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전술적 차원의 제의로 일관하였음.

○ 90년대 들어와서도 북한측은 「한반도의 긴장상태 완화 및 조국통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10개항의 군축방안」('90. 5. 31)을 내놓고 외국무력 철수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음.

○ 특히 1972년부터 시작된 남북조절위원회와 80년대 이후 개최된 남북국 회회담, 남북고위급회담 등 각종 남북대화에서도 주한 미군철수 문제를 주장, 회담의 쟁점사항으로 부각시키고 있음.

○ 이러한 미군철수문제에 대해 우리측은 주한 미군은 한·미간의 문제라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북한측은 우리측의 확고한 주한 미군문제에 대해 군축을 하자는 명분하에 주한 미군문제를 끌어들이려 하고 있음.

- 북한측의 군비축소 주장은 1954년 6월 15일 제네바회의에서 남일외상의 연설을 통해 남북군대를 각각 10만명 이하로 무조건 축소하자고 주장한 이래 70년대에는 이를 계속 되풀이 하는가 하면, 이 군비축소 내용에 주한 미군철수, 핵무기 철거 등을 주장했음.
- 80년대 들어와 북한측은 군축문제와 관련하여 「군사당국자 회담」('86. 6. 17), 「다국적 군축협상」('87. 7. 23), 「남북한, 미국의 3자 외무장관회담」('87. 8. 6) 등 여러 형태의 회담형식을 통해 군축문제를 다루자고 주장, 소위 남조선혁명 조건 마련을 위한 전술적인 차원의 제의를 계속하였음.
 - 북한측이 그동안 주장해 온 10만 이하 감축주장을 「다국적 군축협상 방안」에서는 일시적으로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3단계에 걸쳐 감축하는 「단계적 군축방안」을 제시한 것이 특이한 점임.
- 북한측은 90년대 들어 기존의 「단계적 군축방안」에서 보다 신축적 입장을 보인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90. 5. 31) 즉, 『쌍방이 합의한 때로부터 3~4년 동안 3단계로 나누어 병력을 감축한다』는 내용 등 10개항을 제시하였음. 이 제안은 앞으로 남북간에 군사공동위원회 등 군사회담이 가동될 시 북한측의 안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북한측의 군축제안에 대해 우리측은 북한측이 남조선 혁명전술의 일환으로 제시하는 것이므로 이에 전면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군축은 상호불신을 제거하기 전에는 성사될 수 없음을 강조, 군비축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간에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고 있음.
- 우리측이 군축에 관한 제안을 한 것은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쌍방은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신뢰가 구축되고 상호 불가침을 약속한 기초 위에서 본격적인 군비감축을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남

북간 군비감축 추진방향」을 제시하였음.

- 「남북간 군비감축 추진방향」은 북한측처럼 10만 이하 감축 등 군축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신뢰구축이 된 후에 군축문제를 다루게 될 경우 「군축협상의 원칙」으로 제시한 것임.
- 우리측의 군축에 대한 기본입장은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정치적·군사적으로 남북간에 신뢰구축이 이루어진 후, 남북간에 불신이 사라진 후에 군축을 논의해야만 현실성 있는 군축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며, 북한측은 군축을 먼저 추진하다보면 신뢰구축은 자연히 이루어지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음.

2. 불가침 및 평화협정 문제

- 7·4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남북대화가 본격화된 이후부터 남북간에는 「불가침문제」와 관련하여
 - 우리측은 80년대 중반까지는 남북간의 「불가침협정 체결」을 주장 하였으나 80년대 후반부터는 남북간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바탕위에서 불가침 및 군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임.
 - 이렇게 입장이 바뀌게 된 이유는 북한측이 60년대부터 불가침문제 보다는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여 왔으나, 이후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74. 3. 25)에서 허담의 보고연설을 통해 남북한간이 아니라 「미·북한간 평화협정 체결」 주장으로 선회하였으며
 - 80년대 들어서는 「대미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전술로서 「남북간 불가침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북측의 저의가 의심됨으로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임.

- 이러한 북한측 주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회의('73. 3. 14~16)에서 남북간의 긴장상태 완화 및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5개항의 제안을 우선 협의할 것을 요구하며, 무력불행사를 담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하였으며
 - 우리측은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남북간에 합의된 조그마한 합의사항도 지켜지지 못하는 관국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취하였음.
 - * 북한측이 제시한 「5개항」은 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 중지 ② 남북군대의 10만 또는 그 이하 감축과 군비의 대폭축소 ③ 일체의 무기·작전장비·군수물자 반입중지 ④ 미군을 포함한 일체 외국군대 철거 ⑤ 전4항의 해결을 전제로 평화협정 체결
- 이후 북한측은 체코 공산당 제1서기 「후사크」 환영대회에서 김일성 연설('73. 6. 23) 등을 통해 남북한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계속 주장해 왔음.
- 이에 대해 우리측은 박정희 대통령의 '74년도 연두기자 회견('74. 1. 18)에서 남북이 서로 절대로 무력침범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약속하기 위해 「남북 상호불가침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였음.
 - 그러나 북한측은 우리의 이러한 제의에 대해 「남북한간 평화협정 체결」을 반복 주장하며 우리의 「남북 상호불가침협정」 체결을 거부하였음.
 - * 우리측의 「남북 상호불가침협정」 체결 제의는 군사문제 관련 대북제의로서는 최초의 것이었음.
- 이러한 우리측의 「불가침협정」 제의가 있자 북한측은 기존에 주장하던 「남북한간 평화협정 체결」을 서두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74. 3. 25 최고인민회의 허담의 연설을 통해 「미·북한간 평화협정 체결」로 선회하였던

것임.

- 허담은 동 연설에서 『북과 남사이에 대화의 전과정을 보면 도대체 남조선 당국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사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비난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한 당사자인 미국과 직접 평화협정 체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이러한 북한측의 주장에 대해 우리측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79. 7. 1)을 통해 「남북대화 촉진과 한반도 긴장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남북한 및 미국이 참가하는 「3당국 대표회의」를 제의하였음.
 - 그러나 북한은 「3당국 대표회의」는 비현실적이며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는 북한과 미국사이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하며 우리측의 제의를 거부하였음.
- 북한측은 정전협정을 대미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해 오다 1984년 1월 남북한·미국의 「3자회담」을 제의하면서 「대미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 불가침선언 채택」 문제를 토의하자고 주장하였음.
 - 이것은 기존에 북한측이 주장하던 「대미 평화협정체결」과 우리측 주장인 「불가침협정 체결」을 같이 해결하자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3자회담」 논리가 「선 대미 평화협정 체결, 후 남북 불가침선언 채택」을 하자는 것이며
 - 우리측은 대표가 아니라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가 허용된다는 것으로 북한의 의도는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기만전술에 불과한 것이었음.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 변천 과정

- 1953. 7.27 정전협정 체결
- 1954. 5.15 한반도 평화상태전환을 위한 최초의 「남북한 평화협정체결」 주장
- 1962.10.22 최고인민회의 제3기 1차회의(김일성 연설) 「주한미군철수」를 전제로한 「북남평화협정」주장
 - ※70년대초까지 남북한 평화협정체결 주장
 - ┌ 주한미군 철수
 - ├ 남북한 상호불가침
 - └ 양측 군대의 10만명 또는 그 이하로 축소
- 1974. 3.25 북한최고인민회의의 5기 3차회의 「미·북평화협정 체결」주장
 - ┌ 상호불가침 및 무력위협성 제거
 - ├ 상호무력과 군대증강 금지
 - └ 외국 군대 및 무기철거
 - ※북한측은 1975년 제30차 UN총회에 각서제출, 이 각서에서 북한은 한국전쟁 및 정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으로서 양자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
- 1984. 1.10 미·남·북한간 「3자회담」제의
 - 미·북 「평화협정」을 체결
 - 남·북간 「불가침 선언」
- 1994. 4.28 미국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제의

○ 이후 개최된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에서도 「남북 불가침 공동선언」 문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하였으나, 이것도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전술로 보이며, 우리와는 불가침선언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평화협정 문제는 미국과의 직접접촉으로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같이 북한측은 「대미 평화협정 체결, 남북한간 불가침선언 채택」을 기본구도로 한 군사문제 우선해결 입장을 취한데 반해,
 - 우리측은 「선 신뢰구축을 기반으로 한 남북당사자간 불가침협정 체결」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이 문제는 남북간에 숙제로 남게 되었음.
- 그러나 1988년 10월 18일 당시 노태우대통령이 제43차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남북한간의 신뢰구축문제와 군사문제를 병행하여 토의할 용의를 표명함으로써 「남북 불가침협정 체결」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되었음.
- 이러한 상황변화를 배경으로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불가침」이 포함된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군사분과위원회가 개최되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와 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군사력 균형감축 문제 등 군사문제 전반을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
- 한편 남북합의서 채택 등으로 호전되었던 남북관계는 북한의 NPT탈퇴 선언과 핵개발 문제가 국제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다시 냉각된 가운데, 북한측은 '93년 6월과 7월 뉴욕과 제네바에서 개최된 미·북 1-2단계 고위급회담에서 미국에 대해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음.
- 북한의 미·북평화협정체결 주장은 '93년 이전까지는 대체로 구호성에 그쳤으나 '93년 이후부터는 대미평화협정체결 주장과 함께 정전체제 외해기도의 일환으로 군사정전위원회의 무실화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대표단 철수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미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적극적 입장을 취했음.

정전체제 와해를 위한 일련의 북측조치

- 1991. 3.25 군사정전위 본회의 참석 거부
- 1993. 4. 3 중립국감독위 체코대표단 축출
- 1994. 4.28 군사정전위 비서장회의에서 군사정전위 기능 중지 통보
- 1994. 5.24 북한군 유명철상좌-UN군 홀러리 중령 판문점 접촉시, 군사정전위를 대신할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설치 유엔사 통보
- 1994.12.15 북측요청에 의해 중국 군사정전위 대표단 철수
- 1994.12.30 홀 준위 사건시 정전위를 거부하고 직접 미·북간의 협상으로 처리
- 1995. 2.28 중립국감독위 폴란드 대표단 축출
- 1995. 5. 3 판문점 중감위 사무실 폐쇄 및 공동경비구역 북측지역 출입제한 조치 발표

- 이처럼 최근 북한은 미국측에 대해 평화협정체결 및 이를 위한 「새로운 평화보장체제」 수립 협상을 제의('94.4.28)하는 한편, 정전협정 및 정전기구 무실화를 위한 조치들을 강행하고 있음.
- 북한측의 이러한 정전위 와해 기도에 대해 우리측은 외무부 대변인 성명('95.2.28)등을 통해 「당사자 해결원칙에 따른 남북한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체제가 구축될때까지는 현 정전협정을 준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였음.

3. 군사훈련 문제

- 북한측은 북한적십자회 명의의 방송통지문('78. 3.19)에서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비난한 이래, 각종 선전매체 및 선전단체를 통해 군사훈련 중지를 요구하면서 남북회담때마다 「대화의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주장해 왔으며
 - 이에 대해 우리측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통상적이고 연례적인 방어훈련」이라는 기본입장에서 남북한 주요군사훈련의 사전통고 및 북한대표의 참관초청 제의로 대응하였음.
- 북한측의 군사훈련에 대한 주요 주장내용을 살펴보면
 -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는 「조평통」 성명 및 노동신문 논평 등 방송매체를 통한 군사훈련의 중지를 요구하면서 우리측을 비난해 왔으나
 - 남북국회회담 제7차 준비접촉('88. 12. 29)에서 대화의 장애가 되는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중지문제」를 의제로 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군사훈련문제를 「남북대화의 최대의 쟁점사항」으로 부각시켰음.
 - 또한 남북고위당국자회담 제2차 예비회담('89. 3. 2)에서도 「3개항의 긴급조치」를 제시,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에 동원된 전투병력과 무장장비의 복귀, 군사훈련시 외국군 제외, 훈련규모 축소 및 명칭변경을 요구하였음.
 - 이에 대해 우리측은 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은 1976년부터 연례적으로 공개리에 실시하고 있고, 1982년부터는 훈련계획을 사전통보하고 북측에 참관초청까지 한 공개적 방어훈련임을 강조하였음.
- 제1차 남북고위급회담('90. 9. 4~7)에서 북한측은 「군사적 대결상태 해

소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선차적 과제」라고 하면서 잠정적으로 2~3년 동안만이라도 팀스피리트훈련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였음.

- 이에 대해 우리측은 북한측이 전방에 배치된 공세전력의 위협을 제거하고 대남 적대정책을 수정하다면 언제든지 훈련을 조정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음.

○ 이어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채택을 위한 제2차 대표접촉('91. 12. 28)에서 북한측은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를 위해 『핵공격을 가상한 어떠한 훈련도 하지 않을 것』을 조문화하자고 주장하였으나

- 우리측은 핵전쟁을 가상한 조항의 토의는 「군사적 신뢰구축 차원」에서 앞으로 구성될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이며, 팀스피리트 훈련은 핵공격을 가상한 훈련이 아님을 강조하였음.

○ 이후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됨으로써, 1992년 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게 되자 북한측은 이 조치를 「그동안 우리의 투쟁이 열매를 맺게 된 것」이라고 선전을 하였으며, 이어 개최된 남북군사분과위원회 제6차회의('92. 7. 16)에서는 을지 포커스렌즈훈련을 비난하면서 팀스피리트훈련이 아닌 다른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이를 문제삼기 시작했음.

- 이에 대해 우리측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라면 일상적으로 하는 자위적 수단의 정상적인 군사훈련까지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 의도가 의심스러운 억지주장이라고 이를 일축하였음.

○ 각 분야 회담이 진행되면서도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교착상태로 뒀에 따라, 한·미 양국은 제24차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북한 핵문제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의 재개가 불가피함을 결정하고, 우리측은 『92년 말까지 합의된 남북 상호핵사찰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팀스피리트훈련을 실시 않을 수 없다』고 밝혔음.

- 북한측은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제9차 회의('92. 10. 22)와 제1차 통신실무자접촉('92. 10. 28)에서 제24차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결정된 팀스피리트훈련 재개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남북회담을 교착상태에 빠뜨렸으며,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에서는 팀스피리트훈련 철회를 「남북상호핵사찰규정」 토의의 전제조건화하였음.
- 또한 북한측은 남북간 합의된 각 분야별 공동위원회와 제9차 남북고위급회담까지도 팀스피리트훈련과 연관지어 일방적으로 회담을 결렬시켜 버렸음.
- 이에 대해 우리측은 북한 핵문제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남북상호핵사찰규정이 조속히 채택되어 상호사찰이 실시되면, 팀스피리트훈련을 항구적으로 중지하는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북한측은 이를 외면하였음.
- 이후 1993년 10월 5일부터 1994년 3월 19일까지 8차에 걸쳐 진행된 남북간 특사교환을 위한 실무접촉에서도 북한측은 「모든 전쟁연습의 중지」를 특사교환의 전제조건화 함으로써, 팀스피리트훈련을 비롯한 모든 군사훈련을 문제삼으려는 저의를 들어냈음.
- 우리측은 북측이 핵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일 경우 팀스피리트훈련은 신축성을 가지고 검토할 용의가 있음을 거듭 밝히고, 특사교환 실현의 조건으로 '94팀스피리트훈련 중지를 공식발표('94. 3. 3)까지 하였으나, 북한측의 불성실한 태도로 특사교환은 성사되지 못했음.
- 또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고위급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측은 팀스피리트훈련실시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이 미·북 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팀스피리트훈련실시를 연기하여 오다가
 - 미·북 제네바합의('94.10.21)로 북한의 모든 핵시설이 동결되고, 핵투명성 보장을 위한 북한측의 긍정적 조치들이 이행됨에 따라 '95팀스

퍼리트훈련 실시를 중단한다고 공식발표('95.2.25)하였음.

- 한편 우리측은 1994년 12월 1일 부로 미국으로부터 평시작전권을 환수함에 따라 '95년 4월 처음으로 우리측 지휘체계에 따른 3군합동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 북한측은 『남조선의 이같은 합동군사연습은 우리에게 대한 또 하나의 엄청난 도발이고 도전』이라고 비난하였음.
- 또한 1995년 4월 20일 합동참모부는 오는 10월에 육군 2개군단이 포함된 육해공 12만명이 참가하는 3군 합동훈련이 실시될 계획이라고 발표한데 대해
 - 북한측은 『또다시 대규모의 전쟁연습을 벌이려 하는 것은 안팎으로 궁지에 빠진 처지를 북침전쟁의 도발에서 건져보려는 것이며 그들의 반대화, 반통일적 입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 하였음.
- 북한측이 이러한 우리의 3군합동훈련 실시에 대해 비난을 하는 것은 이 훈련을 현재 중단된 팀스피리트훈련의 대체훈련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우리의 군사훈련에 대한 비난의 당위성과 명분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임.

II. 남북회담시 주요쟁점별 쌍방주장 비교

1. 신뢰구축 및 군축 문제

가. 주한미군 철수

우 리 측	북 측
<p>솔직히 말해서 UN군 또는 미군은 우리가 돌아가라고 그래야 돌아가지, 여러분들이 돌아가라고 그래서 돌아갈 겁니까, 당신들이 돌아가라고 그러면 더 안돌아감. 솔직히 말씀드려요, 실정이 그래요. 가급적 뭐 속히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러니 자꾸 지금 이 상태에서 돌아가라 이렇게 큰소리 하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돌아가지 말라는 말이 되는 것임. 여기 더 있게되는 결과가 됨.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일단 돌아갔던 미군이 왜 다시 왔습니까, 이거 그 사람보고 돌아가 달라 그럴 사람은 우리임.</p> <p>그것은 이 7·4공동성명의 정신, 평화적 통일에 관한 것, 이런 것이 다 진척이 되어 가지고 이제는 한국에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의 전망이 보인다 그럴적에 돌아가라고 해야만 돌아가고 또 세계가 납득하고 UN이 이해를 해줄 것임. 그 점을 깊이 생각해 주기 바람.</p>	<p>미국을 나가라고 하는 것이 7·4공동성명에 철저히 부합되는 것이지 미국을 뒤두라고 하는 것이 7·4성명에 어떻게 부합되는가, 그럼 미국을 남겨놓자고 하는 것이 미국이 계속 있어달라고 하는 것이 그럼 그것이 통일을 위한 것이고, 7·4성명에 부합되는 것이냐, 어떤 것이냐, 7·4성명이란 것이 미국이 나가는 것이 통일이 되고 자주적 통일의 전제가 마련되지 미국이 있는 조건에서 자주적 통일의 전제가 조성될 것이 없음.</p> <p>우리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은 어디까지나 남조선에서 미군을 내보내고 내정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며 민족내부문제인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조선에서 전쟁의 화근인 미제침략군을 내보내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실제적 담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p>

우 리 측	북 측
<p>우리가 반드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게 아님. 언젠가는 돌아가야지요, 될수록 빨리 돌아가야지요, 될수록 우리가 빨리 통일의 전망이 똑바로 서야지요 다시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러면 어느때 돌아가느냐, 영영 있을리는 없어요, 그렇게 오래 있을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p> <p>평화적인 통일방법을 정착시킴으로써 다시는 한반도에 평화의 파괴가 없다고 우리들과 당신들과 UN과 UN가입국들과 또한 미국 또는 미국 시민, 한국참전 각국들이 확고하게 실증적으로 자신을 가질 때에 그때에 돌아가게 됨.</p> <p>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잣밥에만 마음이 있다는 말이 있음. 그것을 반드시 꺼낼 필요도 없이 평화적 통일방안에는 성의가 없고 미군 돌려보내고 무력 뒷받침하고 소위 남조선혁명을, 적화통일을 서두르는 그런 속심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갖지 않게 해주셔야만 우리 이 남북대화가 성공한다고 나는 확신함.</p> <p>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통일은 늦어만 가고 외군의 철수는 실현되지 않음.</p> <p>(남북조절위 제5차 부위원장 회의)</p>	<p>그러므로 이번 조치는 7·4공동성명에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로 나라의 통일원칙과 자주적 통일원칙과 평화통일원칙을 성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 조치임.</p> <p>미군을 내보내는 것이 매국이나, 미군을 남조선에 그냥 남아있으라고 하는 것이 매국이나, 그것은 명백함.</p> <p>우리의 이 정당한 조치가 실현되면 7·4공동성명에서 천명된 3대원칙에 따라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대한 매우 유리한 조건이 조성될 것이며, 북과 남사이에 대화도 또 성과적으로 추진되리라 하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음.</p> <p>지금까지 귀측에서 미군 나가라는 소리를 못했다면, 좋기야 우리가 미군 나가라고 하고, 우리 합세해서 미군 나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미국 나가라고 하는 건 잘못이라고 하고 미국 있으라고 하는 것은 잘했다단 말인가?</p> <p>(남북조절위 제5차 부위원장회의)</p>

우 리 측	북 측
<p>나는 또한 「외세의존」, 「칭탁외교」, 「분열주의」 운운하는 귀측 비난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음.</p> <p>귀측은 우리측에 대해서 『미군을 붙잡아 두기 위해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데 난색을 보인다』는 것은 외세의존의 극치』라고 비난을 했음.</p> <p>나는 귀측의 이 발언이 사태의 진실을 얼마나 잘못 파악하고 있는가, 아니면 대화상대방을 고의적으로 모욕하기 위해 꾸며낸 말인가를 의심하게 됨.</p> <p>우리측은 미군을 붙잡아두기 위해서 불가침선언 채택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님.</p> <p>우리측이 채택하자고 하는 불가침은 남북의 7천만 겨레가 믿을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불가침을 약속하자는 것임.</p> <p>귀측이 남북관계 개선에 아무런 성의도 보이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남북간의 평화체제 구축과 사회개방 그리고 교류협력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조건에서 서둘러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자고 하는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의구심을 갖고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고위급 제3차 회담)</p>	<p>미군과 핵무기는 우리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음.</p> <p>지금 남조선에는 4만여명의 미 육해공군이 상시 주둔해 있고 1천여발의 핵무기가 항시적으로 배치되어, 우리 민족의 생존을 대단히 위협하고 있음.</p> <p>남조선에 와있는 미군이 미군의 대아세아정책과 군사전략을 집행하는 것을, 자기의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이것은 비밀이 아님.</p> <p>남조선에 배치된 1천여발의 핵무기는 우리 민족을 수십번 멸살시키고도 남을 방대한 무기이며, 미국은 우리 나라에서 누구와도 협의없이 임의의 순간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것임.</p> <p>이것은 남조선에 와있는 미군과 핵무기가 조선반도의 평화를 엄중하게 유린하는 가장 큰 불안요소로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임.</p> <p>이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우리가 평화를 실제로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것임.</p> <p>남의 군대와 남의 핵무기를 제나라 땅에 두는 것은 민족적 존엄의 견지에서 보아도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함.</p>

우 리 측	북 측
	<p>지금 세계적으로 자주성을 지키고 민족적 존엄을 귀중히 여기는 나라들은 누구나 다 자기 나라에 외국군대의 주둔이나 핵무기의 배치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핵무기가 자기 나라 주변 영해를 통행하는 것마저 다 금지하고 있음.</p> <p>이런때에 우리 민족만이 제나라땅을 외국의 핵군사기지로 내맡기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들의 민족적존엄을 손상시키는 일이라고 말 아니할 수 없음.</p> <p>우리는 미군과 핵무기 철수를 외면하거나 먼 훗날의 일로 돌려놓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본문제로 내놓고 이를 진지하게 달라붙어 협의할 때가 이제는 왔다고 생각함.</p> <p style="text-align: right;">(남북고위급 제1차 회담)</p>
<p>주한미군은 6.25전쟁 때문에 다시 들어온 것이며 귀측의 남침위협만 없어진다면 그 존재이유도 저절로 없어지게 되는 것임. 따라서 문제는 주한미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기피하고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기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귀측 스스로에게 있는 것임.</p> <p>나는 귀측이 우리측의 북방정책에 대</p>	<p>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지적하고져 하는 것은 첫째로, 대미관계문제임.</p> <p>북남합의서의 기본정신의 하나는 북과 남이 외세에 의존함이 없이 동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하는 민족자주정신임. 귀측도 이것은 인정하고 있음.</p> <p>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문제로 되는 외세란 누구이겠는가, 그것은 모두</p>

우 리 측	북 측
<p>해 「청탁외교」나, 「사대외교」나 또는 「분열주의」 운운하고 있는 것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음.</p> <p>최근 귀측은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서두르고 미국과의 접촉을 빈번히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귀측의 주장대로라면 곧 「청탁외교」나 「사대외교」 또는 「분열주의」로 비판받아 마땅함.</p> <p>대한민국은 엄연한 주권국가로서 중국·소련 등 사회주의국가들과 관계개선을 추진할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음.</p> <p>현재 남과 북의 동시수교국수가 80여 개국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은 귀측도 지지하고 있는 일임.</p> <p>이웃나라들과 선린우호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려는 우리의 발전적 대외활동조차 「분열주의」, 「사대주의」 등으로 헐뜯는 귀측의 논리는 누가 들어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임.</p> <p>우리는 귀측이 같은 민족으로서 개방과 번영과 적극적인 국제활동을 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고위급 제3차 회담)</p>	<p>에게 명백한 바와 같이 남조선에 자기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내정에 간섭을 하고 있는 유일한 외세인 미국임.</p> <p>그러므로 북남합의서에 담겨 있는 민족자주정신을 귀중히 여긴다면 용당 대미관계에서 새로운 전환이 있어야 할 것임.</p> <p>그러나 귀측은 남조선에 있는 미군이 「전쟁억제력」이며 그것이 자주적 원칙을 구현하는 데서 본질적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북남대결시대의 대미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며 미군도 그대로 두려 하고 있음.</p> <p>지어 나라가 통일된 다음에도 미군이 남조선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음.</p> <p>미군이 「전쟁억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미군에 의존해서 보장하겠다는 말인데, 이것은 북남사이의 자주적인 평화노력을 귀측 자신이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며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까지 선언한 오늘의 새로운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나 같은 것임.</p> <p>북남합의서에 담겨져 있는 자주적 정신과 원칙 그리고 불가침에 관한 선언은 오늘 대미관계를 재조정하고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킬 것을 회피할 수도 없</p>

우 리 측	북 측
	<p>고 지체시킬 수도 없는 응당한 의무로 일정에 제기하고 있음.</p> <p>이와 같은 조건에서 귀측으로서는 지금 당장 미군을 다 철거시키지는 못한다 하여도, 최소한도 그러한 의지와 태도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임.</p> <p>만일 귀측이 이렇게 하는 것을 거부하고 합당치 못한 논리로 종래의 대미관계를 합리화하면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귀측의 자주성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귀측 스스로가 허무는 것이며 「남과 북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 원칙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귀측의 주장을 빈말로 되게 하는 것임.</p> <p>이렇게 되면 우리가 귀측을 그야말로 자주적인 대화상대방으로 믿고 대화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문제로 제기 되지 않을 수 없음.</p> <p>진정으로 자주적원칙에서 북과 남이 주체가 되어 우리 민족끼리 나라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 귀측이 먼저 철저한 자주적 립장에 서야 하고 이러한 립장에서 대미관계를 재조정함은 물론,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킬 용단을 내려야 하며 이 문제를 회피하려 하거나 덮어두려고 하지 말아야 함.</p> <p style="text-align: right;">(남북고위급 제7차 회담)</p>

나. 신뢰구축·군축

우 리 측	북 측
<p>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거기에 근거해서 귀측이 그러한 지령과 그러한 비방을 중지하고, 곧장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평화적인 태도에 들어갔던 들, 이러한 사태는 우리가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마당에서 대결의 의식을 상호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결의식을 갖지 않으면 안되게끔 만든 외부적인 요소를 우리가 먼저 배제하는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p> <p>귀측에서 제의하는 평화협정이나 또는 군비축소, 이것 모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목표인 것임.</p> <p>내가 평양을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누차 강조한 것은 그러한 여건을 촉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신뢰의 바탕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이것을 누누히 강조한 바 있음.</p> <p>그러나 신뢰의 바탕이 없는 속에서 군비를 축소한다, 또는 더군다나 6·25동란이라는 엄청난 민족상잔의 경험을 가진 우리에게 지금 당장 군비를 축소한다, 평화협정을 가진다는 것은 누가 이 말을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임.</p>	<p>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은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부합됨은 물론 나라의 평화와 평화적 조국통일을 열망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 염원과도 완전히 일치함. 뿐만 아니라 그것은 긴장상태의 완화으로 나가는 현사대의 추세에 부합되고, 평화를 바라는 전세계인민들의 지향과도 전적으로 합치되는 것임.</p> <p>우리는 쌍방이 고위급회담을 실현함으로써 남북사이의 동결상태를 풀고 자주적 평화통일의 실마리를 찾은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적 대치상태를 해소함으로써 남북사이의 대결상태를 마수고 민족적 대단결을 위한 실제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당면하게 쌍방사이에 해결해야 할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인정함.</p> <p>이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다음과 같은 5개항목의 제안을 협의할 것을 본회의에 제기하는 바임.</p> <p>첫째,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둘 것</p> <p>둘째, 북과 남의 군대를 각각 10만 또</p>

우 리 측	북 측
<p>여기에는 우리가 다같이 서로 그런 것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신뢰의 분위기를 마련해 두어야 하는 것이고, 그 신뢰의 분위기가 조성될 때 거기에서 당연히 그러한 문제는 뒤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p> <p>우리도 국민 총생산의 5%의 해당되는 군비를 충당해 가면서 60만 군대를 유지하기에는 힘겨운 문제입니다. 이것은 귀측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야 될 문제이고 또 귀측 스스로도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p> <p>그러한 염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또 그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군과 군이 마주앉아서 이야기할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더 신뢰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p> <p>지금 아직도 폭력혁명지령이 전과를 타고 내려오고 있고, 또 사람이 가지고 내려오고 있고, 또 모처럼 평양을 방문한 내 방에까지도 터무니없는 사실로 대남 비방하는 통일신보란 신문이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여건속에서, 과연 내가 마음을 놓고 평화협정문제를 논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귀측이 내 입장이 되더라도 같은 심정이라 생각합니다.</p>	<p>는 그 아래로 줄이며 군비를 대폭 축소할 것</p> <p>셋째, 외국으로부터의 일체 무기와 작전장비 및 군수물자의 반입을 중지할 것</p> <p>넷째, 우리나라에서 미군을 포함한 일체 외국군대를 철거시킬 것</p> <p>다섯째,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며 북과 남사이에 서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데 대하여 담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p> <p>이와 함께 우리는 남북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풀기 위하여 쌍방무력의 총참모장을 비롯한 군사인원들을 조절위원회에 망라시키든지, 군사분과위원회를 만들든지 하여 이상의 문제들에 대한 집행대책을 협의할 것을 제의함.</p> <p>우리의 이 제안은 우리나라에서 평화를 확고히 하고 북과 남 사이에 확고한 신임의 전제를 하루빨리 마련함으로써, 합작과 단결을 도모하며 평화통일로의 길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가려는 염원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p> <p>우리의 이 제안이 실현되면 남북사이의 긴장상태가 급속히 완화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서 새 국면이 열릴 것이며 우리 나라에서의 평화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유리한 조건이 마련될</p>

우 리 측	북 측
<p>그러므로 우리가 군비축소문제나 또는 평화협정문제를 논의하려면, 진정 신뢰의 바탕에서 폭력혁명지령과 같은 그러한 행위가 계속되는 속에 발로만 평화협정 말로만 군비축소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오히려 더 민족의 불행을 가져오는 것임.</p> <p>따라서 나는 귀측의 긴 여러가지 애국 충정에 넘친 제안에는 근본적으로 동의 를 하나 추진하는 절차, 순서, 방법 또 가장 내가 중요시하는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상대방 을 자극하는 일절의 행동을 중지하고 이 해와 신뢰가 구축되는 바탕위에서 논의 될 문제이고, 또 그러한 순서를 다듬기 위해서는 오늘 아침 우리가 제의한 경제 와 사회문제부터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 갈 것을 거듭 제의하면서 귀측의 의견에 대충 답사드린 것으로 하겠음.</p> <p style="text-align: center;">(중 략)</p> <p>군비축소문제에 대해서 내가 원칙적으 로 반대한 일이 없음.</p> <p>나도 군비축소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 를 했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남북관계 가 공동성명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 다고 하더라도, 아직 나는 남북관계가</p>	<p>것임. 그렇게 되면 또한 수 많은 청장년 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더 많 은 인적, 물적 자원을 민족경제의 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들릴 수 있게 될 것임.</p> <p>이러한 조치는 의심할 바 없이 북과 남의 온 겨레들에게 커다란 기쁨을 주고 평화통일을 위한 그들의 노력을 더욱 고 무할 것이며,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인민 들로부터도 절대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 게 될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중 략)</p> <p>이번에도 군비축소를 말로만 하는 것 이 아니라 군대를 구체적으로 10만이하 로 줄이자, 줄이면 누구든지 힘을 쓸려고 하지 않으면 자연적 이런 저런 분위기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이 문제를 제기 하는데, 군비축소도 발뿐이고 또 다른 것 도 다 말뿐임. 그렇다면 우리가 귀측에서 그 전부터 또 내놓은 여건을 어떻게 조 성하며 그 다음에 또 신임을 무엇으로 표시하겠는가 하는 것을 내가 여기에서 여러번 요구했음.</p> <p>우리는 신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서로 자꾸 무력을 증강하지 말아야 하겠다, 서로 마주 서 있는 대치상태를 풀어야 하 겠다. 우리는 이런 안을 제기했고 귀측에</p>

우 리 측	북 측
<p>군비축소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음. 따라서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는 만큼, 하여튼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신뢰를 두터이 하자.</p> <p>그래서 군인들과 군인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 나는 이렇게 제외하고 있는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중 략)</p> <p>역시 체제와 제도의 차이에 의해서 항상 쌍방이 오해를 하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부총리께서 생각하는 군비를 줄이고 나아가서는 군대가 없는 남북관계가 하루 바빠 되어야 되겠다는 그 기본정신, 기본방안에 대해서는 나도 전적으로 동감함.</p> <p>나는 군비축소 문제를 진정 성의있게 다룰 수 있는 그 시기가 빨리 올 것을 기대하고, 그 시기가 빨리 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우선 조성하기 위해서 조절 위원회가 더 노력을 해야 됨.</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조절위 제2차 회의)</p>	<p>서는 그것보다도 그저 오고 가고 신임을 조성해야 하겠다, 오고 가고 하는 조건을 우리가 반대를 하지 않았음.</p> <p>모든 문제를 하자는 것이 지금 보는 각도문제인데 제일 간단한 것이 군대를 축소하자, 군대를 다 축소하는데 그 쪽에서만 위험이 있는가? 우리도 같고 거기도 동일한 숫자로 평등한데, 누가 지고 이길 것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하자는 것인데, 군대만 축소하면 오히려 위험하다 그러면 우리는 위험하지 않는가? 우리도 마찬가지임.</p> <p>그러니까 서로 같은 입장에 서기 위해서 동등하게 축소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축소하자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축소해야지요. 말로만 축소해서 되겠는가? 그러면 모두 우리가 제외한 것은 그저 말로만 그런 것을 제기한다, 빈 말로만 군비축소를 하자고 한다, 그런 것은 아님.</p> <p>우리는 진심으로 축소를 해야 이것이 신임이 되지…… 그러면 귀측에서는 신임못하게 됨. 신임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직까지 중요하게 내놓은 것은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중 략)</p>

우 리 측	북 측
	<p>우리가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하고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면 무엇 때문에 평화라는 말이 나왔는가, 전쟁때문에 평화가 나왔음. 군대가 있으니 전쟁이 나지 군대가 없으면 백성들끼리 목침 놀음이나 하고 말았지 큰 피해도 없을 것임. 그러니까 전쟁의 관점을 없애자면 군대를 축소해서 조금씩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외국군대가 들어올 때 남북이 합쳐서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할 힘이나 가지고 있으면 되었지, 제 민족끼리 싸우자고 너희도 준비하고, 나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무엇이 되겠는가, 이래서 우리의 제안을 많이 연구했음.</p> <p>무엇으로 불신임을 없애겠는가, 우리는 불신임을 없애는 기본이 서로 총가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보자 그러면 우리도 해보자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공정하게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함.</p> <p>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일방만 군대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20만 가지고 있고 저기는 10만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옹당 불평등하지요. 그러나 각각 같은 형편에 하자, 해 보자는 것을 제기한 것임.</p> <p>왜냐, 서로 60만, 우리도 그만한 숫자</p>

우 리 측	북 측
<p>군비축소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음. 따라서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는 만큼, 하여튼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신뢰를 두터이 하자.</p> <p>그래서 군인들과 군인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 나는 이렇게 제의하고 있는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중 략)</p> <p>역시 체제와 제도의 차이에 의해서 항상 쌍방이 오해를 하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부총리께서 생각하는 군비를 줄이고 나아가서는 군대가 없는 남북관계가 하루 바빠 되어야 되겠다는 그 기본정신, 기본방안에 대해서는 나도 전적으로 동감함.</p> <p>나는 군비축소 문제를 진정 성의있게 다룰 수 있는 그 시기가 빨리 올 것을 기대하고, 그 시기가 빨리 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우선 조성하기 위해서 조절 위원회가 더 노력을 해야 됨.</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조절위 제2차 회의)</p>	<p>서는 그것보다도 그저 오고 가고 신임을 조성해야 하겠다, 오고 가고 하는 조건을 우리가 반대를 하지 않았음.</p> <p>모든 문제를 하자는 것이 지금 보는 각도문제인데 제일 간단한 것이 군대를 축소하자, 군대를 다 축소하는데 그 쪽에서만 위험이 있는가? 우리도 같고 거기도 동일한 숫자로 평등한데, 누가 지고 이길 것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하자는 것인데, 군대만 축소하면 오히려 위험하다 그러면 우리는 위험하지 않은가? 우리도 마찬가지임.</p> <p>그러니까 서로 같은 입장에 서기 위해서 동등하게 축소하자는 것인데, 그러면 축소하자는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축소해야지요. 말로만 축소해서 되겠는가? 그러면 모두 우리가 제의한 것은 그저 말로만 그런 것을 제기한다, 빈 말로만 군비축소를 하자고 한다, 그런 것은 아님.</p> <p>우리는 진심으로 축소를 해야 이것이 신임이 되지…… 그러면 귀족에서는 신임못하게 됨. 신임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직까지 중요하게 내놓은 것은 없음.</p> <p style="text-align: center;">(중 략)</p>

우 리 측	북 측
	<p>우리가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하고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면 무엇 때문에 평화라는 말이 나왔는가, 전쟁때문에 평화가 나왔음. 군대가 있으니 전쟁이 나지 군대가 없으면 백성들끼리 목침 놀음이나 하고 말았지 큰 피해도 없을 것임. 그러니까 전쟁의 관점을 없애자면 군대를 축소해서 조금씩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외국군대가 들어올 때 남북이 합쳐서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할 힘이나 가지고 있으면 되었지, 제 민족끼리 싸우자고 너희도 준비하고, 나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무엇이 되겠는가, 이로서 우리의 제안을 많이 연구했음.</p> <p>무엇으로 불신임을 없애겠는가, 우리는 불신임을 없애는 기본이 서로 총가진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보자 그러면 우리도 해보자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공정하게 제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함.</p> <p>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일방만 군대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20만 가지고 있고 저기는 10만 가지고 있어라, 그러면 웅당 불평등하지요. 그러나 각각 같은 형편에 하자, 해 보자는 것을 제기한 것임.</p> <p>왜냐, 서로 60만, 우리도 그만큼 숫자</p>

우 리 측	북 측
	<p>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이것, 무엇때문에 누구하고 싸우자고 군대를 가지고 있겠는가, 우리가 외국군대가 들어올 때에는 앞뒤 합해서 군대를 양성할 필요가 있겠지만 제사람끼리 싸우자고 자꾸 군대를 양성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점에서 진정으로 민족적 전망을 보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거기에서는 이것을 믿지 못하겠다. 만일 믿지 못하겠다면은 믿을 조건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믿을 수 있는 안을 내서 무슨 일을 하면은 믿어 지겠는가, 믿어질 여건이 어떻게 하면 조성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신임하겠는가, 문제는 여기에 중심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함. 그러니까 상호 생각하는 점이 다르니까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p> <p style="text-align: right;">(남북조절위 제2차 회의)</p>
<p>군비축소라는 궁극적인 목표에는 나도 변함이 없음. 또 그것은 귀측이 우리에게 요망하지 않더라도 우리도 귀측에게 제안하고 싶고, 문제는 하여튼 마음 놓고 군비축소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그 자체보다도, 평화를 견지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소위 위정자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이미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p>	<p>이제 말씀한데 평화를 지키자고 위정자들이 평화를 지키자는 이념이 확고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평화적으로 우리가 살자고 하면은 무엇때문에 군대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무엇을 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논의되어야 될 것임.</p> <p>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임이 거기에서 조성되고, 진짜로 평화를 하자면 군대를</p>

우 리 측	북 측
<p>평화선언을 했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지키는 여건, 지키는 실적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함.</p> <p>그리고 군비축소라는 것이 박부총리 말씀대로 그렇게 이쪽에도 열, 저쪽에서 열, 다섯개, 다섯개 그렇게 산술적으로 해결된다면 쉬운 문제임.</p> <p>그 군비축소의 회답자체가 내가 보기에 상당히 신중성을 기해야 될 회답이고, 그러므로 신중성을 기해야 될 회답이고, 그러므로 내가 앞에서도 되풀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7·4남북공동성명 정신을 지키는 그 자세, 그 실적의 축적, 거기에서 군비축소 문제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신뢰의 분위기가 온다 이렇게 봄. 따라서 좀 더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하여 상호 그 정신을 지키는 실적을 더 올려서, 이제는 마음놓고 군비축소를 이야기해도 좋다는 여건이 빨리 오도록 노력을 합시다. 그 근본적인 목표에 나는 반대하지는 않음.</p> <p>먼저 우리가 7·4 남북공동성명을 지켜서 서로 상대방을 자극하고 상대방을 불법적으로 전복하려는 그러한 외부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야만, 상호 신뢰의 분위기가 이루어 지는 것이지 한쪽은 그것을 계속하면서 자꾸 군대줄이는 이야기를</p>	<p>적게 가지고 있으면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평화적으로 하자고 약속은 하면서 군대를 축소하자고 하면 이것은 아직도 불신임때문에 군대를 축소못하겠다, 이런 의견인데 그러면 무엇을 해야 군대를 축소할 그런 신임이 나오겠는가 하는 문제임.</p> <p style="text-align: center;">(중 략)</p> <p>어느때 시기가 되겠는가, 7·4공동성명 나왔으면 민족적 단합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 기초가 마련된 조건에서 또 우리의 합의서에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문제하자, 군대도 축소하고 군사분계선에서 무엇도 없이 하고 다 있는데 이 아념에 기초해서 군비축소할 바탕도 마련했다고 생각함.</p> <p>그렇다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달라붙어야지, 이 문제에 달라붙지 않고 서로 실력을 배양하자고 해서 총 한 자루 가지고 있는데 더 가져 또 가져, 그러면 무슨 통일이 되겠는가, 긴장의 완화가 아니라 긴장의 격화밖에 가져 올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함.</p> <p style="text-align: right;">(남북조절위 제2차 회의)</p>

우 리 측	북 측
<p>해보았자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p> <p>그러니까 만약 우리도 잘못이 있으면 우리도 그 잘못을 고치고, 또 귀측에서도 그런 잘못된 일을 고치고 해서 일단 7·4 남북공동성명을 성실히 지켜나가는 업적부터 먼저 쌓아올려야 함. 그리고 군비문제를 논의하는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함.</p> <p>(중 략)</p> <p>귀측의 의견은 중요하게 서면으로 작성된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귀측의 의견으로 받겠음.</p> <p>다만, 여기에 대한 우리측의 의견으로서 군비축소를 논할 시기가 빨리 오기 위한 노력을 좀 더 하는 것으로 하고, 일응 그 시기에 대해서 아직 우리는 군비축소 문제를 논의할 입장이 아니다 하는 명확한 답변을 드림.</p> <p>(남북조절위 제2차 회의)</p>	
<p>남북이 불신과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공통의 기반을 마련하고, 보다 안정된 여건속에서 상호관계를 합리적으로 관리·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평화통일을 이룩하겠다는 의지의 발현과 합의가 있</p>	<p>다음으로 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하겠음.</p> <p><u>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u></p> <p>△북남신뢰조성</p> <p>1) 북과 남은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p>

우 리 측	북 측
<p>이야 한다고 생각함.</p> <p>이는 남북 쌍방 정부당국이 해야 할 회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민족통합을 위한 불가결한 과정인 것임.</p> <p>남과 북은 그 기초위에서 다각적인 교류협력과 사회개방으로 민족적 유대를 회복해 나가고, 신뢰구축을 통해서 정치적·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해 나가며, 국제 무대에서의 상호 협력을 통해 민족자존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중 략)</p> <p>그동안 남북간에 정치·군사적 대결상태가 심화되어 온 것은 이념적 대결, 동족상잔의 전쟁 그리고 오랜 단절에서 온 불신에서 비롯된 것임.</p> <p>이같은 불신은 남북간의 정치적 대립과 군비경쟁을 더욱 가열화시켜 왔음.</p> <p>따라서 남북간의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신뢰구축을 통해 상호간에 누적된 불신을 해소하려는 노력부터 착수해야 함.</p> <p>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상대방을 의심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대결상태를 해소할 수가 없음.</p> <p>이같은 입장에 따라 나는 8개항의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에 관한 우리측의 구</p>	<p>제한한다.</p> <p>(1) 외국군대와와의 모든 합동군사연습과 군사훈련을 금지한다.</p> <p>(2) 사단급이상 규모의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을 금지한다.</p> <p>(3)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일체 군사연습을 금지한다.</p> <p>(4) 자기 령내에서 외국군대의 군사연습을 허용하지 않는다.</p> <p>(5) 군사연습을 사전에 호상 통보한다.</p> <p>2)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든다.</p> <p>(1) 비무장 지대안에 배치한 모든 군사인원들과 군사장비들을 철수한다.</p> <p>(2) 비무장지대안에 설치한 모든 군사시설물을 해체한다.</p> <p>(3) 비무장지대를 민간인들에게 개방하며 평화적목적에 리용하도록 한다.</p> <p>3) 북과 남은 우발적충돌과 그 확대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한다.</p> <p>(1) 쌍방 고위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 전화를 설치운영한다.</p> <p>(2) 군사분계선일대에서 상대측에 대한 일체 군사적도발행위를 금지</p>

우 리 측	북 측
<p>체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는 바임.</p> <p style="text-align: center;"><u>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방안</u></p> <p>(정치적 신뢰구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상대방에 대한 지명공격, 비방·중상, 전단살포 및 휴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을 일체 중지한다. 2. 민족성원들이 서로 상대방의 실상을 잘 알 수 있도록 신문, 라디오, TV 및 출판물을 상호 개방한다. 3. 상호 긴밀한 협의와 연락을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를 설치한다. <p>(군사적 신뢰구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군인사의 상호 방문 및 교류를 실시한다. 5. 군사정보를 상호 공개하고 교환한다. 6. 특정규모 이상 군부대의 이동 및 기동훈련을 사전에 통보하며 상대방을 초청·참관케 한다. <p>1991년 1월 1일을 기해 여단급 이상의 부대이동 및 기동훈련에 대해 45일 전에 상대방에 통보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하고 이것이 	<p>한다.</p> <p>△ 북남무력축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북과 남은 무력을 단계적으로 축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병력축감은 쌍방사이에 군축안이 합의된 때로부터 3~4년동안에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 <p>첫 단계에서는 쌍방이 각각 30만 명선으로, 둘째 단계에서는 다시 각각 20만명선으로 축소하며, 세 번째 단계가 끝날 때에는 쌍방이 각각 10만명 아래 수준에서 병력을 유지하도록 한다.</p> (2) 단계별 병력축감에 상응하게 군사장비들도 축소폐기한다. (3) 정규무력축감의 첫단계에서 모든 민간군사조직과 민간무력을 해체한다. 5) 북과 남은 군사장비의 질적갱신을 중지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로운 군사기술장비의 도입과 무장장비의 개발을 중지한다. (2) 외국으로부터 새로운 군사기술과 무장장비를 반입하지 않는다. 6) 북과 남은 군축정형을 호상 통보하며 검증을 실시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력축감정형을 호상 상대측에

우 리 측	북 측
<p>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부장간에 직통전화를 즉각 설치·운영한다.</p> <p>8. 비무장지대의 진정한 비무장화를 실현하며 이를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한다. 이상과 같은 방안들을 통해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을 이룩하며 무력행사와 모든 종류의 폭력행위를 포기하는 불가침 선언을 채택하여야 할 것임. 쌍방은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신뢰가 구축되고 상호 불가침을 약속한 기초 위에서 본격적인 군비감축을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임. 나는 남북간의 군비감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함.</p> <p style="text-align: center;"><u>남북간의 군비감축 추진방향</u></p> <p>1. 공격형 전력구조를 방어형의 전력구조로 전환시켜야 함. 군사력을 공격형으로 편성하고, 전개해 둔 채로 평화의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전쟁재발을 방지할 수도 없음. 따라서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공격형 전력부터 먼저 감축해 나가는 원칙을 지켜야 하며, 그래야만 기습공격 또는</p>	<p>통지한다.</p> <p>(2) 상대측 지역에 대한 호상 현지시찰을 통하여 군축합의 리행정형을 검증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남북고위급 제1차 회담)</p> <p>귀측에서 내놓은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으로 말하면 방안 표제로 놓고 보나, 내용으로 보나 의정의 요구를 충분히 따르지 못하고 있음.</p> <p>「신뢰구축」만으로는 대결을 해소할 수 없으며, 귀측의 「신뢰구축방안」은 대결해소문제를 다 포괄하고 있지도 못함.</p> <p>실례로 귀측의 「신뢰구축방안」에는 외군철수, 핵무기철폐, 북남군축과 같은 본질적이며 근본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p> <p>그러나 우리가 내놓은 정치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서는, 그러한 본질적 문제들이 모두 고려되어 있음.</p> <p>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에서도 우리가 제기한 방안은, 귀측이 10개항으로 개별화하여 제기한 내용들을 일반화하여 다 포함하고 있음.</p> <p>이것은 우리가 내놓은 방안들을 토의</p>

우 리 측	북 측
<p>전면공격에 의한 전쟁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p> <p>2. 상호 동수보유원칙을 적용하여 군사력의 상호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함. 어느 한편의 군사력이 많고 다른 한편의 군사력이 적어 균형을 상실할 경우 전쟁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게 될 것임. 따라서 군사력을 많이 보유한 측이 적게 보유한 측의 수준으로 먼저 감축하고, 상호 동등수준으로 되었을 때 동수균형감축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p> <p>3. 무기감축에 따라 병력을 감축해 나가 되, 상비전력감축에 상응하여 예비전력과 유사 군조직도 함께 감축해 나가야 함.</p> <p>4. 군축과정에서의 합의사항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현장검증과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함. 이를 위해 남북은 공동검증단과 상주 감시단을 구성·운영해야 할 것임.</p> <p>5. 쌍방 군사력의 최종 유지수준은 통일 국가의 군사력 소요를 감안하여 쌍방 협의하에 결정해야 할 것임. 이상과 같은 방향으로 남북간에 군비 감축이 진척됨에 따라 현 휴전체제를 남북간의 평화체제로 전환시키도록 노력하</p>	<p>하게 되면, 귀측이 주장하는 문제들도 다 같이 협의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p> <p>그러므로 방안토의는 우리가 내놓은 방안에 기초하되 「정치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이상 세 가지로 확정하자는 것을 제기하는 바임.</p> <p>이 세가지 방안을 토의하는 속에서 귀측이 주장하는 「신뢰구축방안」,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방안」 그리고 「군축방향」 문제도 함께 토의해 나갈 수 있을 것임.</p> <p>(중 략)</p> <p>다음으로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한 군비축감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귀측이 말하는 신뢰구축 조치 내용도 문제가 있지만 신뢰구축 단계와 군축단계를 인위적으로 분리시켜 군축을 면훈날로 미루려고 하는데 더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p> <p>진정한 의미에서 북남 사이의 신뢰를 조성하고 전쟁을 막자고 한다면, 쌍방이 서로 현 군사력 수준을 상대방을 침해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감축해야 함.</p>

우 리 측	북 측
<p>여야 할 것임.</p> <p>(중 략)</p> <p>귀측도 말한 바와 같이 남북간에 오랜 기간 긴장상태와 대결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근본원인은 바로 상호 불신에 있음.</p> <p>특히 동족상잔과 그후 휴전상태에서 지속되어 온 정치·군사적 불신의 누적은 군비경쟁을 가열화하고 대결을 더욱 고조시켜 왔음.</p> <p>남북간에 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팽배해 있고 군사적 충돌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서로가 상대방을 믿을 수 있도록 정치·군사적인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p> <p>누차 강조해 온 바와 같이 이제 남북관계는 적대관계가 아니라 동반자관계로, 귀측에서 말한 바와 같이 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는 화해 협력의 관계로 전환돼야 함.</p> <p>남북간의 정치적 신뢰구축의 기초는 서로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을 엄숙히 약속하고, 그 약속을 뒷받침하기 위한 초보적 노력부터 착실히 실천해 나가는데 있음.</p> <p>정치적 신뢰구축은 서로 상대방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지명</p>	<p>이 기본문제는 먼 장래의 일로 미루고 현 군사적 대치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데 두리안에서 이른바 군사적 신뢰의 조치만을 취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막는데 아무런 실질적인 작용도 할 수 없음.</p> <p>특히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귀측이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신뢰구축 조치의 구체적 내용인데, 실제로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것과 같은 것은 우리에게 전히 믿을 수 없는 것임.</p> <p>왜냐하면 귀측에는 미국이 하는 식대로 남조선에 배치된 핵무기에 대해서 이른바 확인도 부인도 안하는 정책이 있다고 하는데, 이에 의하면 남조선에 배치된 핵무기에 대한 정보를 귀측이 우리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함.</p> <p>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핵무기 같은 것은 감춰두고 빈껍데기에 불과한 군사정보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 무슨 신뢰요, 뭐요 하는 것은 남보기 조차 부끄러운 일로서 이것은 북남 사이의 불가침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연시키자는 것이며, 나아가서 전반적인 통합안의 채택까지도 지연시키려는 것으로 밖에 달리 생각할 수 없음.</p> <p>귀측이 유달라 7개항으로 세분해서 내</p>

우 리 측	북 측
<p>공격과 비방·중상, 전단살포와 휴전선일대의 확성기방송을 중지하는 일부부터 착수할 수 있을 것임.</p> <p>긴장과 대결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지 않은채 군비감축의 선행만을 앞세우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음.</p> <p>따라서 나는 귀측이 진정으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를 바란다면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부터 먼저 취해 나가자고 하는 우리측 주장에 흔쾌히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p> <p>쌍방은 이상과 같은 방안들을 통해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불가침을 약속하는 기초위에서 본격적인 군비감축을 실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임.</p> <p>남북군비감축에 대한 우리측의 기본입장은 남북 쌍방이 공격전략 대신 방어전략으로, 절대안보 대신 공동안보의 개념으로 전환되어야만 한다는 당위성에서 출발하고 있음.</p> <p>우리는 앞으로 동족간의 전쟁이 절대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함.</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고위급 제1차 회담)</p>	<p>놓은 제6조의 신뢰조성 조치라는 것 그 내용에도 문제가 있고, 특히 신뢰조성 단계와 군축 단계를 인위적으로 분리시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음.</p> <p>귀측이 신뢰구축의 내용으로 제기하고 있는 정보 교환이나, 훈련 참관이나 하는 것을 보면 사실상 불가침에 대한 신뢰도 담보하기 어려움.</p> <p>현존 무력을 그대로 두고 군사 정보나 교환하며 대규모 군사훈련이 강행되는 것을 방입해 두고 서로 훈련 참관이나 해서는 전쟁 위험성이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것이 아님.</p> <p>불가침이 실질적으로 담보되게 되려면 군축을 실현해야 함.</p> <p>북남 군축은 쌍방 사이의 불가침을 담보하여 주는 가장 믿음직한 방도임.</p> <p>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신뢰구축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하면서 군축을 뒤로 미루어 놓은 것은, 사실상 불가침 문제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나 같은 것임.</p> <p>진실로 신뢰가 필요하다면 현 군사력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인정하는 정도의 신뢰구축을 할 것이 아니라, 군사적 대치 수준을 상대방을 공격할 수 없을 정도로 낮추기 위한 군축을 실현하고 침</p>

우 리 측	북 측
	<p>략의 위협을 실제적으로 감소 시키는데 기분을 두어야 할 것임.</p> <p>(남북고위급 제2차 회담)</p>
	<p>힘의 우위를 확보해야만 평화를 보장 할 수 있다는 것은 평화론이 아니라 사 실상 전쟁론임. 그것은 끝없는 군비경쟁 을 빚어내고 서로의 대결과 불신을 심화 시키며 전쟁의 위협을 증대시킬 뿐임.</p> <p>오늘 세계는 이것을 바로 깨닫고 군비 경쟁의 시대로부터 군축의 시대로 넘어 가고 있음.</p> <p>그러나 남조선에서만은 아직도 「힘의 우위」를 위하여 무력이 계속 급속히 증 강되고 있음.</p> <p>군사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신형무기들 이 대대적으로 도입되고 있음.</p> <p>공식자료에 의하면 1995년까지는 이러 한 높은 속도의 군비증강정책이 계속 될 것이라고 함.</p> <p>평화에 대한 귀측의 인식과 그에 기초 하고 있는 군사정책이 이러할진대, 귀측 과 평화문제를 논의한다 하여도 아무런 긍정적인 합의를 이룩할 수 없을 것은 명백한 일임. 적어도 1995년까지는 군축 에 대하여 논의도 할 수 없게 될 것임.</p>

우 리 측	북 측
	<p>우리 나라에서 전쟁은 현실적인 위협으로 되고 있으며 사실상 오늘 세계에서 조선반도보다 전쟁의 위협이 짙은 곳은 없는 것임.</p> <p>(남북고위급 제3차 회담)</p>
<p>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쌍방 모두의 성의있는 신뢰구축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p> <p>서로 믿지 못하고 상대방을 의심하는 상태에서는 결코 대결상태를 해소할 수는 없음.</p> <p>남북간에 오랜 기간 긴장상태와 대결상태가 계속되어 온 것은 상대방을 부정하고 불신하는데 그 원인이 있음.</p> <p>동족상잔의 전쟁과 그후 휴전상태에서 누적되어 온 상호 불신은 체제대결과 군비경쟁을 더욱 가열화시켜 왔음.</p> <p>상호 불신과 적대감이 팽배해 있고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항시 존재해 있는 상황하에서는, 서로 상대방을 믿을 수 있도록 군사적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무조건 군대부터 감축해야 신뢰가 구축된다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p>	<p>지금 이 남북간에 신뢰구축이 왜 안되는가, 이게 말하자면 선생들도 자꾸 말하지만 불신에서 오는 이유다. 사실 불신에서 오는 이유가 옳다 말임.</p> <p>자, 우리는 귀측에서 우리를 디리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귀측에서는 또 우리가 내친다고 생각하고 자, 이렇게 북침, 남침 상호 상대방이 친다하는 이런 위기감, 이런 의심, 이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믿지 못하게 된다 말임.</p> <p>이때까지 45년동안 이때문에 북남 긴장상태가 계속 조성된 것임. 그렇기 때문에 근본문제는 뭘 해결해야 되는가. 이제 남침, 북침 이런 위기심도 없애고 말 그대로 신뢰를 구축하자면 우선 우리 쌍방이 싸우지 말자, 이 불가침하자는 약속을 해야 신뢰구축도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 말씀하는 교류·협력도 잘 되고 그리고 이 회담도 잘 운영될 수 있다 그것임.</p> <p>여기서 아까 저, 대통령께서 유엔연설,</p>

우 리 측	북 측
<p>이러한 입장에서 나는 서울회담에서 상호 비방증상 중지, 신문·라디오·TV·출판물 상호 교환, 서울·평양 상주연락대표부 설치 등의 정치적 신뢰구축 방안과 군인사 상호 교류, 군부대 이동 및 기동훈련 사전통보, 고위군사당국자간의 직통전화 설치, 군사정보공개 등의 군사적 신뢰구축방안을 제안했고 그 토대위에서 남북간에 군비감축을 위한 5개 방향을 제시한 바 있음.</p> <p>나는 귀측도 신뢰구축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대하여 유의하고 있음.</p> <p>신뢰구축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주체적인 것으로 되어야 하며, 서로 상대방 체제를 인정·존중하는 기초위에서 이루어져야만 함.</p> <p>그런 의미에서 나는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호응이 있기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남북고위급 제2차 회담)</p>	<p>88년도죠? 88년 유엔연설 연구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대통령께서 어떻게 말씀이 계셨는가?</p> <p>「불가침 공동선언 채택이 상호신뢰 그리고 안전담보의 틀을 마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음. 그리고 또 뭐인가 「불가침선언을 채택해야 호상신뢰가 이룩될 수 있고 호상 안전 담보를 약속할 수 있다」 그레 이거는 대통령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단 말임.</p> <p style="text-align: right;">(남북고위급 제3차 회담)</p>
<p>첫째는 평화문제임.</p> <p>남과 북은 수많은 생명을 무고하게 희생시킨 동족간의 6·25전쟁을 치르는 등 지난 46년간 적대와 대결의 관계를 지속해 왔음.</p>	

우 리 측	북 측
<p>그리고 지금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170만명의 밀집된 군사력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음.</p> <p>그러나 우리에게 분단을 안겨다 주고 엄청난 희생을 강요해 온 냉전체제는 종식되었으며, 온 인류가 평화로운 세계를 향해 전진을 시작했음.</p> <p>민족수난의 역사적 체험과 현실상황을 통해 세계의 그 어느 민족보다도 평화의 소중함을 절감하고 있는 우리 민족은, 이 전진대열에 앞장서서 동참해 나갈 때임.</p> <p>남과 북은 이제 평화에 대한 확신을 갖고 무력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완화를 도모하는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평화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야 하겠음.</p> <p>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서로 상대방 체제를 존중해야 하며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버려야 함.</p> <p>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 하거나 이른바 해방의 대상으로 삼는 한 평화는 근본적으로 싹틀 수 없음.</p> <p>그간 우리측이 상호체제를 존중하는 기초위에서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 것도 바로 여기에 연유한 것임.</p>	

우 리 측	북 측
<p>평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호 불신의 요소를 제거하고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함.</p> <p>한쪽이 다른 쪽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모적 대결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따라서 진정한 평화를 구할 수가 없는 것임.</p> <p>남북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빠른 길은 모든 분야에 걸쳐 서로 만나 대화하고 교류협력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서로의 실상을 올바르게 보고 이해를 넓히는데 있을 것임.</p> <p>이처럼 상호 체제에 대한 존중과 신뢰 구축이 평화의 출발점으로 되어야 하며, 이러한 바탕위에서만 평화의 굳건한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p> <p>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귀측이 진정으로 이같은 평화지향노력을 기울여 왔는가, 그리고 평화의 실천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 적지 않은 의문을 갖고 있음.</p> <p>귀측은 3차회담 이후 책임있는 당국간의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놓은채, 대화 상대방인 우리정부를 적대시하면서 사사건건 중상비방하는 언동을 멈추지 않고 있음.</p> <p>귀측은 또한 우리 내부의 특정단체들을 대상으로 반정부활동을 선동·고부하</p>	

우 리 측	북 측
<p>는가 하면 범법자들의 석방을 되풀이하여 요구하기도 하였음.</p> <p>(남북고위급 제4차 회담)</p>	
<p>넷째, 불가침의 이행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제반조치 문제임.</p> <p>불가침에 관한 약속이 분명히 지켜지고 또 군축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그 실효성을 보장하는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들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함.</p> <p>만일 뿌리깊은 적대감과 상호 불신으로 이어져 온 남북관계에서 선언적인 불가침만 약속하고 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불신감만 조장되어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비경쟁이 가열화될 우려마저 있는 것임.</p> <p>따라서 불가침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실천하여 군사활동에 대한 투명도를 제고시켜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호 군사적 불균형을 시정하며, 단계적인 군비감축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p> <p>이같은 견지에서 우리측은 군인사간의 상호방문이나 교류, 일정규모 이상의 부대이동이나 기동훈련에 대한 사전통보와 참관단 교환, 군사정보의 교환과 현장검</p>	<p>그런데, 나머지 신뢰구축조항이라는 것은 우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왜 그런가 하면 불가침선언 자체가 바로 신뢰조성의 출발점이고 가장 믿음직한 담보임.</p> <p>이것을 계속 신뢰구축 조항에 넣어 놓고 계속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불가침선언 채택에 복잡성과 장애를 조성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음.</p> <p>그리고 불가침 안에다가 신뢰구축조치라는 것을 넣은 것은 그 어디에도 없음. 세계적으로 전례를, 말하자면 발굴해 봐도 불가침선언에다가 신뢰구축조치를 넣은 전례는 없음. 그리고 그쪽에서 지난 시기에 내놓은 불가침선언안에도, 지난기간에는 없던 것인데 최근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데 이런 점이 있고, 다음에 그쪽에서 주장하는 신뢰구축조치 내용에도 문제가 있음.</p> <p>우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용이 비현실적임. 왜 그런가 하면, 현</p>

우 리 측	북 측
<p>중 등은 군축의 실현을 위해 쌍방간에 반드시 합의해 두어야 할 조치들이라고 생각함.</p> <p>이와 같은 군비축소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족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핵무기와 화학·생물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를 우선 제거하는 일임.</p> <p>나는 남북간에 제반 군사안보문제를 협의·해결해 나가기 위해 귀측이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국제사찰을 무조건 수용하고, 화학·생물무기를 전면 제거하는 등 우리의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또한 이같은 사항을 합의서에 명기해야 한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함.</p> <p>(남북고위급 제5차준비 제1차 대표접촉)</p>	<p>재 무력을 그대로 두고 대규모 군사훈련을 그대로 강행하면서 군사정보나 교환하고 훈련참관이나 하고 이렇다고 해서 전쟁의 위험성을 실제로 해소할 수 있는가, 없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함.</p> <p>또 현대 기술이 고도로 발전한 오늘의 조건에서 실제상 정보교환이나 훈련참관이라는 것은 한낱 상징적인 의미밖에 갖지 않음.</p> <p>그리고 또 우리가 특별히 여기에서 보면, 그쪽에서는 미국의 「NCND」정책을 따르면서 정보교환을 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우리에게 미국의 핵무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겠는가, 이 빈껍데기 밖에 없는 이런 정보는 실제 신뢰를 조성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 이런 점에서 이것은 비현실적이고, 또 신뢰조성단계하고 여기서는 군축단계하고 인위적으로 분리시켰음. 이래 가지고서 군축을 먼훗날로 미루려고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음.</p> <p>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진실로 신뢰가 필요하다고 하면 현 군사력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인정하는 정도의 이런 신뢰구축을 할 것이 아니라, 군사적 대치수준을 호상 상대방을 침략할 수 없</p>

우 리 측	북 측
	<p>을 정도로까지 낮추기 위한 군축을 실현해야 함.</p> <p>지난 시기 나라들 사이에 불가침조약들이 체결됐음.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못했는데 왜 지켜지지 못했느냐는 그 주요한 원인은, 조약을 체결하는데 맞게 침략전쟁 수행능력을 실제로 줄이기 위한 이런 군축을 따라 세우지 않았기 때문임.</p> <p>(남북고위급 제5차준비 제1차 대표접촉)</p>
<p>군축의 단계로서 소위 정치적 신뢰, 군사적 신뢰를 거쳐서 군비감축으로 간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공인돼 있는 하나의 협상 절차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군비감축으로 가는 정상적인 길로 가자는 것임.</p> <p>거기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제일 앞에서 필요한 단계가 투명성의 보장이라고, 서로가 이 투명성의 보장을 통해서 신뢰를 구축하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군축으로 들어간 역사의 예가 없음.</p> <p>또 우리가 구라파에서 보더라도 구라파의 재래무기 감축협상을 보면 바로 신뢰구축 단계에서 쌍방이 교착이 돼가지고 20년을 헛되이 소모하다가, 근자에 와</p>	<p>이 군사적 신뢰조성을 해야 되는가, 해야 됨. 군축을 해야되는가, 해야 됨. 해야 되는 데는 이 양자를 분리시켜서 군축을 먼훗날로 미루는 것이 우리는 문제가 있다, 그것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임동원 선생이 군축전문가이시니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님.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은 병행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했는데, 그런 뜻에서 우리도 동감임.</p> <p>우선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엄연히 이 신뢰구축 조치문제를 우리는 군축문제의 한 내용임. 그것을 우리가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임동원 선생이 말씀하는데 1970년초 「헬싱키」에서 열린 구라파 안전보</p>

우 리 측	북 측
<p>서 이 신뢰구축 단계가 해결됐기 때문에 지금 구라파의 재래식 균형 감군협상이 성공하고 있음.</p> <p>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달리 하시겠지만, 그러나 신뢰구축이라는 것이 절대로 군비감축을 안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군비감축으로 들어가는 현관이다 말임.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임.</p> <p>그 다음에 군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세가지의 중요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임. 하나는 귀측도 동의 하는 얘기지만, 군축을 하는데 단계적으로 하자는 것임.</p> <p>그래서 「우선 대량 살상무기를 포함한 공격작전 능력부터, 기습공격 능력부터 먼저 제거하자」 이 원칙임. 대단히 중요한 원칙 아닌가?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어떻게 군축의 목표가 뭐냐, 아주 낮은 수준으로 서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군축의 목표로 삼자 하는 것을 군축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당연한것임.</p> <p>세번째 군축을 보면 유럽에서의 군축협상이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하면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가지 이유가 군사정보를 교환하</p>	<p>장회의에서는 군축문제를 토론했음.</p> <p>그 일환으로서 결국 「헬싱키」선언에 따라서 신뢰구축 조치문제를 넣었고, 그 다음에 1980년 2차 구라파 안전회의에서 또 역시 군축회의를 열었음. 그 군축회의를 열고 최종문건에서 또 군사적 신뢰구축문제를 논의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 신뢰구축을 하고 후 군축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겠음.</p> <p>엄연히 군축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어차피 신뢰구축 조치에서 귀측이 제기 하는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거치지 않고서는 군축이 이루어 지지 않음. 이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 그것 말씀드리고, 우선 군사적인 신뢰조성문제가 논의되는 데 유감스러운 것은 무엇인가, 동북선생이나 임선생이나, 송선생이나 이 자리에 앉아서 두가지 소리를 함.</p> <p>말하자면, 임선생은 이제 처음에 서론을 때면서 신뢰구축과 군축이 병진된다, 인정했음. 그러면서 또 뒤에 말 한마디는 신뢰를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강조한다 말임.</p> <p>우리가 문제로 삼는 것은 무엇인가, 선</p>

우 리 측	북 측
<p>려고 하지 않았음.</p> <p>소련과 바르샤바조약기구측에서, 그리고 현장검증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그래서 안 되었는데 나중에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군축에 들어가게 된 것임.</p> <p>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이고 합의보기 어려웠던 문제인데, 우리는 총리급 수준에서 군사정보 교환하고 현장검증, 군축 단계에 들어가면 한다는 원칙을 먼저 채택을 하자, 해놓으면 나중에 군사분과위원회에서 일하기가 쉽고 촉진될 수 있다는 것임.</p> <p>국제관례가 지금 성공한 관례가 있고 실패한 관례가 있는데, 이 불가침과 그 군축에 관련해서 성공한 관례는 구라파의 재래식무기 감축협상이 거의 유일하게 성공하고 있는 케이스임.</p> <p>그런데 그 구라파의 재래식무기 감축협상 방식은 지금 김대표가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달라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정치적 신뢰구축조치에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로 넘어가서 군비통제로 넘어간단 말씀예요, 군비 감축으로…….</p> <p>이것은 이미 구라파에서는 하나의 정</p>	<p>신뢰, 후군축이라는 것임. 인위적으로 잘라 놓고 군축을 훗날로 미룬다는데 문제점이 있음. 그쪽에서는 마치도 병진시킨다고 하면서 선신뢰를 강조하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음.</p> <p>(남북고위급 제5차준비 제1차 대표접촉)</p> <p>셋째로, 귀측 합의서초안의 제12조에 있는 군사적신뢰구축과 군축문제임.</p> <p>쌍방의 합의서초안에 있는 군축조항은 불가침을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조항이라고 말할 수 있음.</p> <p>그러나 귀측의 합의서초안에 있는 제12조에는 이른바 군사적신뢰구축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군축은 차후의 문제로 뒤에 돌려져 있음.</p> <p>신뢰구축단계만 하여도 10여년의 세월이 걸렸던 구라파식 경험은 쌍방이 첨예한 군사적대치상태에 있고, 그 해결이 초미의 과제로 나서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원래 적합하지도 않는 것임.</p> <p>우리에게 맞지도 않는 구라파방식을 그대로 본따 우선 신뢰구축부터 하고, 그 다음에 군축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앞으로 오래동안 쌍방의 방대한 현존무력</p>

우 리 측	북 측
<p>립되어 있는 군축정형이 되어 있다고요. 지금 또 소위 신뢰구축단계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20년이라는 세월을 허송 세월 하다가, 아까 우리 임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투명성 문제, 그 현장 감시체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89년에 와서 해결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 군비감축이 이뤄지고 있는 것임. 그렇지 않은가?</p> <p>그만큼 이 신뢰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군비감축으로 들어가는 「현관」이다, 그말임. 「현관」을 통하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음.</p> <p>왜 그것을 그렇게 따로 분리해 가지고, 가령 신뢰구축을 하면 군비감축으로 안 들어가는 것이라고 꼭 꼭해를 하느냐 그말임.</p> <p>(남북고위급 제5차준비 제1차 대표접촉)</p>	<p>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증강하자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는 간절하게 제기되는 북과 남의 불가침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불가침을 논하는 의의도 없음.</p> <p>온 겨레가 '90년대안에, '95년까지는 어떻게 하나 통일을 이룩할 것을 바라고 있는데 군사적신뢰구축단계라고 하여 시간을 끌고 그 다음에 가서나 군축을 한다면, '90년대안에는 평화통일은 고사하고 그 전제로 되는 평화문제도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임.</p> <p>우리는 귀측이 특별히 구체화하여 내놓은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의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음.</p> <p>귀측의 주장대로 쌍방의 현 군사적대치수준을 그대로 둔 채 군인사의 교류, 군사훈련에 대한 통보와 참관, 군사정보의 교환과 현장검증 같은 것이나 해가지고는 불가침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없음.</p> <p>그러한 조치들은 쌍방사이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리용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군사적대결을 조장하는데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임.</p> <p>귀측은 그러한 조치들이 호상 투명도를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지만 비밀</p>

우 리 측	북 측
	<p>을 어느 분야보다도 중시하는 군사분야에서 투명도를 높인다는 것은 제한적인 것이며 본질적으로는 큰 의의가 없는 것임.</p> <p>(남북고위급 제5차 회담)</p>

다.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한반도 비핵지대화

우 리 측	북 측
<p>먼저 귀측이 긴급제안으로 내놓은 이른바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선언」에 대해 말하겠음.</p> <p>노태우대통령은 지난 9월 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과 9월 28일 부시 미국대통령의 일방적인 「해외 전술핵무기 철수선언」을 환영하는 담화를 통해 핵문제에 관한 우리측의 입장을 명백히 밝힌 바 있음.</p> <p>핵문제에 관한 우리정부의 기본입장은 첫째로, 궁극적으로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지향하고</p> <p>둘째로, 핵의 이용은 평화적 목적에 국한하며</p> <p>셋째로, 핵확산금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핵안전조치협정을 준수하고 모든 보유 핵시설과 핵물질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사찰을 받아 들인다는 것임.</p> <p>따라서 한반도 핵문제해결은 귀측이 비핵지대를 거론하기에 앞서 먼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사찰을 전면 수용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함.</p> <p>이와 함께 신뢰관계가 구축되면 그 바탕위에서 제재식 전력의 감축뿐만 아니라 한반도 핵문제에 대해서도 남북한간</p>	<p>우리가 여기에서 최대의 급선부라고 간주하는 것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실현하는 것임.</p> <p>조선반도를 비핵지대화할데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에 와서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 아님.</p> <p>우리는 일찍이 1956년에 소집되었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차회의에서 원자무기도입을 반대하는 공식립장을 밝힌이래, 핵무기반입과 핵기지화를 반대하여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1986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날로 증대되는 핵전쟁위협에 대한 깊은 우려로부터 출발하여, 이를 막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로서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를 창설할데 대한 역사적인 제안을 내놓았음.</p> <p>그러나 5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의 이러한 인내성있는 노력에 대하여 귀측은 오늘날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실무대표접촉에서 내놓은 최근의 제의와 관련해서도 아직 이렇다 할 태도를 표시하지 않고 있음.</p>

우 리 측	북 측
<p>의 협의를 추진하자는 것임.</p> <p>(남북고위급 제4차 회담)</p> <p>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이같은 우리측의 성의있는 노력에 대해 귀측은 오직 「비핵지대화 공동선언」 주장만으로 일관하면서 핵위협 제거 운운을 이유로 미국과 협상하겠다는 비현실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p> <p>나는 귀측의 「비핵지대화」 주장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측의 입장을 밝혀두고자 함.</p> <p>우선 귀측 제안 제1조는 우리측 「비핵화 공동선언」 제1항 『남과 북은 핵 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하며, 핵무기를 제조,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에 모두 포괄되어 있음.</p> <p>귀측 제안 제2조는 지난 9월 27일 부시 미국대통령의 해외 전술핵무기 전면 철수 선언에서 전함, 잠수함, 항공기 적재 핵무기 등을 모두 철수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이미 근원적으로 해소된 문제임.</p> <p>다시 말하면 한반도 지역을 드나드는 미국의 함정과 항공기들에는 핵이 적재되지 않게 되었으며, 따라서 귀측이 핵적</p>	<p>최근 소련과 미국의 전술핵무기 철폐측 감제안이 나왔고 쌍방이 다같이 여기에 환영의 뜻을 표시한 지금에 와서 우리들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문제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하며, 이 문제의 해결을 지연시키지 말아야 함.</p> <p>우리는 이러한 견지에서 북과 남이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본 회담에 다음과 같은 선언초안을 긴급제안으로 내놓는 바임.</p> <p><u>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초안)</u></p> <p>북과 남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우리 나라의 평화와 아세아와 세계의 안전에 이바지하며 나라의 평화통일에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p> <p>제1조 북과 남은 핵무기를 시험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으며 사용하지 않는다.</p> <p>제2조 북과 남은 조선반도와 그 령내에서 핵무기의 배비를 금지하며 핵무기를 적재했거나 적재했을 수 있는 비행기와 함선들의 령공 또는 령해 통과, 착륙 및 기항을 금지한다.</p>

우 리 측	북 측
<p>제 비행기·함선의 통과, 착륙, 기항 문제를 거론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임.</p> <p>귀측 제안 제3조 중 핵우산 문제는 지난 1968년 핵무기비확산조약 체결과정에서 핵보유국이 동 조약에 가입한 핵비보유국에게 제공키로 한 합법적인 국제안전보장장치의 일환인 동시에, 1968년 6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255호를 통해서도 그 근거가 확립된 것임.</p> <p>귀측은 동 제안 제4조에서 『핵전쟁을 가상한 일체의 군사연습을 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측은 핵무기와 핵장비를 동원하는 군사연습을 실시한 사례가 없으며 앞으로도 실시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히 듭.</p> <p>귀측 제안 제5조와 제6조 중 미국의 핵무기 철수문제는 앞서 말한 우리측의 비핵화 정책 및 핵부재 선언으로 이미 그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졌고, 핵기지 철폐와 확인문제는 귀측이 핵무기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한 시범사찰에 동의해 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며,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우리와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것으로서 귀측이 관여할 문제가 아닌 것임.</p> <p>귀측 제안 제7조 대외적 조치문제는 1978년, 1982년 유엔 군축 특별총회에서</p>	<p>제3조 북과 남은 자기 지역에 핵무기의 전개, 저장을 허용하거나 핵우산의 제공을 받는 그 어떤 협약도 다른 나라와 체결하지 않는다.</p> <p>제4조 북과 남은 조선반도와 그 령내에서 핵무기와 핵장비가 동원되거나 핵전쟁을 가상한 일체 군사연습을 하지 않는다.</p> <p>제5조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남쪽에 있는 미국의 핵무기와 미군을 철수시키고 핵기지를 철폐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p> <p>제6조 북과 남은 조선반도의 남쪽에 있는 미국 핵무기의 전면적이고도 완전한 철수와 핵기지의 철폐를 공동으로 확인하고 국제조약상 요구에 기초한 핵동시사찰의무를 리행하며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을 내외에 공포한다.</p> <p>제7조 북과 남은 미국과 조선반도주변의 핵무기소유국들이 우리 나라에 대한 핵위협을 하지 않으며 조선반도비핵지대의 지위를 존중할데 대한 대외적조치를 취한다.</p> <p>제8조 북과 남은 이 선언의 리행을 위한 공동기구를 선언발표한 후 빠른 시일 안에 내온다.</p>

우 리 측	북 측
<p>비핵국가에 대한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이 공개 천명된 바 있기 때문에 귀측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핵위협을 가하려 하지 않는다면 주변 핵보유국의 핵우산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임.</p> <p>이상에서 나는 귀측의 「비핵지대화 공동선언」안의 비현실성과 무의미함을 각 조항별로 설명드렸음.</p> <p>이로써 귀측의 「비핵지대화 공동선언」안은 어느 조항도 핵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게 되었음.</p> <p>(핵문제 협의를 위한 제1차 대표접촉)</p>	<p>제9조 이 선언은 북과 남이 각기 발표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 <p>(남북고위급 제4차 회담)</p>
<p>나는 이 자리에서 귀측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무기를 개발할 목적으로 핵물질을 생산하며 핵재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있다고 지탄받고 있는 사실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p> <p>핵무기의 개발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는 귀측도 그것이 온 겨레와 우리 자손들의 운명에 관한 문제이고 민족의 존망에 관한 문제이며,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관련된 문제라고 말함으로써, 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p>	<p>남조선에 배치된 핵무기는 그 주인이 오래동안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채 흑막속에 가리워져 있었음. 그러나 그것이 이제는 그 주인에 의하여 엄연한 사실로 공개되고 내외인민들 앞에 확인되게 되었음.</p> <p>인정하는가 안하는가에 따라 사실이 달라질것은 없지만 남조선에 미국핵무기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된 오늘 우리 겨레가 받게 되는 충격은 자못 큰 것이며 그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님. 동족을 멸살시킬 핵무기가 그것도 주권자인</p>

우 리 측	북 측
<p>동족상잔의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40여년 동안 긴장된 상황속에서 살아온 우리들로서는 더이상 평화를 위협하는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더욱이 순식간에 온 강토를 파괴하고 온 거리를 파멸로 이끌 가공할 대량살상무기를 이 땅에 존재케 해서 는 결코 안되겠음.</p> <p>그런 뜻에서 우리측은 지난 제5차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귀측이 핵무기비확산 조약에 관련된 안전조치협정을 하루속히 체결하고 모든 핵관련 시설과 물질에 대한 전면적인 국제사찰을 받을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핵무기를 제조,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한반도의 비핵화 등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을 긴급 제안하였음.</p> <p>또한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과는 별도로 이에 추가하여 남과 북이 상대측 지역의 모든 군사시설과 민간시설 그리고 물질과 장소를 동시 상호사찰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남북 쌍방간에 핵재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을 것에 관한 합의만 이루어지면 서로 상대방이 선정하는 자기측 지역의 군사시설과 민간 시설을 비핵화의 시범적 조치로서 동시 상호사찰할 것을 제의한 바 있음.</p>	<p>남조선인민들 자신도 모르게 남조선에 반입, 배치되었다는 사실은 민족앞에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할 역사적인 과오라고 아니할 수 없음.</p> <p>동족을 반대하는 외국군대를 끌어들이다 수십년동안이나 장기주둔시키고 있는 것도 가슴아픈 일인데 동족을 반대하여 외국의 핵무기까지 반입, 배치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동쪽끼리 서로 총포를 겨누고 맞서고 있는 것도 안타깝고 우려할만한 일인데 동족을 반대하여 핵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니 이것이 어찌 개탄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p> <p>핵무기가 세상에 나온이래 수많은 나라들에게 동족내부의 분쟁과 무력충돌이 있었으나 자기 혈육을 반대하여 제 나라 땅에 외국에서 핵무기를 끌어들이는 사실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도 없었음.</p> <p>핵전쟁은 민족의 생사존망과 직결되었음.</p> <p>사상과 제도가 아무리 소중하다 하여도 그것은 사람의 운명, 민족의 운명과 바꿀 수 없는 것이며 사람과 민족을 떠나서는 생각할수도 없는 것임.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크지 않은 땅에서 핵전쟁이 터져 민족이 말살된다면 과연 그 사상과</p>

우 리 측	북 측
<p>우리측의 이러한 제의들은 이 땅에서 핵무기와 핵전쟁의 위험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참뜻이 있음.</p> <p>우리측은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지향하며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음.</p> <p>(핵문제 협의를 위한 제1차 대표접촉)</p> <p>핵무기의 개발은 우리의 온 강토를 일시에 파괴시키고 온 겨레를 파멸로 이끌 가공할 위협이 된다는 것은 귀측도 이미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p> <p>어제까지 남북사이에는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해 정치, 군사, 교류 협력 등 3개 분과위원회가 잇달아 개최된 바 있음.</p> <p>그러나 민족생존과 세계평화가 걸려있는 핵문제의 해결없이 남북간의 평화는 물론 교류·협력도 기대할 수 없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p> <p>따라서 핵문제 해결이야말로 남북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초미의 최우선 해결과제임.</p> <p>귀측은 우리측 지역에 핵무기와 핵기지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고 우리측은 귀</p>	<p>제도라는 것이 누구에게 필요하겠는가.</p> <p>서로 다른 나라들과 민족들사이에서도 쓰기를 꺼려하는 핵무기를 것처럼 많이 끌어들이 민족을 파멸의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것은 어떤 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p> <p>핵대국사이에 핵무기의 철폐와 축감이 추진되고 다른 나라들에 배치된 핵무기들도 철수되고 있는 오늘 남조선에서도 지체없이 그리고 조건없이 핵무기를 완전히 철거시켜야 함.</p> <p>바로 여기에 우리 민족을 핵전쟁의 재난적인 위협에서 구원하는 길이 있고 귀측이 민족앞에 범한 역사적 과오와 책임을 벗는 길이 있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음.</p> <p>둘째로, 외국의 핵무기에 겨레의 운명을 내맡기고 있는 사태의 엄중성을 깨닫고 민족의 자주성과 존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임.</p> <p>북이든 남이든 조선땅에 외국의 핵무기를 끌어들이는 것은 민족의 운명을 남에게 내맡기는 것이나 같음. 더욱이 그러한 외국핵무기들이 이 나라의 주인들도 모르게 제멋대로 반입되고 배치된다고 할 때 우리 민족의 운명은 한갓 외세의 농락물로 밖에 될 수 없는 것임.</p>

우 리 측	북 측
<p>측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음.</p> <p>귀측은 지금까지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해 온 만큼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라 조속히 내외의 의혹을 풀어 주어야 할 것임.</p> <p>그러한 전지에서 우리측은 제5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시범사찰을 긴급제안한 바 있으며 지금도 시범사찰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귀측이 인식하기를 바라고 있음.</p> <p>이제 우리는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 앞에 놓여진 막중한 임무를 절감하여 더 이상 상대방을 불신하는 말씨름에만 매달려서는 안될 것이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찰규정을 채택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p> <p>그리하여 귀측이 의심하는 우리측 지역의 모든 핵관련 대상을 그리고 우리측이 의심하는 귀측지역의 모든 핵관련 대상을 서로 사찰하도록 해야 할 것임.</p> <p>우리측 지역에 핵무기가 없다는 것은 이미 세상에 잘 알려진 바와 같음.</p> <p>지난해 12월 18일 노태우대통령은 우리측 지역의 어디에도 단 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핵무기 부재를 선언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측은 남</p>	<p>전술핵무기의 철폐가 일정에 올라있는 오늘날에 와서는 그 무슨 「전략핵무기에 의한 핵우산」을 쓸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술핵무기의 우산을 쓰는 전략핵무기의 우산을 쓰는 사태가 달라질 것은 없음.</p> <p>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의지가 없는 사람은 예측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사람으로서 남에게 얽매어 사는 것보다 더한 치욕은 없음. 남조선땅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는 조선사람으로서 누구도 허용할 수 없는 민족최대의 치욕을 상징하고 있음.</p> <p>이제 이 치욕을 벗어던지고 북과 남이 함께 민족의 존엄과 자주의 길을 열어 나갈 때가 됐음.</p> <p>동서대결의 틈바구니에서 주체를 상실한 채 어느 한편에 붙어 살아온 구시대의 습성, 자기 운명을 남에게 맡기고 남의 이른바 「보호」밑에 살아온 낡은 생존 방식과 대담하게 결별하여야 하며 떳떳이 살아가야 함.</p> <p>평화에로의 길, 북과 남이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같은 민족으로서 평화를 누리며 화목하게 사는 일은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함.</p>

우 리 측	북 측
<p>북이 서로 핵무기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속히 상호사찰을 하자고 주장하여 왔음.</p> <p>우리측은 이미 핵무기를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하지 않으며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음. 또한 핵시설과 핵물질을 군사용 목적이 아닌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현재 국제원자력기구가 엄중한 사찰을 실시하고 있음.</p> <p>그러나 이것 역시 귀측이 군사적 목적에 전용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한다면 사찰을 통해 확인하면 될 것임.</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핵통위 제1차 회담)</p>	<p>우리들이 이 길을 트는가 못트는가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자신의 성실한 평화노력 여하에 달려있음.</p> <p>셋째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의 소재를 바로 보고 이를 가시기 위한 옳은 입장을 가지는 것임.</p> <p>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조선반도에는 핵무기가 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 있음.</p> <p>북과 남에 핵위협을 줄 근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남조선에 배치된 1,000여개의 핵무기는 상시적으로 북을 위협하고 있음.</p> <p>남조선에는 사상최대규모의 핵전쟁연습인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이 해마다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 당국자들은 종종 「핵무기의 사용도 불사한다」는 말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p> <p>이러한 실태를 놓고 볼 때 조선반도에서 비핵지대를 실현하고 핵전쟁위험을 막기 위하여 무엇이 해결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일임.</p> <p>이 엄연한 사실에는 눈을 감은채 오히려 있지도 않는 우리의 「핵개발」을 거들여 「핵사찰」 운운하는 것도 언어도단임.</p> <p>더욱이 다른 사람도 아닌 남조선에 핵</p>

우 리 측	북 측
	<p>무기를 끌어들이는 장본인들이 적반하장격으로 「북에 대한 핵사찰」을 떠드는데 대하여, 지어 「강제사찰」까지 운운하고 있는데 대하여 세상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고 있음.</p> <p>이것은 내외인민들의 이목을 판데로 돌리며 조선반도정세를 고의적으로 격화시키는 엄중한 도발행위로 될뿐임.</p> <p>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는 남조선에 있는 미국핵무기를 완전히 철거하는 것으로 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바로 이것이 비핵지대화의 주되는 내용으로 되어야 함.</p> <p style="text-align: right;">(남북고위급 제4차 회담)</p>
<p>오늘날 한반도의 핵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귀측의 주장처럼 주한미군의 핵무기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귀측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리 온 국민과 전 세계의 의혹 때문임.</p> <p>한반도의 핵문제가 우리측 지역에서 비롯되었다는 귀측 주장을 수증하는 나라나 국제기구도 없을 것임.</p> <p>귀측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오직 귀측의 핵사찰 지연 및 핵무기 개발 의혹만을 문제삼고 있음은 귀</p>	<p>우리 나라에서 핵전쟁의 근본 요인으로 되는 것은 남조선에 미국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으며 핵전쟁 연습이 강행되고 있는데 있는 것임.</p> <p>남조선에 배비된 핵무기는 우리 민족의 생존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으며 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안전에도 커다란 위협을 조성하고 있음.</p> <p>그러므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조선에 배비된 미국의 핵무기를 철거시켜야 함.</p>

우 리 측	북 측
<p>측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임.</p> <p>귀측은 1985년 12월 핵무기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하고서도 18개월이내에 국제원자력기구와 핵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는 조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귀측의 핵무기개발 의혹을 야기했던 것임.</p> <p>이와 때를 같이하여 귀측 지역 여러 곳에 핵무기개발 관련 시설과 구조물들이 건설되고 있는 현상이 위성촬영 사진을 비롯한 각종 과학장비와 확실한 정보 출처로부터 속속 확인되고 있음.</p> <p>이와 같이 한반도 핵문제 발생은 귀측이 국제조약상의 의무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의무를 무시하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강한 의혹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임.</p> <p>그런데도 귀측이 귀측에 대한 내외의 의혹을 풀 수 있는 사찰실시는 미루면서, 있지도 않은 주한미군 핵무기와 핵기지에 대한 사찰만을 요구하는 것은 한반도 핵문제 발생 근원을 호도하여 귀측 지역에 대한 우리측의 사찰요구를 거부하기 위한 구실을 찾으려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함.</p> <p>우리 국민과 세계가 귀측에 대해 품고 있는 강한 의심은 귀측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지 않으며,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말로만 한다고 해서 해소될 수는 결코 없음.</p>	<p>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남조선에 핵무기가 반입된 첫날부터 미국의 핵기지화 정책을 반대하고 비법적으로 끌어들이는 핵무기를 철거시키며 조선반도를 비핵지대화 만들기 위해 서종일관 노력해 왔음.</p> <p>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지난 시기 우리가 제기한 수많은 비핵 평화 발의들과 제안들에 그대로 반영돼 있으며 이에 회답에서 내놓은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에 관한 선언 초안에 전면적으로 집대성 되어 있음.</p> <p>귀측이 말하는 핵사찰 문제에 대해서 말한다면 원래 이 문제는 우리와 국제기구와의 관계 문제이지 귀측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나설 문제가 아님.</p> <p>더욱이 미국의 핵무기를 끌어들이는 귀측으로서 남조선에 있는 핵무기에 대해서는 아닌보살하고 무슨 북에 대한 핵사찰을 운운하는 것은 더욱 허용될 수 없는 일임.</p> <p>우리는 귀측이 우리에게 대한 핵사찰을 거론하기에 앞서 마땅히 미국 핵무기의 배비와 반입을 묵인, 비호, 두둔해 주기까지 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민족앞에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인정함.</p>

우 리 측	북 측
<p>귀측이 처해 있는 현재의 국제적 상황, 귀측이 훈련양성한 많은 핵기술자, 평산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다량의 양질 천연 우라늄 그리고 귀측 전역에서 최근 속속 밝혀지고 있는 각종 핵관련 시설 및 구조물 등은 귀측이 이미 핵무기를 개발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음.</p> <p>귀측은 5년 전부터 구소련의 「두브나」 핵연구소에 많은 핵과학자를 파견 훈련시켜 왔고 그들의 고도의 기술수준은 국제원자력기구의 「INIS」라는 정보체계에 도 수록되어 알려진 바 있음.</p> <p>또한 귀측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5MW급의 연구용 원자로를 건설하고 1987년 2월부터 가동하면서도 아직까지 사찰을 받지 않는 가운데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사용후 핵연료를 다량 생산·저장해 오고 있음.</p> <p>그리고 귀측은 840헥타(250만평)에 달하는 영변지역을 원자력 연구단지화하여 많은 핵시설물을 건설해 놓고 유례없이 방공망을 강화하고 있으며 평성, 평산, 박천, 청진 등 많은 곳에 핵관련 시설과 구조물을 갖고 있음.</p>	<p>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은 그러한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도 않으며 자신이 지닌 책임과 임무를 모두 회피하였음.</p> <p>물건대 남조선에 미국의 방대한 핵무기를 그대로 두고 핵무기를 적제한 비행기 함정 등이 제집처럼 드나드는 것을 방임한 채 어떻게 아무런 위협도 될 수 없는 상대방에 대해서 시야비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임.</p> <p>남조선에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사실로서 최근 미국 당국자들 자신도 그에 대해 시인하는데 이르고 있음.</p> <p>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귀 당국만은 남조선의 핵무기 존재 여부에 대하여 시종 침묵을 지키고 있으며 미국이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하거나 지어는 자신들도 실제로 핵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있음.</p> <p>귀측이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이처럼 위협천만한 핵무기가 제나라땅에 배치되어 있는 것도 모르고 앉아 있다면 민족 앞에 이처럼 무책임한 처사가 없을 것이며 우리로서는 도대체 남쪽 절반땅의 실제적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의문까지 생기지 않을 수 없음.</p> <p style="text-align: right;">(남북고위급 제4차 회담)</p>

우 리 측	북 측
<p>최근에 공개된 구소련의 국가보안위원회(KGB)의 보고서에 따르면 귀측은 이미 2년전에 핵폭탄제조 필수과정인 내폭 실험을 마치고 기폭장치 개발을 완료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p> <p>귀측은 핵탄제조용 핵물질인 플루토늄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비밀리에 재처리 시험시설을 건설 가동해 왔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최근 국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영변 소재 핵재처리 시설도 그 완공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p> <p>더욱이 이토록 귀측의 높은 핵무기개발 가능성에 대한 세상사람들의 의심을 한층 더 증폭시킨 결정적 요인은 귀측이 핵사찰을 기피해 온 바로 그 태도 때문임.</p> <p>귀측이 정말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면 핵사찰을 왜 그토록 기피하고 있는가?</p> <p>이와 같은 온 세계의 의혹에 대해 있지도 않은 주한미군의 핵무기와 핵기지 주장으로 이를 호도하려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같은 것으로 귀측은 더이상 한반도 핵문제의 근본을 왜곡하지 말아야 함.</p>	

우 리 측	북 측
<p>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핵사찰 요구에 대해 오히려 「핵소동」이니 「분주탕」 운운하는 귀측의 적반하장적 주장은 핵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든가 아니면 핵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음.</p> <p>나는 한반도 핵문제 해결이 남북한 상호사찰 실시와 귀측의 국제핵사찰 수용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귀측의 진지한 자세를 촉구하는 바임.</p> <p>(남북핵통위 제2차 회담)</p>	

2. 불가침 및 평화협정 문제

가. 불가침

우 리 측	북 측
<p>지난 7월 20일 귀측 최고인민회의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가 그대로 인용해보면, 『남북당국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할 필요성과 절박성을 인정』한 데 대해서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음.</p> <p>따라서 우리는 남북국회회담에서 남북 불가침에 관한 필요성과 의의를 확인하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들을 쌍방 당국에 맡겨 협정을 체결토록 촉구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들의 할 일이라고 생각함.</p> <p>이것은 귀측의 의향에도 맞고 쌍방 국회의 권능과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함.</p> <p>불가침협정체결 문제를 포함하여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현안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조속히 개최되어야 할 것임.</p> <p>남북의 정상이 아무런 전제나 조건없이 서로 만나 현안문제와 민족의 장래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한다면 남북관계</p>	<p>불가침에 대해서는 저희들 욕심이 그래요. 그전에는 불가침에 대해서 아예 완고하게 말씀이 계셨는데, 권고 이것도 역시 이것도 물론 그전에 얘기한 국회의 원칙적인 테두리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을 벗어나지 못했음. 그러나 어쨌든지 불가침문제를 여기서 논의를 하자는 그 의도만은 저희들이 평가함. 좋다고 생각함.</p> <p>근데 이왕 할 바에야 어째서 우리들이 이 절박한 문제를 권고밖에 못하는가? 우리가 과연 발이 묶여서 못나가는가?</p> <p style="text-align: right;">(남북국회 제1차 준비접촉)</p>

우 리 측	북 측
<p>개선과 평화통일의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임.</p> <p>(남북국회 제1차 준비접촉)</p>	
<p>그 의제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신축적인 태도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단장께서 말씀이 계시겠지만, 이 불가침문제에 대해서 '85년도에도 그랬고, 여러분이 보낸 7월 20일의 편지에서도 나와 있고, 여기서 공동선언에 관한 말씀을 했음.</p> <p>불가침,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함.</p> <p>우리는 전쟁의 참화를 겪었던 사람으로서 더욱더 이 불가침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음.</p> <p>그러나 우리는 1974년도에 이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자는, 협정을 체결하자는 안을 내놓고 있음. 14년이 흘렀음. 수십 번 우리는 이 불가침협정을 체결하자고 촉구해 왔고 기회있을 때마다 요구해 왔음.</p> <p>특히 얼마 안되는 지난 6월 10일 UN 군축특별총회에서 또 한번 우리 외무부장관이 제시한 바 있음.</p>	<p>과거에 '74년도 불가침협정에 대해서 제기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소』하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음. '74년 그리고 '77년, '87년 작년에 제기한 것도 있음.</p> <p>그러나 그게 다 뭐냐하면 '73년에 우리가 정치회담 조절위원회 2차회담에서 '73년 3월 15일에 서울에서 할 때 5개항목의 평화제안을 내놓았음. 그 내용인즉, 군비경쟁 종식하자, 그리고 군비를 축소하자, 가능하면 10만이하까지 하자, 그리고 외국군대 철거시키자, 그리고 외부로부터 무기를 반입하지 말자, 이런걸 내용으로 해서 평화협정을 맺자, 이런 5개항목을 제안을 했음. 그쪽에서 이걸 거부했음.</p> <p>토의 못하겠다, 불신이 있어가지고 못하겠다.....</p> <p>우리는 그랬음. 불신을 없애려고 이렇게 하자는것 아니냐 논쟁이 있었는데, 그</p>

우 리 측	북 측
<p>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책임있는 당국자끼리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하시고, 국회쪽에서 이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대해서 '85년도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은 심정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애기임.</p> <p>또 불가침문제라는 것은 말로써 하는 선언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음.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협정이나 조약,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루어가야 함. 그것이 보다 실질적이고 중요한 문제 아닌가?</p> <p>특히 여러분이 표현하시는 것처럼 대결과 불신이 있다고 하면, 더욱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도적 방법을 택해야할 것 아니냐, 우리는 전쟁방지를 위해서 다시 재침을 없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장치가 필요함. 하자는 것임.</p> <p>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모여서 책임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 정부 당국에 권고합시다.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협정을 맺어서 이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라고 하는 권고를 하는 문제를, 우리 정치인들이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의제로 삼자는 것임.</p> <p>귀측 '85년도 전선생의 연설문을 이번 에 제가 보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p>	<p>결 가지고 우린 계속 주장했는데 그 다음에 거기 우리안에 대처해서 나온게 바로 불가침조약인데, 협정인데 그때는 벌써 사실상 대화가 결렬되었을 때 우리에게 정식으로 제기한게 아니고 불가침협정이란 그쪽에서 공중에 대고 제기한 것임. 내용인즉, 보도를 통해서 나온걸 보면 다르게 아니고 그저 호상 무력공격하지 않는다. 이게 거의 전부인 것 같음.</p> <p>그후에 조금 더 보충해 나왔다는게 뭐 거기에 혹시 정전협정을 준수한다든가,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라든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 정도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런게 아닌가.....</p> <p>만일 그런거라면 그래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 평화를 담보못함. 이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2차대전 전에 그런 조약 맺은 나라도 있었음.</p> <p>싸우지 말자하고 결국은 역사는 거기 대해 증명했음.</p> <p>그것은 인류에 대한 기만이었음. 그것은 호상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여유를 얻기 위해서 만든 책략이었음. 그런 유사한 것으로 저희들은 인정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거부한 게지 진짜 평화를 담보하는 것이면야 일싸 대환영함.</p>

우 리 측	북 측
<p>불가침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이것을 또 쌍방당국에 위임하여 다시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했음. 이것 얼마나 번거롭고 복잡한가? 직접 책임있는 당국간에 맺게 하자, 정부당국에서 불가침조약 못하겠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국회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가 감.</p> <p>지금 우리 정부쪽에서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그런데 책임있는 당국자간의 요구는 묵살하면서 왜 번거로운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못하겠음.</p> <p>따라서 우리가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인들이 모여서 쌍방당국에 불가침조약을 맺도록 권고하는 문제를 다루자, 이것이 가장 온당한 의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음.</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국회 제1차 준비접촉)</p> <p>제가 말씀드린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지금 옛날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할 이야기가 서로 많을 것임. 굳이 난 그런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1974년도부터</p>	<p>그런 논리라면 우리가 묻겠음.</p> <p>우리가 '84년에 이제 말한 조절위원회에서 제기한 것은 받아먹지 않았고, 진짜로 평화를 담보하는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며는 왜 '84년 1월에 3자회담 제기했는데 그것은 왜 거부했는가?</p> <p>또 '85년 국회회담에서 불가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건 지연시켜서 끝내 유산시키고 말았으며, '86년에 또 군사당국자회담 제기했는데 왜 거부했으며, '86년 또 우리가 비핵지대평화조약 건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왜 거부했으며, '87년에 우리가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 제기하고 거기서 정치적 대결과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자고 했는데 왜 이걸 거부했는가?</p> <p>금년에는 연석회의를 열고 남북사이에서 아주 첨예한 4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그중에는 울림퓌문제도 있고, 대규모군사훈련 중지문제도 있고, 그리고 비방·중상 중지할데 대한 문제도 있고 다국적군축회담을 마련할데 대한 문제도 있었는데, 다 평화를 담보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안이 있어요. 왜 이런건 거부하고 평화협정에 대해서 말하는가 알고 싶음.</p>

우 리 측	북 측
	<p>라고 확신하고 있음.</p> <p>(남북고위급 제1차 회담)</p>
<p>그래 무슨 근본적으로 불가침안을 갖다가 우린 모르겠다, 반대한다 이런 말을 내가 한 일이 없고, 그건 그것대로 하여간 귀측의 그러한 의견을, 우리도 지금 불가침안을 갖다가 과거에 주장을 물론 해왔고 그러나 이 불가침안 자체라는게 귀측에서 말한 그것만이 아니라, 좀 더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중요한 이러한 국가안보에 관한 우리 국무회의라든가, 관계 여야 무슨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의 협조라든가, 뭐 여러가지 협조의 절차를 밟지 않고서 지금 여기에 와서 우리가 이것을 합의해가지고 서명한다 하는 것은, 이 본회담에 우리측 대표단이 할 수 있는 권한외의 것임.</p> <p>그걸 어제도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그래 그 안 자체를 뭐 우리 이거 반대한다, 동의할 수 없다 그게 아니라 제시한 안 그 자체를 우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에 기본합의서라는 그런 안을 냈는데, 그 이름을 또 바꿔가지고 귀측에서 말한 불가침선언 그 내용을 또</p>	<p><u>북남불가침에 관한 선언(초안)</u></p> <p>북과 남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를 가시고 전쟁을 방지하며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일치한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7·4공동성명에 밝혀진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철저히 준수하며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을 데 대하여 확약하면서 다음과 같이 엄숙히 선언한다.</p> <p>제1조 북과 남은 하나의 민족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상대방을 침해하지 않는다.</p> <p>제2조 북과 남은 있을 수 있는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p> <p>제3조 북과 남사이의 불가침의 경계선은 1953년 7월 27일부 조선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으로 한다.</p>

우 리 측	북 측
<p>거기에 집어 넣어서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이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더 검토를 해서 불가침선언이라든가 조약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이걸 해 나가도록 해야지 아 이거 어제 내가지고 이거 동의해라, 서명하자 이것은 우리가 본회담에서 그렇게 할 성격이 아님.</p> <p>(남북고위급 제2차 회담)</p>	<p>제4조 북과 남은 호상 불가침에 관한 약정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하여 군비경쟁을 중지하며 무력을 단계적으로 축감한다.</p> <p>제5조 북과 남은 당면하여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설치 운영한다.</p> <p>제6조 이 불가침선언은 북과 남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p> <p>제7조 이 선언은 북과 남이 각각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통고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어느 일방이 폐기를 통고하지 않는 한 조국통일이 실현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p> <p>우리는 이 선언에 귀측이 「기본합의서」에서 내놓은 중요한 원칙적 문제들이 담겨 있고 귀측도 「불가침협정」을 체결하자고 하며, 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도 설치운영하자고 한 것만큼 우리가 내놓은 선언초안을 공동의 기초로, 출발점으로 삼고 이를 채택하는데 별로 다른 의견이 없으리라고 생각함.</p> <p>(남북고위급 제2차 회담)</p>

우 리 측	북 측
<p>귀측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남북은 동족상잔의 6·25를 치른후 근 20년만인 지난 '72년에 「7·4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쌍방은 남북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증상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제2항) 하였음.</p> <p>이것은 사실상 남북간의 불가침을 약속한 것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남북간의 합의임.</p> <p>그러나 그 뒤의 남북관계가 여전히 크고 작은 충돌과 파괴·전복행위들로 얼룩져 온 것을 우리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임.</p> <p>이 모든 사실은 남북간이 서로 신뢰를 구축하고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는 근본토대를 마련함이 없이는 교류협력문제도, 불가침문제도 그 실효성이 보장될 수 없음을 우리가 웅변으로 실증해 주고 있음.</p> <p>「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본합의서」에 따라서 먼저 채택하는 기초위에서 교류협력문제와 불가침문제를 협의·해결해야 하며, 「관계개선」의 의지도 없는 상태에</p>	<p>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것은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에서 획기적인 조치로 될 것이며, 우리 회담사업을 위해서도 가장 무게있고 담보있는 기초로 된다고 생각함.</p> <p>우리는 귀측이 우리의 이런 제안을 반대할 아무런 리유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함.</p> <p>그것은 왜냐하면 귀측도 평화를 바라며 전쟁을 막아야 한다고 하고 또 지난 1차회담때에는 『상호간에 야기되는 의견대립과 분쟁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한다』고까지 공식 표명한 바 있기 때문임.</p> <p>특히 귀측 최고당국자가 멀지도 않은 올해 8월 15일에 『불가침협정의 체결문제를 남북의 책임있는 당국자들이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말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에도, 귀측이 우리의 제안에 대하여 거부할 까닭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함.</p> <p>이번 회담에서 불가침선언에 합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조선반도의 평화문제에 대한 태도문제이며, 진정으로 본 회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고</p>

우 리 측	북 측
<p>서 우리가 「불가침」 문제를 먼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기본입장은 분명함.</p> <p>남북교류·협력문제와 불가침문제의 협의·해결을 결코 외면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 문제를 순조롭게 협의·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일단 합의된 사항에 대해 그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토대부터 마련하자는 것임.</p> <p>우리 대통령께서 '88.10 유엔총회연설을 통해 남북간의 기본적인 상호신뢰와 안전보장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불가침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 것이나, 지난 9월 1차 남북고위급회담 기초연설에서 『남북간의 다각적 교류협력 실현과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한 바탕에서 상호 불가침 선언을 채택하자』고 강조한 것은 다같이 남북간의 기본관계 설정과 신뢰구축을 전제로 불가침문제에 대한 협의용의를 천명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임.</p> <p>(남북고위급 제3차 준비 제3차 대표접촉)</p>	<p>생각함.</p> <p>우리는 이처럼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의의를 가지는 불가침선언 채택문제가 쌍방이 결심만 하면 매우 쉽게,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희들은 확신함.</p> <p>(남북고위급 제2차 회담)</p>

우 리 측	북 측
<p>우리측은 불가침이행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해서 또한 단계적인 군비감축을 위해서도, 신뢰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초보적이고 필수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들이 합의서에 명기되어야 함을 거듭 밝혀 왔음.</p> <p>지난 40여년간 남북간에 쌓여온 높은 불신의 장벽을 생각할 때 즉시적이고 일괄적인 군축은 비현실적이며, 남과 북이 진정으로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군축을 실현하자면 반드시 군사적 신뢰구축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임.</p> <p>동서고금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 없이 군축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전례는 없음.</p> <p>신뢰구축은 군비절감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군축이 가능하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신뢰구축조치들은 필요한 것임.</p> <p>귀측이 불가침 이행보장조치들을 합의서에 명기하지 않고 군사분과위원회로 넘기자고 하는 것은, 귀측의 군축에 대한 실천의지마저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하겠음.</p>	<p>귀측 합의서 안의 불가침부문에서 불가침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군축문제를 먼 훗날의 일로 미루어 놓고, 군축단계에서 군축과 병행하여 해결해야 할 신뢰조성문제를 앞에 놓고 있는 사실임.</p> <p>불가침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해서는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군축을 실현해야 함.</p> <p>그러나 귀측은 불가침을 보장하는데서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군축문제를 먼 훗날에 해결할 일로 미루어 놓고 군사적 신뢰구축조치 일면만을 이례적으로 강조하고 있음.</p> <p>이렇게 하면 불가침이 실질적으로 담보될 수 없으며 귀측이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군사적인 신뢰구축도 될 수 없음.</p> <p>귀측이 진실로 불가침이 믿음직하게 담보되기를 바란다면 타당치도 않고 선례도 없는 신뢰우선론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군축을 실현할데 대해 합의하는 데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함.</p> <p>(남북고위급 제5차 준비 제2차 대표접촉)</p>

우 리 측	북 측
<p>나는 귀측이 남북간에 튼튼한 불가침과 군비감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적인 합의를 이룩하는 데 호응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함.</p> <p>(남북고위급 제5차 준비 제2차 대표접촉)</p>	
<p>(남 북 불 가 침)</p> <p>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상대방을 침략하지 아니한다.</p> <p>제10조 남과 북은 상호간에 야기되는 의견대립과 분쟁을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p> <p>제11조 남북간 불가침 경계선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으로 하며 해상에서의 불가침 구역은 군사정전협정 발효 이후 쌍방이 각기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p> <p>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을 확고히 보장하고 군비감축을 실현해 나가기 위하여 상호 주요 군사훈련과 부대이동의 사전통보, 훈련참관단의 교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등의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조치를 취한다.</p>	<p>(북 남 불 가 침)</p> <p>제8조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해하지 않는다.</p> <p>제9조 북과 남은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p> <p>제10조 북과 남의 불가침경계선은 1953년 7월 27일부 조선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온 지역으로 한다.</p> <p>제11조 북과 남은 불가침을 확고히 담보하기 위하여 군비경쟁을 중지하고 군사적 신뢰조성과 동시에 군축을 실현한다.</p> <p>제12조 북과 남은 당면하여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선을 설치 운영한다.</p>

우 리 측	북 측
<p>제13조 남과 북은 무력침략을 상호 억제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와 기습공격능력을 우선 제지하고 쌍방 군사력의 불균형을 시정하며 군비축소를 추진해 나간다.</p> <p>제14조 남과 북은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감축의 이행을 위하여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현장검증을 실시하며 상주 감시 체제를 교환 운영한다.</p> <p>제15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같은 군사적 긴급상태와 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사당국자간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p> <p>제16조 남과 북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규정된 사항의 구체적 이행을 위하여 본 합의서 발효후 6개월 이내에 남북 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p> <p>제17조 남과 북은 본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이내에 본회담 태두리 안에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북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과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반 군사문제를 협의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남북고위급 제5차 회담)</p>	<p>제13조 북과 남은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리행을 위하여 본 합의서 발효후 6개월안에 북남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p> <p>제14조 북과 남은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p> <p>제15조 북과 남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안에 본회담 태두리안에서 북남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리행과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대책을 협의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고위급 제5차 회담)</p>

나. 평화협정

우 리 측	북 측
<p>지금 말씀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귀측에서 주장하시는 평화협정이 옳다, 우리측에서 제기한 불가침협정이 부당하다, 이런 골자고 그 외에 대부분은 결국 우리 내부체제에 대한 비난이라고나 할까, 비판이고 어구에 따라서는 상당히 중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이것을 세삼 여기서 케넬려고 하는 것은 아님.</p> <p>다시 한번 7·4공동성명의 정신을 되새겨 보시면 오늘 여기서 계속 말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할 것임. 또 이렇게 견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고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조절위원회를 우리가 설치하고 구성한거 아닌가?</p> <p>한마디로 먼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논평을 가하자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또 그 이견을 조정시키기 위해서 하루속히 조절위원회를 열어야 됨.</p> <p>우리 부위원장 둘이 앉아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토의하기 어렵고, 토의할 기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음. 불가침협정 제의가 정당하나, 평화협정 주장이 타</p>	<p>사실대로 말해서 지금까지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노력해 온 것이 누구이고, 전쟁정책을 추구해 온 것이 누구이며 남북의 합작과 단결과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 온 것이 누구이고 반목과 대결과 분열을 추구해 온 것은 누구입니까?</p> <p>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시종일관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 왔음.</p> <p>우리는 이미 남북대화의 첫 시기에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제기하였으며, 이것을 기본내용으로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후에 그 실현을 위해 여러가지 공명정대한 통일방안들을 다 내놓았음.</p> <p>우리는 남북이 현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여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군대와 군비의 축소, 외국으로 부터의 무기반입의 중지, 평화협정 체결을 내용으로 하는 5개항목의 제안을 여러차례에 걸쳐 내놓았으며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고 단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북과 남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 남북연방제를 실시할데 대한 문제등을 제기하였음.</p>

우 리 측	북 측
<p>당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는 조절위원회 「테이블」에서 우리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함.</p> <p>끝으로 말씀해주신 정치협상회의, 이거 제기하신 것, 이 문제야말로 조절위원회에서 의견을 교환할 때 조절되리라고 생각됨.</p> <p>평화적 통일방안,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양측의 제안을 놓고 토의하기 위해서도 조절위원회를 빨리 열어야 된다고 생각함.</p> <p>불가침협정의 요소는 현행, 현재의 판문점 이자리에서 지켜지고 있는 휴전협정, 오늘날의 평화상태를 뒷받침하고 있는 휴전협정의 효력은 계속 유지되어야 함. 이런 내용임.</p> <p>우선 이러한 불가침 즉 서로 침범하지 않는다는 협정을 내놓고 통일될 때까지는 평화공존으로 나가자 이런 이야기임.</p> <p>(남북조절위 제3차 부위원장회의)</p>	<p>우리는 지금까지 주장하기를 구체적인 방안들을 다 제기했음.</p> <p>즉 군비경쟁의 중지, 무력증강을 고만 두자는 것, 외부에서 무력을 들여오지 말자는 것, 군사장비 들여오지 말자는 것, 우리 외국군대 내보내자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화협정을 체결하자, 이렇게 하고 평화협정 하자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간에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가 주장한다는 것은 이것임.</p> <p>그리고 우리는 되도록이면 과거에도 여러번 이야기 한 것처럼 광범한 남조선의 정당, 사회단체와 각계각층 대표들이 쌍무적인 또는 다무적인 협상을 하고 이 정치협상을 하자는 것, 정치협상 협의를 해서 경제, 문화교류를 실시하자는 것, 우리가 주장한 것은 시종일관인 것임.</p> <p>(남북조절위 제3차 부위원장회의)</p>
<p>휴전협정 20년전을 돌이켜 본다면 휴전협정때 우리가 왜 거기에 서명 안한 것을 알 것임. 우리는 우리의 철학이 있었음.</p> <p>자주적 입장에서 그때 서명 안했어요. 그것을 흑 기화로 해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3천5백</p>	<p>지금 남조선에서는 귀측 당국자들이 나라의 모든 것을 제한없이 외세에 떠맡김으로써 군사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외세가 판을 치고 있음.</p> <p>사실상 남조선에서는 미국이, 귀측 당국을 통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p>

우 리 측	북 측
<p>만을 빼놓고 귀측만이 우리나라에 평화와 통일문제 이런 것을 미국과 제3국간에 이야기한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미제국주의자들과 이야기를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류선생, 뭐 매국적 행위라는게 따로 있습니까?</p> <p>여러분이 당신들이 늘 입버릇처럼 말하던 미제국주의와 의논한다. 우리 국민이 이말 들으면 분노하다 못해 웃어버릴 것임.</p> <p>다 이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대화하는 것조차 반대하고 일어날 겁니다. 그것은 물론이고 미국사람도 속으로 웃을 거요, 미국사람이 웃고 전세계가, 전세계인민이 그야말따마나 웃고 하늘이 웃고 땅이 웃을 일임.</p> <p>(남북조절위 제5차 부위원장회의)</p>	<p>라고 생각함. 귀측이 미군을 그냥 남겨두고 그에게 모든 것을 내맡기고 있는 조건에서 문제를 해결하자면 실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 함.</p> <p>그리고 본래 조선의 정전협정의 체약 쌍방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미국이며 이들만이 실제상의 당사자임. 그런 것만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응당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할 일임.</p> <p>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번에 취한 조치는 7·4공동성명 정신에 철저히 부합되는 것임.</p> <p>(남북조절위 제5차 부위원장회의)</p>
<p>귀측이 남북관계 개선의 초보적 조치라고 할 수 있는 인도주의문제와 교류협력문제의 해결을 회피하면서 말뿐인 「불가침선언」이나 채택하고 미군철수를 겨냥한 이른바 「내미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진정으로 이 지역의 평화를 바라는 태도로 볼 수는 없음.</p> <p>그것은 오히려 남북간의 불신을 조장함으로써 대결상태를 장기화 할 뿐인 것</p>	<p>우선 정전협정을 남북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인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평화협정의 체결 당사자가 뒤바뀌어 있는 것임.</p> <p>귀측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여 왔음.</p> <p>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정전협정의 체약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할 일이지 체약</p>

우 리 측	북 측
<p>임.</p> <p>따라서 나는 귀측이 「평화에 대한 인식전환」을 우리측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귀측 스스로 평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함.</p> <p>우리는 귀측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데 반대하고 남북간의 평화체제 구축을 거부하는 한 자위와 평화를 위한 우리의 자주적인 전쟁억지노력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이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음.</p> <p>나는 귀측이 진정으로 대미접촉을 활발히 하고 대미관계를 개선하기를 바란다면 쓸모없는 「3자회담」 논리나 내세워 말뿐인 「불가침선언」 채택 운운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남북관계개선과 남북간 평화체제 구축에 호응해 나와야만 한다고 생각함.</p> <p>(남북고위급 제3차 회담)</p>	<p>당사자도 아닌 귀측 당국과의 관계 문제가 아닌 것임.</p> <p>더욱이 귀측이 아직도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요구하고 있는 형편에서는 피보호자와의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아무런 실질적 담보도 없다는 것은 명백함.</p> <p>(남북고위급 제3차 회담)</p>
<p>둘째, 현 휴전체제를 남북간의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문제임.</p> <p>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불안한 휴전체제를 하루속히 남북간의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함.</p>	<p>정전협정의 마지막에 서명자가 있지 않는가, 서명자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유엔군 총사령관, 서명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다 제기되는게 정전협정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것은 서명자간의 관계로서 제</p>

우 리 측	북 측
<p>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교전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지금까지 정전협정을 성실히 준수해 왔음.</p> <p>남북간에는 지금 이시각에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170만명의 발집된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다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임.</p> <p>이와 같이 남과 북은 현재 군사적으로 직접 대치하고 있는 당사자이며 앞으로 이 땅에서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고 군비를 감축하며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당사자인 것임.</p> <p>남북 쌍방은 자주적인 노력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해 나가야 할 주인이며, 귀측도 과거 남북간의 평화협정을 제의한 바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할 것임.</p> <p>(남북고위급 제5차 준비 제1차 대표접촉)</p> <p>뭐냐하면 유엔군 사령관이 말이죠, 유엔군 사령관이 미군이 아니에요. 유엔군 사령관은 참전했던 16개 유엔회원국하고 한국군을 포함한 17개국 군대를 통괄 지휘하던 사람임.</p>	<p>기되고, 이렇게 됐다 말임. 이것은 첫번째고, 둘째는 물론 현재 정전상태를 어떻게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겠는가.</p> <p>이 측면을 놓고 보게 되면 정전협정 제약 쌍방사이에 제기되는 문제가 있고, 또 물론 남북관계에서 주요하게 제기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만 채택되면 적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게 됨. 이를테면.</p> <p>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겠는데, 그래서 이것을 딱 현재의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하는데 이것은 북과 남사이에만 꼭 해결할 문제고 현재 정전협정을 체결한 제약 일방인 유엔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렇게 문제를 규정해서는 안 되고.</p> <p>또 우리도 물론 이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는데서 남측을 전혀 배제하고 이것 유엔측 하고만 할 문제고, 또 현실적으로 유엔군은 미군이니까 미국하고 꼭 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 안 한다 말임.</p> <p>(남북고위급 제5차 준비 제1차 대표접촉)</p>

우 리 측	북 측
<p>내가 이것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님. 다만 기록에 남길려고 그러는 것임. 미국을 포함해서 17개국 군대를 통합, 지휘하는 유엔군 사령부가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유엔군 사령관이 전체 17개국 군대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정전협정에 서명을 한 것임. 미군사령관이 한 것이 아님.</p> <p>유엔군사령관 미육군 대장 「마크 클락크」 이렇게 되어 있음. 그 사람의 말하자면 신분증이 미군사령관이자 그 사람의 자격은 유엔군 사령관임.</p> <p>그러니까 휴전협정은 명목상으로 유엔하고 귀측의 북측하고 중국측하고 이렇게 해서 서명된 것임. 그러면 유엔군측은 누구냐, 유엔군 속에는 우리도 들어가 있고, 17개국 군대가 들어가 있음.</p> <p>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국하고 북측하고 정전협정에 대체하는 어떤 협정체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임.</p> <p>또 실제로 평화의 당사자가 누구냐, 그것은 전쟁의 당사자가 평화의 당사자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하는 것만 말씀을 드려둬.</p> <p>(남북고위급 제5차 준비 제1차 대표접촉)</p>	

우 리 측	북 측
<p>'53년 6월 19일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중국의용군 총사령관이 유엔군 총사령관 앞에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남측이 저 래 반대하는데, 준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 협정 체결해도 준수될 수 있을 것인가』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냈음. 분명하지요.</p> <p>그것에 대한 답변으로서 7월 12일 한국정부가 정전협정 이행 약속을 공포했 음. 그것은 그전에 그전날 한·미공동성명 을 통해서 발표하고, 보장하고 휴전협정 에 참여한다 하는 것을 공식으로 마지막 순간에 하지 않았는가, 이것이에요. 7월 12일에.</p> <p>바로 이런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귀측 에서도 '74년까지 평화협정은 남북간에 체결하자고 그랬던 것 아닌가 이것이.</p> <p>이제와서 그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가 지고, 이 문제 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얘 기하는 것은 남북간에 화해하고 뭐 진척 시키자는데 좀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대 목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두고 싶음.</p> <p>또 하나의 대목은 휴전협정 체결이후 에 정전협정 체결이후에 계속 남북 양측 이 이행을 해왔지 않았는가. 이행했다는 그 사실 45년 동안,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이라 하는 것임. 그 점만 제가 지적하고</p>	<p>어떻게 해서 남조선군대가 정전협정 지키게 되었느냐, 이것은 우리가 정전담 판시기에 따졌단 말임. 그렇니까 유엔군 측에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남조선군대에 대한 통솔권을 유엔군사령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전협정을 지키게 되는 거 다, 이렇게 된 것이지 유엔군에 안속함.</p> <p>유엔군 하게 되면 16개 나라 명기돼 있음. 이런 것은 기록을 명백히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 후에 앞으로 또 구체적으로 토론하기 바람.</p> <p>(남북고위급 제5차 준비 제1차 대표접촉)</p>

우 리 측	부 측
<p>싶고, 그 얘기는 너무 억지쓰면 안된다 이것임.</p> <p>(남북고위급 제5차 준비 제1차 대표접촉)</p>	
<p>기록을 명백히 하자고 그랬는데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음. 귀측의 최고당국자가 '72년 1월 10일에 일본 요미우리신문 기자하고 회견을 했음. 거기서 이 문제에 관해서 언급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가 그대로 얘기하겠음.</p> <p>『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선정전협정을 남북사이에, 남북사이에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한두번만 밝히지 않았습니다. 만일 남조선 위정자들에게 북진통일을 할 의도가 없다면 남북이 평화협정을 맺는데 동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적 통일을 바란다면 있지도 않은 남침위협에 대해서 소동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남북사이에 평화협정을 맺는데 동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측의 최고당국자가 남북사이에 다 하자고 그랬음.</p> <p>(남북고위급 제5차 준비 제1차 대표접촉)</p>	<p>거기에 정전협정을 어떻게 처리하자는가 하는 문제를 더 연구해 보십시오. 그것 한토막만 그러지 말고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는가 하는 것을 우리 위대한 수령께서 하신 노작들 있지 않습니까. 체계적으로 꼭 연구해 보기바람. 그러면 명백해 짐. 그것은 그쯤하고 넘어가기 바람.</p> <p>(남북고위급 제5차 준비 제1차 대표접촉)</p>

우 리 측	북 측
<p>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서와 휴전협정이 병존하는 체제로 들어가는 것임.</p> <p>합의가 돼서 서명할 때는 그 후에 나중에 휴전 체제를, 아직도 휴전체제가 유지되는 것임. 엄밀한 의미에서 나중에 이것을 종결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임.</p> <p>귀측에서는 이것을 미국과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는 이 협상이 제대로 될 수가 없음. 지난번에 한번 최우진 대표가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한가지 밝히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한국은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과 그리고 또 한국은 유엔군의 일원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p> <p>그러면서 무엇을 인용했느냐 하면 유엔군 사령부가 유엔안보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인용해서 말씀했음. 아주 대단히 잘 인용을 했음. 그런데 해석을 잘못했다 하는 것임. 내가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보고서의 내용을, 필요하다면 원문을 넘겨 드릴려고 하는데 인용을 다시 한번 하겠음.</p> <p>작년도에 제출한 보고서, 매년 뭐 같습</p>	<p>우리는 또 역시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우리로서 자료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와 차이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1951년 7월 10일에 판문점에서 정전담판이 개성에서 시작됐음.</p> <p>그렇게 했는데 8월달부터 벌써 정전담판을 반대하는 관중 행사들이 곳곳에서 연일 진행됐고, 그 안에 여러가지 많음. 무슨 쫓기대회요. 좌우지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무슨 포로수용소 폭동문제를 구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그런 것이랑 다 열거하지 않겠음.</p> <p>그렇게 하고 '53년에 들어와서 5월 8일 날 임. 그쪽의 최고위당국자가 미국 정부에 휴전을 거부하는 통고를 냈어요. '53년 5월 8일에, 5월 25일날에는 정전담판에 남조선 대표가 출석을 거부한다는 것을 통고했음.</p> <p>그 다음에 6월 7일날에는 정전협정 조인에 반발해서 남조선 전역에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음.</p> <p>그렇게 하고 6월 11일날에는 북진통일 쫓기대회를 했음. 그다음에 7월 20일날에는 남조선 외무부장관이 정전협정조인에 불참한다는 것을 선포했고, 7월 27일날 조인식에 불참했음. 그리고 1958년 2월</p>

우 리 측	북 측
<p>니다마는 먼저 유엔군 사령부의 임무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어떻게 창설됐고 전쟁때 어떤 나라 군대를 지휘했고 하는게 나와요. 그리고 휴전협정은 어떤 자격으로 체결했다 하는게 나옴.</p> <p>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엔군사령관은 유엔 깃발 아래서 싸운 유엔회원국군대(유엔회원국 군대는 16개 군대 맞습니다)와 대한민국 군대를 대표하여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서명했다』는 것임. 17개 나라의 군대를 대신해서 그런 자격으로 서명한 것임.</p> <p>그리고 거기 어떤 대목이 더 그 후에 나오는가 하면 『정전협상 기간중, 그리고 그 이후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와 중국지원군 사령부측의 요청에 의거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정전협정을 계속 준수할 것을 보장해 왔다』하는게 들어 있음. 왜 만일 한국이 정전협정을 준수해 주지 않는다면 정전협정이 성립될 수 없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협정체결전에 거기에 동의한다, 참여한다하는 것을 밝혔고 그후에 귀측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준수한다는 것을 보장해 왔는데, 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그것을 왜곡해서 해석을 한다든가 하는 논리에 집착한다면 새로</p>	<p>21일에 남조선 국회에서 휴전협정의 폐기와 무효화를 선언하는 결의를 채택했음.</p> <p>이런 말하자면 내용들이 명백히 시사하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결국 조선의 평화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우리하고 남측하고 해결할 문제가 따로 있고, 동시에 우리하고 미국하고 해결할 문제는 따로 있다는 것 부언해 두고.</p> <p>유엔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정전협정 조인당시, 정전협정에 조인해서 유엔측에 제출한 보고서가 아님. 이 보고서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해마다 제출하는 보고서인 까닭에 그전에 모든 사실이 구체적으로 잘못 반영돼서 제출되는 보고도 있음.</p> <p>우리가 여기서 오늘 말하자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우리측은 명백히 얘기했음. 평화협정문제, 평화문제 해결에서는 남측이 지금 처지에서는 우선 법적으로 놓고 볼 때에는 당사자가 못된다, 이거예요. 국제법적으로 봐도 평화협정문제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정전체결권자로 되어 있음. 국제협약 한번 보기바람.</p> <p>그리고 현실적으로 평화협정 이행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임. 자격문제는 누구 말마따나 이남을, 남조</p>

우 리 측	북 측
<p>운 미래를 개척하자는 마당에 일이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것임.</p> <p>그래서 이 문제는 그 이상 더 왜곡된 주장을 하지 말고 물론 선전선동용으로 일반대중에게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협상 테이블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자 확실하게, 그래야 협상이 되는 지란 말임.</p> <p>(남북고위급 제5차 준비 제2차 대표접촉)</p>	<p>선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는 문제가 아닌게고. 실제적으로 이행하자면 미군 해무기 문제, 남조선에서 일체 군사를 움직이는 이런 문제가 있단 말임.</p> <p>그렇기 때문에 이행 당사자로서는 우리하고는 아직 맞설게 못됨. 그런데 내가 말하자는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측과 평화문제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님.</p> <p>남측과도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있음. 그것이 어떤 것인가. 예하면 군축문제, 불가침같은 문제임. 우리가 말하는게 바로 이것임.</p> <p>이런 의미를 살려야지 최근 시기 유엔에 제출한 이 보고서를 놓고 말한다면, 이 보고서는 사실상 우리측의 입장과 지난 시기 역사적 사실에 기초했다고는 말할 수 없음.</p> <p>내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겠음. 송대표가 지난 시기부터 우리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인용하면서, 그것을 남측 주장을 고집하기 위한 하나의 자료,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해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p> <p>송선생이 그래서 위대한 수령의 교시에 담겨진 그 위대한 사상, 그 위대한 진수, 그 위대한 본질을 알면 어느정도</p>

우 리 측	북 측
	<p>아시겠느냐 하는게 문제가 됨. 우리가 위대한 수령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사람도 그 사상의 진수를 채 파악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고 있음.</p> <p>그래서 그런데 인용한 그 문제에 대해서 말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하는가. 역사적으로, 전면적으로 그 역사의 진수를 새겨야 함. 지금 교시 진수는 무엇인가. 그 진수를 역사적으로 소개하면 그전에 교시가 또 있음.</p> <p>즉 미군철수를 전제로 한 조건에서, 남조선이 미군통솔권을 넘겨 받은 조건에서 제기된, 평화문제다 그 말임.</p> <p>(남북고위급 제5차 준비 제2차 대표접촉)</p>
<p>이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느냐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여 나가느냐 하는 그 문제와 관련되는 문제임. 다시 말해서 성격상 우리 한반도에서의 어떤 항구적인 평화보장에 관한 틀을 규정하자는 문제임.</p> <p>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불가침에 관한 약속의 차원이 아님. 이것을 보다 뛰어넘고 그야말로 민족의 장래라든가 혹은 안</p>	<p>왜그런가 정전이라는 것은 결국 정전상태의 일시적 중단임. 그렇기 때문에 정전을 공고한 평화로 전환시키는 문제는 응당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된 「불가침」부분에 넣는 것이 위치상으로 볼때 순리임. 전쟁이나 평화나 하는 문제와 직결된 문제가 바로 이 조항임.</p> <p>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귀측에서도 이제까지 「불가침」에 계속 포함시켜 가지고 제안했던 문제임. 이번에 비로소 이 문제를 「화해」에다 넣자고 이렇게 하는</p>

우 리 측	북 측
<p>전보장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함.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가침」속에다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화해」에다 분류돼야 됨. 이렇게 생각하는 것임.</p> <p>그래서 우리가 세삼스럽게 휴전협정을 들추지 않더라도 거기에 60조를 보면 『한국 민족의 평화적 해결 문제는 고위급 정치회담에서 협의 해결하도록』되어 있음. 이만큼 정전문제를 평화문제로 바꾸는 문제는, 이것은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정치분과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것임.</p> <p>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남북 사이의, 귀측은 이 용어를 자꾸 그러는데, 당연히 이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바꿀려면 남북사이에 이것을 협의해야 되지 않겠는가?</p> <p>그것을 부정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함. 그것은 뭐냐. 그것은 먼저 애초부터 여러가지, 대표들이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되풀이하지는 않겠음.</p> <p>평화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당사자도 남북한임.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긴장과 평화의 주체로서 당연히 이와 같은 정전문제를 평화문제</p>	<p>데 그래서 위치를 우선 무엇인가 하면 「불가침」으로 옮기자 그런것이고, 그 다음에 내용에서도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가 제기한대로 『정전을 공고한 평화로 전환시키는』 문제로 이렇게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함.</p> <p>왜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에 문제점이 많음. 그쪽에서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하는데 북남 사이의 평화상태로 전환을 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귀측에서 이것은 말하자면 「정전상태를 북남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킨다」하는 이 자체는 벌써, 귀측이 이 문제에, 이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p> <p>그런 것 만큼 그런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서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제안한대로 『정전을 공고한 평화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렇게 내용을 하는게 좋음.</p> <p>정전이라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 하면 정전은 남북간의 평화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여기에 문제가 많은 것이고, 또 동시에 그쪽 자체가 이것을 시인하고 들어가는 것임.</p> <p>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이렇게 하지 말자. 『정전을 공고한 평화로 전</p>

우 리 측	북 측
<p>로 바꾸는데 대해서는 협의해 나가야함. 그것을 부정해 나간다면 문제해결이 하나도 안됨.</p> <p>(남북고위급 제5차 준비 제2차 대표접촉)</p>	<p>환시킴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고 하면 되지 않느냐 정전을 만약에 귀측이 말하는 정전 자체가 우리 북남관계의 문제라고 하면, 무엇때문에 평화로 전환시키는 문제를 그 평화자체는 북남사이의 평화문제로 하자 그런 것을 제안하는가?</p> <p>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많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어차피 이전 정전상태를 우리 남북이 가시고 우리 조선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잡한 내용을 안고 하지 말고 『정전을 공고한 평화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자』이렇게 하는게 호상 좋은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음.</p> <p>(남북고위급 제5차 준비 제3차 대표접촉)</p>
<p>바로 말씀하신대로 전쟁과 평화, 이 문제임. 그러면 전쟁일 경우에는 이것이 불가침에 들어가지만 평화일 경우에는 정치로 들어가게 되어 있음. 또 정전협정이 말이지요, 정전협정 60조, 62조에는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일단 휴전상태에 관한 잠정적인 합의문서는 장차 정치적인 차원에서 영속적인 평화문제를 규정하는 협정으로 대체될 것을 예견하고 있음. 그것은 정치임.</p>	<p>정전을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문제는 우리측에서 정확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여러가지로 이 「불가침」부분에 넣자는 것임. 그래서 여러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두가지 측면에서 내가 도움을 좀 주겠음.</p> <p>우리가 이 조항의 「화해」부분이 아니라 「불가침」부분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조항, 이 평화상태 그 자체가 정전상태가 종식돼서 이루어지는 군사적</p>

우 리 측	북 측
<p>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갖다가 단순히 군사문제라고 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아 있음. 그것은 그것대로 우리가 논의하고, 그것보다도 지금 김대표가 말씀하는 가운데 여러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가령 평화협정의, 소위 평화체제의 당사자 일방으로서 상대편인 대한민국의 입장과 자격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됨.</p> <p>왜 그러나, 이 조항이 왜 나오느냐, 이것은 6·25전쟁에서 나오는 것임. 6·25전쟁이 어떤 전쟁이나, 이것은 말이지요. 우리가 분단으로 인하여 민족의 고통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에서 언젠가는 이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임.</p> <p>왜 전쟁이 났는가. 전쟁이 났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가 생겨난 것임. 그러면 그 문제부터 우리가 따져야 됨.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문제를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가지로 복잡해지고 또 그동안 1971년부터 우리가 남북회담 해오는 과정에서 많이 쌓인 사연이 있음.</p> <p>그래서 오늘 그 쪽으로 더 깊이는 안 들어 감. 그러나 지금 정전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방인, 영토주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자격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전체가 성립될 수 없음.</p>	<p>성격과 직접 연결된 그런 문제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임.</p> <p>그쪽에서 다 아시는 문제지만 정전이 라 할 때 그것은 어디까지나 쌍방 군사적 집단이 내뿜던 총포의 화력을 일시적으로 멈춘 그런 상태나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임. 그런것 만큼 정전 그 자체가 군사적 문제이고 또 정전직후에 따르는 평화문제도 이 군사적 문제가 해결돼야 이룩되는 문제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편에서 이것이 「불가침」부분에 들어가는게 더 마땅함.</p> <p>그리고 정전, 불가침, 평화 이것은 한계열에 놓고 논하는 문제임. 그래서 우리측에서 다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보충하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임.</p> <p>그리고 보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송대표선생께서 마치 조선반도의 평화문제가 남북사이에 다루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남북 사이의」라는 표현을 넣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음.</p> <p>여기에서 우리가 좀 의견이 있는게 있음. 우선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 남북사이의 평화문제를 다뤄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똑바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함.</p>

우 리 측	북 측
<p>또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논하는 마당에서 한반도의 평화다, 이런 문제는 남북한이 해야지 남북한 외에 누가 주체로서 여기에 끼어 들어올 자리가 없음. 다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러가지 전쟁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장치가 있음.</p> <p>이 장치는 주권을 가진 여러 당사자들 간에 합의에 의해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장치들이 있음. 이 장치는 한반도에만 있는게 아님. 구라파에도 있음. 구라파에 「나토」가 있단 말임. 옛날에 「바르샤바」조약이 있음.</p> <p>「나토」가 있고 「바르샤바」조약이 있는데 「나토」사령관이 미군장교임. 그렇다고 해서 구라파 여러 나라들이 주권이 없어졌는가? 그런게 아님. 그것은 다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갖는 하나의 장치임.</p> <p>그런 것과는 이것을 혼돈해 가지고 상대방인 대한민국의 이 문제에 대한 자격을 그런식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생겨남.</p> <p>그러니까 그 문제를 그런 시각에서는 다루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림.</p> <p>그런데 거기에서 당사자나, 아니나, 남측에 권한이 있느냐, 권능이 있느냐. 그</p>	<p>조선반도의 평화문제는 물론 북남사이에 해결될 것이 있지만 우리와 미국 사이에 풀 문제도 더 많음. 귀측도 사실상 있는 사실대로 생각하고 사고한다면 미국이 첫번째로는 조선반도의 평화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임.</p> <p>또 미국이 정전협정에 직접 수표한 당사자라는 그 사실도 부인하지 못할 것임. 또 평시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시에도 미국이 모든 군사통수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도 귀측에서 부인하지 못할 것임.</p> <p>이런 의미에서는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문제는 얼핏 보기에는 남북사이에 다루어야할 문제이지만 미국과 다루어야할 문제가 엄청나게 많음. 그렇기 때문에 「남북사이의」이 표현을 넣으면 실제적인, 존재하는 문제를 외면하는 것으로 됨. 이게 하나 있고요.</p> <p>또 이것이 대표접촉하는데 무슨 숨길게 있는가. 실사구시대로 다 얘기한다면 지금 형편에서 귀측도 북남사이의 공고한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자격을 다 가진 당사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형편임. 이것을 부인하시면 안</p>

우 리 측	북 측
<p>런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영철선생 그런식으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 오늘 이것으로 마지막이면 좋겠음.</p> <p>무슨 『남이 권한과 자격도 못 가진 상대다』 어떻게 상대방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어째서 권한과 자격을 못 갖고 있다는 얘기인가? 그럼 뭐하러 우리 하고 회담하자는 것인가?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이것은 신중히 얘기해야 됨.</p> <p>그 다음에 통수권도 갖고 있지 못하다, 미국에 주었다, 어디 통수권이 미국에 가 있는가? 그런 선전용어는 회담석상에서 쓰지 말자하는 것임.</p> <p>전쟁시기에 유엔군사령부가 창설되면서 16개의 유엔회원국과 대한민국 군대, 통할해서 작전 지휘하기 위해서 작전통제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위임했던 적은 있습니다마는, 작전통제권에요, 통수권이 아님.</p> <p>지금은 한국과 미국이 연합군사령부 체제를 갖고 있지만서도 작전, 모든 지휘권, 통수권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임.</p> <p>그것을 꼭해를 자꾸 하지 말자 이것임. 단, 전쟁이 다시 일어날 것 같으면 연합지휘체제에 의해서 작전통제권이 행사될 수 있는 것임. 그것은 단일지휘체제하에서 작전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러</p>	<p>됨.</p> <p>평화문제를 이행하고 그것을 담보하고자 하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평화를 유지하고 또 평화유지에 장애로 되는 이 군사적 문제를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다 있어야 됨.</p> <p>그런데 지금 형편에서는 우리가 알기에는 아직도 이남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군사적 문제를 남쪽의 당국이 다 다루면 얼마나 좋겠는가. 지금 다루지 못한다 이말임.</p> <p>예하면 항공모함이 한척이 들어온다. 전략 폭격기가 괌도에서 하나 떠 온다. 전략정찰기가 하나 뜬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모든 작전적인 움직임을 그렇게 좌지우지 할 수 없는 형편이 이남의 실태가 아닌가.</p> <p>물론 그렇다 해서 우리가 남과 북의 평화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할, 그 말씀을 해결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남북사이에도 평화적 문제를 해결할 게 있음. 그리고 같은 민족, 같은 겨레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평화문제를 같이 해결하자는데는 동감임.</p> <p>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썼는가. 『조선반도의 평화 문제를 북과 남이 공동으로 노력』 그래서 우리 표현</p>

우 리 측	북 측
<p>는 것이고 평시에는 그렇지 않다, 이것 임.</p> <p>아니, 북측이 현재 주장하는대로 미국 과 이 문제를 협의하고 해결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해결될 수 없다는 것 을 분명히 알아야 됨. 그것은 과거의 논 리였고, 이제 확실하게 미래지향적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고 통일을 촉진하 기 위해서는 남북 두 주체가 합의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는 것을 확실 히 알아야 함.</p> <p>(남북고위급 제5차 준비 제3차 대표접촉)</p>	<p>을 적당하게 쓴 것임. 사실상 우리 표현 자체에 다른 의미가 있음. 남북 사이에 존재하는 현실 그 자체를 그대로 반영해 서 『북과 남은 정전을 공고한 평화로 이 전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한다』 이 사실을 부인하시면 안됨.</p> <p>하여간에 남조선에서 유엔군이 조선반 도에서 철수한 조건하에서는 우리 남쪽 을 당사자로 인정해 줄 수 있어. 그거 명 백히 하자요. 미군이 있는 조건하에서는 절대로 안돼. 남북만이 당사자가 될 수 없음.</p> <p>(남북고위급 제5차 준비 제3차 대표접촉)</p>
<p>첫째, 현 정전상태를 남북간의 평화상 태로 전환하는 문제임.</p> <p>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항구 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 이 근 40년간 지속해온 불안한 정전상태 를 하루빨리 남북간의 평화상태로 전환 시켜야 함.</p> <p>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히 하는 문제는 반드시 민족자결원칙에 따라 남북당사자 간에 협의·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의 기본입장임.</p>	<p>첫째로, 귀측 합의서초안의 제5조에 있 는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평화상태 로 전환시키고 그때까지 현 정전협정을 준수하자는 문제임.</p> <p>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평화상태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법적견지에서 보면 정전협정을 북남사이의 평화협정으로 바 꾼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법적의미를 다 른 표현으로 바꾼 것에 불과함.</p> <p>우리 나라에서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p>

우 리 측	북 측
<p>이 땅에서 피비린내 나는 처절한 전쟁을 한 것도 같은 민족인 남과 북임. 총칼을 놓고 전쟁을 멈춘 것도 남과 북임. 이 땅에 튼튼한 평화를 다지 나가야 하는 것도 남과 북인 것임.</p> <p>그런데 귀측은 현재의 불안한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와 뜻을 같이하면서도 남북간에 할 일이 따로 있고, 미국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등의 억지주장을 하고 있음.</p> <p>이 땅에 참다운 평화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귀측이 한반도 평화문제해결의 일연한 당사자인 남북간의 협의를 통해 자주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진지하고도 현실적인 자세를 가져야만 함.</p> <p>평화문제든, 통일문제든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 민족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임.</p> <p>아울러 불안한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일은 점진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일시에 실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 남북간에 공고한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는 현 정전협정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기해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남북고위급 제5차 회담)</p>	<p>꾸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음.</p> <p>그러나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하는 문제는 북남사이에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더우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우리가 귀측과 합의해결할 성격의 문제도 아님.</p> <p>우리나라 평화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와 귀측과의 관계뿐 아니라 그에 직접 책임이 있는 미국과의 관계문제가 응당 고려되어야 하며 그중에서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정전협정의 채약당사자인 우리와 미국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p> <p>우리는 귀측이 나라의 평화문제해결에서 남과 북의 주체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며 그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함.</p> <p>그러나 귀측이 지금도 미국의 군사적 피보호자로 남아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한 그것은 우리에게 진실한 것으로 접수될 수 없는 것이며 귀측이 현실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위치에 있는 한 귀측과의 평화협정이란 성립될 수도 없고 성립된다고 하여도 그러한 협정은 실효성이 있을 수 없음.</p> <p style="text-align: right;">(남북고위급 제5차 회담)</p>

3. 군사훈련 문제

가. 팀스피리트 훈련

우 리 측	북 측
<p>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측의 팀스피리트 훈련은 어디까지나 방위불 목적으로 한 평화유지 훈련으로서 귀측에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음.</p> <p>그것은 팀스피리트 훈련이 공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측이 귀측에게 그 훈련의 실시기간과 규모·내용을 사전 통보하고 있고 심지어 참관초청까지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음.</p> <p>남북간의 긴장상태나 남북대화의 장애는 귀측의 주장처럼 우리측의 공개적인 군사훈련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님. 오히려 북측에서 비밀리에 실시하고 있는 군사훈련과 지나치고 공격적인 군사력 증강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임.</p> <p>따라서 상호 불신과 반목을 해소하고 신뢰와 이해를 회복하는 것이 긴장완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간에 신의있는 접촉과 다각적인 교류·협력실시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남북불가침선언 등 제반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임.</p>	<p>팀스피리트 문제는 비유해 말하면 「남가리 옆에서 불장난하는데서 탈곡할 수 없는」 이런 것과 같음. 남가리 옆에서 불장난하면 거기서 탈곡 못함. 그건 평화를 위한 게 아님. 팀스피리트는 분명히 대결을 고취하고, 긴장을 격화시키고 대화를 파괴하는 것임.</p> <p>팀스피리트는 대화를 파괴하고, 평화를 파괴하고, 통일을 지연시키는 장애물임.</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국회 제7차 준비접촉)</p> <p>다음 팀스피리트 문제와 관련해서 그 쪽에서는 공개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비밀리에 한다. 여기에 대해서 명백히 하겠음. 우리가 그쪽의 팀스피리트를 시비하는 거는 외세·외국군대와 왜 하느냐? 우리 민족역사에 그런 일이 없었음.</p> <p>이 민족의 수치지요, 치욕이지요, 이걸 우리가 말하는 것임.</p> <p>다른 하나는 그 군사훈련 성격이 핵전쟁 성격도 있는 것임. 그 규모로 봐서 아주 위험천만한 훈련이다 이것임. 20만이 라는 것, 나토에서도 그렇게 없음. 그저</p>

우 리 측	북 측
<p>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진전됨으로써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정착된다면 팀스피리트 훈련과 같은 것은 필요조차 없을 것임.</p> <p>이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남북국회회담에서 협의·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들은 긴장상태완화에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것이며 남북국회회담의 성공적 완수는 팀스피리트 훈련을 안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리라고 확실히 믿음.</p> <p>또한 과거 우리측의 팀스피리트 훈련과 귀측의 군사훈련이 실시된 기간에도 남북대화가 계속되었다는 사실은 군사훈련과 남북대화가 직접 관련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음.</p> <p>나는 귀측이 진정으로 순조로운 남북국회회담의 실현을 원한다면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문제 운운하는 것은 더이상 제기하지 말고 쌍방간의 의견접근 사항을 존중하는 바탕위에서 합의를 창출하는데 노력해야 될 줄로 믿음.</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국회 제8차 준비접촉)</p>	<p>면 하나의 웅근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규모임.</p> <p>이것과 우리 훈련한다는 것과 대비됩니까? 우리는 나라의 긴장상태를 조성시킬만한 그런 요인으로 될만한 군사훈련 안함.</p> <p>우리는 외국군대와 함께 남을 반대하는, 남쪽을 반대하는 군사훈련을 하지 않음.</p> <p>다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그럴것임. 팀스피리트 문제는 이 회담에 다시는 들고 나오지 말아 달라 했는데, 다시 들고 나오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람. 그렇게 하시면 아주 다행으로 생각하겠음.</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국회 제8차 준비접촉)</p>
<p>귀측에서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이 팀스피리트 훈련이 공격적이고 예비</p>	<p>그런데 오늘 그쪽에서는 온 나라의 민심도 세계적인 여론도 다 외면하고 팀스</p>

우 리 측	북 측
<p>전쟁이라는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데 그 훈련의 성격을 한번 우리 분명히 규명을 해 보면,</p> <p>팀스피리트 훈련이 기본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거나 상대방을 위협하는 공격적 훈련이 아니라는 것은 아래와 같은 사실에 의해서 분명히 입증되는 것임.</p> <p>첫째, 이 훈련은 1976년부터 연례적으로 진행을 해왔고, 그 규모, 일시, 작전지역 등을 우리가 모두 공개리에 실시하고 있음.</p> <p>두번째, 1982년부터는 귀측에 대해서 이 훈련계획을 사전에 통보를 하고 참관까지도 초청을 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씀을 아시지요. 백번 말로 듣는 것보다 한번 와서 보시는 것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귀측으로 하여금 이 훈련이 유사시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구나. 직접 확인하도록 문호를 개방해 놓고 있음.</p> <p>나아가서 이 공격적 성격의 훈련이라면 어떤 통치자나 군사전략가가 이것을 공개하고 상대방을 와서 보도록 하겠는가?</p> <p>언제, 어디서, 우린 어떤 규모의 어떤</p>	<p>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이 마치도 이 회담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또 어떤 누구의 위협때문에 벌어지는 연습인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데 군사적인 이치에도 맞지 않고 초보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나는 생각함. 온 나라의 민심이, 세계적인 여론이 왜 이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그토록 지탄하는데, 대화 일방인 우리는 예비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왜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라고 하느냐 하는 것을 귀측이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음.</p> <p>특히 김선생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이 어떻게 발단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똑똑히 모름. 우리가 알건데는 원래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은 미국사람들이 만든 모험적이고 야심적인 아세아·태평양 전략에 따라서 일어난 전쟁연습임. 선생들도 아마 다 아시겠는데 미국사람들이 만든 아세아·태평양 전략이 어떤 전략인가,</p> <p>우리 조선반도가 임해있는 극동수역을 포함해서 태평양 전체를 미국의 호수처럼 만들고 조선반도의 북과 남을 포함한 아세아·태평양 지역의 모든 나라들을 미국의 관할밑에, 영향밑에 나타나는 전략</p>

우 리 측	북 측
<p>훈련을 하는데 와서 보십시오 하면서 공격하는 사람 봤는가?</p> <p>귀측이 모든 군사훈련을 비밀리에 실시하고 비무장지대 일대에 무력을 계속 증강해 온 점들이 우리 측으로 하여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방어적 군사훈련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입니다.</p> <p>귀측은 대규모의 군대가 참가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도, 수석대표께서 초반에 말씀을 하셨습니까라는 이를 공개 발표하거나 우리측에 사전 또는 사후에 한번도 통보한 일이 없음.</p> <p>따라서 동 훈련은, 우리가 하고 있는 팀스피리트 훈련은 귀측이 팀스피리트 문제와 관련해서 장황하게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팀스피리트 훈련이라는 것은 사실상 뭐 귀측에서도 알다시피 내용이 나 성격자체가 방어적입니다. 유사시에 대비해 가지고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 실시하고 있는 그런 방어훈련이기 때문에 그러한 훈련이라는 것은 앞으로 우리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고 신뢰가 조성되고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고위당국자회담이 성사되 가지고 거기서 여러가지 합의사항이 창출되</p>	<p>입니다.</p> <p>바로 이러한 전략에 따라서 시작된 연습이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입니다. 결코 그 누구의 위협때문에 시작된 연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p> <p>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라 공화국북반부를 공격하기 위한 예비전쟁입니다. 다시말하여 이것은 우리의 대화 결과를 하루 아침에 무산시켜 버릴 수 있는 극히 불안한 요소입니다.</p> <p>미군병력을 포함하여 무려 20여만의 육해공군병력이 투입되고 있는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은 구라파에서 15개 나라가 참가하여 진행되는 「나토」 합동군사연습에도 병력이 고작해서 10만을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얼마나 큰 규모의 전쟁연습인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p> <p>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에 동원하는 무력은 실로 우리나라와 같은 그리 크지 않은 나라에서 웅근 하나의 전쟁을 치르기도 남을 방대한 것입니다.</p> <p>특히 이 군사훈련에 핵전쟁지휘를 기본업무로 하는 미국의 「전략사령부」와 핵전쟁지령기를 끌어들이고 움직이는 핵</p>

우 리 측	북 측
<p>고 그리고 긴장이 완화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것은 해결되는것임. 또 우리 노태우 대통령이 작년 UN총회 가서 연설하면서도 이야길 했지만 우리는 북측에 대해서 먼저 무력을 사용하는 건 없음.</p> <p>그때 분명히 선언을 했음. 북측에 대해서 무력을 먼저 사용하는 일은 절대없다, 그와 같은 선언은 앞으로도 그대로 지켜지리라고 저는 확신함.</p> <p>(남북고위급 제1차 예비접촉)</p>	<p>기지로 불리우는 미 제7함대의 항공모함 전단과 미국전략핵무기의 기본골간의 하나인 「비 52」 전략폭격기 그리고 「에프 16」, 「에프 15」 핵전투폭격기들과 「랜스」 미사일 등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핵전쟁연습으로서 그 엄중성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아도 명백하리라고 봄.</p> <p>(남북고위급 제1차 예비접촉)</p>
<p>솔직히 말해서 팀스피리트 훈련을 왜 시작했겠는가?</p> <p>귀측에서 회고해 보면 알것임. '75년 4월 북경에서의 발언이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임. 어디까지나 이 팀스피리트 훈련은 여기에서 발단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8·18사건도 있었고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방어적이고 공개적으로 이 훈련을 실시하는 것임.</p> <p>만약에 귀측에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이 전쟁을 위한 연습이다, 핵전쟁예비음모라고 성토를 하실 것이 아니라 만약에</p>	<p>지금 우리들 사이에 팀스피리트 합동 군사연습이 대화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위험한 연습인가 아닌가 하는 말씀들이 오고 가고 있음.</p> <p>그래서 이에 대해서 내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습이 철저히 대화의 분위기에 위협을 주는 전쟁연습이라고 평가함.</p> <p>우리가 이렇게 평가하는 데는 정당한 근거가 있음. 그 근거가 무엇인가,</p> <p>이 연습이 지금 첨예한 상태에 있는 이 남북의 팽팽한 군사적 긴장도를 더욱 더 극도에 이르게 하고 이 연습자체가</p>

우 리 측	북 측
<p>그런 위협을 느낀다면 대화를 통해서 풀던가 아니면 우리가 참관초청을 했으니 만큼 직접 와서 이것이 공격인가 방어적인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하면 될 것 아닌가?</p> <p>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간에도 서로 참관통보를 하고 훈련을 참관을 하고 이런 실정에 있음.</p> <p>오늘 시대도 바뀌고 남북간에 여러 갈래의 대화도 진척될려는 이때에 어떻게 과거의 타성에서 한치도 진전을 못하고 이 중차대한 고위당국자회담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팀스피리트 훈련을 먼저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임.</p> <p>팀스피리트 훈련을 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니되느냐, 실시하지 않으면 아니 되느냐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됨.</p> <p>귀측의 여러가지 공격준비태세가 우리들에게 주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함.</p> <p>가령 귀측은 말이죠, '60년대초부터 이른바 4대군사노선을 채택을 해가지고 군사비를 총국민생산고에 20%이상씩 사용을 하면서 꾸준히 군사력을 증강하여 오</p>	<p>전쟁의 도화선에다가 불을 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군사적 행동이기 때문임.</p> <p>그런데 일관해서 쪽 보시면 귀측의 말쑤이, 우리는 대화를 귀중히 여긴다, 우리가 하는 훈련은 방어훈련이다. 방어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다. 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훈련을 하는 거다. 그러면, 그렇다면 귀측에서 군사훈련을 하되, 귀측군대만 가지고, 외국군대의 참가없이 하고 규모도 줄이고, 그리고 그 군사훈련의 명칭도 고치고 하라, 이걸 우리는 주장함.</p> <p>만약 귀측에서 지금 우리가 소련해군과 우리나라 해군사이에 공해상에서 친선의 식으로 진행하는 의식자체가 군사훈련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우린 당장이라도 그걸 고려할 용의가 있음. 그래서 귀측에서는 군사훈련은 군대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십시오. 하는데 귀측군대만 가지고 하고 일체 외국군대 참가시키지 말고 하고 규모도 줄이고, 줄이고, 그리고 훈련명칭도 고치자 이거 우리 주장임. 이 우리 주장은 우리가 이거 대화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지금 북과 남사이엔 민족이 화해와 단합을 지향하는, 이런 그들의 염원에도 맞고 또 지금 서로 이</p>

우 리 측	북 측
<p>고 그리고 긴장이 완화되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것은 해결되는것임. 또 우리 노태우 대통령이 작년 UN총회 가서 연설하면서도 이야길 했지만 우리는 북측에 대해서 먼저 무력을 사용하는 건 없음.</p> <p>그때 분명히 선언을 했음. 북측에 대해서 무력을 먼저 사용하는 일은 절대없다. 그와 같은 선언은 앞으로도 그대로 지켜지리라고 저는 확신함.</p> <p>(남북고위급 제1차 예비접촉)</p>	<p>기지로 불리우는 미 제7함대의 항공모함 전단과 미국전략핵무기의 기본골간의 하나인 「비 52」 전략폭격기 그리고 「에프 16」, 「에프 15」 핵전투폭격기들과 「랜스」 미사일 등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핵전쟁연습으로서 그 엄중성에 대해서는 더 말하지 않아도 명백하리라고 봄.</p> <p>(남북고위급 제1차 예비접촉)</p>
<p>솔직히 말해서 팀스피리트 훈련을 왜 시작했겠는가?</p> <p>귀측에서 회고해 보면 알것임. '75년 4월 북경에서의 발언이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임. 어디까지나 이 팀스피리트 훈련은 여기에서 발단이 되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8·18사건도 있었고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방어적이고 공개적으로 이 훈련을 실시하는 것임.</p> <p>만약에 귀측에서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이 전쟁을 위한 연습이다, 핵전쟁예비음모라고 성토를 하실 것이 아니라 만약에</p>	<p>지금 우리들 사이에 팀스피리트 합동 군사연습이 대화분위기에 영향을 주는 위험한 연습인가 아닌가 하는 말씀들이 오고 가고 있음.</p> <p>그래서 이에 대해서 내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습이 철저히 대화의 분위기에 위협을 주는 전쟁연습이라고 평가함.</p> <p>우리가 이렇게 평가하는 데는 정당한 근거가 있음. 그 근거가 무엇인가,</p> <p>이 연습이 지금 침예한 상태에 있는 이 남북의 팽팽한 군사적 긴장도를 더욱 더 극도에 이르게 하고 이 연습자체가</p>

우 리 측	북 측
<p>그런 위협을 느낀다면 대화를 통해서 풀던가 아니면 우리가 참관초청을 했으니 만큼 직접 와서 이것이 공격인가 방어적인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하면 될 것 아닌가?</p> <p>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간에도 서로 참관통보를 하고 훈련을 참관을 하고 이런 실정에 있음.</p> <p>오늘 시대도 바뀌고 남북간에 여러 갈래의 대화도 진척될려는 이때에 어떻게 과거의 타성에서 한치도 진전을 못하고 이 중차대한 고위당국자회담 문제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팀스피리트 훈련을 먼저 논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임.</p> <p>팀스피리트 훈련을 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아니되느냐, 실시하지 않으면 아니 되느냐 하는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됨.</p> <p>귀측의 여러가지 공격준비태세가 우리들에게 주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함.</p> <p>가령 귀측은 말이죠, '60년대초부터 이른바 4대군사노선을 채택을 해가지고 군사비를 총국민생산고에 20%이상씩 사용을 하면서 꾸준히 군사력을 증강하여 오</p>	<p>전쟁의 도화선에다가 불을 달 수 있는 매우 위협한 군사적 행동이기 때문임.</p> <p>그런데 일관해서 쭉 보시면 귀측의 말쑤이, 우리는 대화를 귀중히 여긴다, 우리가 하는 훈련은 방어훈련이다. 방어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다. 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훈련을 하는 거다. 그러면, 그렇다면 귀측에서 군사훈련을 하되, 귀측군대만 가지고, 외국군대의 참가없이 하고 규모도 줄이고, 그리고 그 군사훈련의 명칭도 고치고 하라, 아질 우리는 주장함.</p> <p>만약 귀측에서 지금 우리가 소련해군과 우리나라 해군사이에 공해상에서 친선의 식으로 진행하는 의식자체가 군사훈련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우린 당장이라도 그걸 고려할 용의가 있음. 그래서 귀측에서는 군사훈련은 군대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니깐 하십시오. 하는데 귀측군대만 가지고 하고 일체 외국군대 참가시키지 말고 하고 규모도 줄이고, 줄이고, 그리고 훈련명칭도 고치자 이거 우리 주장임. 이 우리 주장은 우리가 이거 대화를 구원하기 위해서, 또 지금 북과 남사이에 온 민족이 화해와 단합을 지향하는, 이런 그들의 염원에도 맞고 또 지금 서로 이</p>

우 리 측	북 측
<p>지 않았는가?</p> <p>거 뭐 제가 알기로는 가령 '76년도만 하더라도 한 43만명 밖에 안되던 것이 10년후인 '86년에는 87만여명으로 두배나 증가를 했음.</p> <p>또 그뿐만이 아님. 귀측은 모든 군대의 대부분을 전방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음. 배치를 하고 있고, 귀측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든가 장비 엄청남.</p> <p>탱크만 하더라도 3,500여대가 돼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갑차만 하더라도 2,000여대가 있고, 그리고 야포만 해도 뭐 한 8,000여문……</p> <p>이런 식으로 엄청난 장비와 무기를 가지고 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귀측은 평상시인데도 불구하고, 특수부대를 10만이 넘는 특수부대를 가지고 있음. 이것은 세계유례를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임.</p> <p>가령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령 해군의 잠수함 생각을 해 보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제가 알기 만으로도 한 30여척 가지고 있음. 이 잠수함이 그런 방어용, 거 뭐냐 무기냐? 장비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님. 수륙양용 주정같은 것 그것도 엄청나게 가지고 있음.</p>	<p>제 사상도 다르고 꺾줄도 다른 이런 여러나라 민족들 사이에도 지난날의 대화 상태에서 벗어나서 화해의 길로 나가고 있음. 또 종래의 분쟁문제들도 이런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아가는데 굳이 우리가 한 민족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귀측에서 우리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응당하니 받아들일 것은 받아 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도 많이 갔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담은 그저 우리가 귀측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여기 현존 이 자리에서는 팀스피리트--89를 중지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적인 대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이제 돌아가서 협의를 하고 우리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셨으면 함.</p> <p style="text-align: right;">(남북고위급 제1차 예비접촉)</p>

우 리 측	북 측
<p>탐스피리트 훈련을 중지하고 싶으면 귀측이 우리측에 대한 공격준비태세를 바꿔야 됨. 바꾸고 남북대화에 그야말로 성실히 나와가지고 우리 모두는 남북간에 신뢰를 조성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이런데다가 모든 것을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 가지고 화해를 하고 관계개선을 하여야 함. 그런것 없이 이러한 아까 이야기 됐듯이 상호간의 적대관계에 놓여 있음. 상호간에 침예한 대립관계에 놓여 있음.</p> <p>그런 상황에서 귀측이 그러한 방대한 준비를 가지고 공격태세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속에서는 불가피하다 이것임. 그러니까 귀측이 탐스피리트 훈련을 중지하고 싶으면 그에 대한 귀측의 준비태세 그것좀 바꾸고, 중지해야 함. 이게 상호적인 것임.</p> <p>(남북고위급 제1차 예비접촉)</p>	
<p>둘째, 탐스피리트 훈련과 관련한 귀측의 주장에 대해서 말하겠음.</p> <p>탐스피리트 훈련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키거나 상대방을 위협하는 공격적 훈련이 아님.</p> <p>동 훈련은 1976년부터 연례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그 규모·일정 및 훈련지</p>	<p>오늘 우리 나라에서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서 나서는 가장 긴절한 문제는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탐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는 것임. 해마다 수개월간씩 우리를 가상적인 「적」으로 하여 벌어지는 대규모의 탐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은 그때마다 우</p>

우 리 측	북 측
<p>역등을 모두 공개리에 실시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임.</p> <p>더욱이 1982년부터는 귀측에 동 훈련 계획을 사전 통보하고 참관까지 초청함으로써 우리측 스스로가 동 훈련이 방어적 성격의 것임을 입증하고 있음.</p> <p>귀측은 우리의 군사훈련이 귀측을 가상적으로 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이것이 귀측에 위협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음.</p> <p>그러나 귀측이 노동당 규약 등에 적화 정책을 명시하고 있을뿐 아니라 우세한 공세적 전력을 휴전선 일대에 전진배치하고 있는 상황 등은 우리측을 1년내내 위협과 불안속에 살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임.</p> <p>우리측은 이와 같은 남북 군사관계에 있어 자위적인 대응조치의 하나로 팀스피리트 군사연습을 시작하게 된 것임.</p> <p>특히 귀측이 모든 군사훈련을 비공개리에 실시하고 있는 점과 우리측보다 우세한 군사력을 유지·증강시켜 온 점 등은 우리측으로서는 그냥 무시간과할 수 없는 안보 상황임.</p> <p>나는 어제 기조연설을 통해 1991년 1월 1일을 기해 45일전에 예정된 군사훈련을 서로 통보하고 참관 초청기로 하자</p>	<p>리 나라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으며 북남대화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음.</p> <p>미국의 핵전쟁전략과 핵타격전술에 기초하여 방대한 핵무력이 동원되는 가운데 벌어지는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엄중히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핵전쟁 연습임. 미국과 함께 동족을 반대하여 이러한 전쟁연습을 한다는 것은 민족적 견지에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며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현시대의 추세와 단합과 통일을 지향하자고 하는 우리들의 염원에도 어긋나는 것임.</p> <p>우리가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에게 남침할 의사도 힘도 없으며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큰 규모의 군사연습을 중지한지도 벌써 오래임. 남조선에서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고 정세를 긴장시킬 까닭은 아무것도 없음. 우리는 이와 같은 립장에서 이 군사연습을 그만둘데 대하여 시종일관 강조하여 왔으며 군사연습을 하더라도 외국군대의 참가없이 자기 군대만 가지고 하며 연습규모도 대폭 줄이며 그 명칭도 고칠것을 거듭 제기하여 왔음.</p>

우 리 측	북 측
<p>는 우리측의 제의를 귀측에 다시 한번 상 기시키고자 함.</p> <p>남북 쌍방은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들 에 합의하고 착실히 실천해 나감으로써 더이상 팀스피리트 훈련이 불필요하게 되는 상황을 조성해 나가는데 서로 노력 해야 함.</p> <p>나는 전방에 배치된 귀측 공격전력으 로부터 위협이 제거되고 우리측을 적대 시하는 정책이 수정되어 나감으로써 귀 측의 침공에 대한 위협이 감소하게 되면 언제든지 팀스피리트 훈련을 조정할 용 의가 있음을 밝혀두는 바임.</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고위급 제1차 회담)</p>	<p>군사분야에서 당면한 해결을 기다리는 초미의 현안문제는 팀스피리트 합동군사 연습을 중지하는 문제임.</p> <p>우리가 회담을 시작하면서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제 몇달후에 또다시 핵무기 를 비롯한 최신전쟁수단으로 장비된 대 규모의 병력이 미본토를 비롯한 해외의 미국군사기지들로부터 남조선에 밀려들 어 우리를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이 남조 선 전역에서 벌어지게 될 것임.</p> <p>그렇게 되면 좋게 출발한 우리의 회담 은 물론 모든 북남대화들이 또다시 일시 에 중단되고 모처럼 화해의 기운이 감들 기 시작한 북남관계는 다시 긴장해지게 될 것이며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는 핵전 쟁의 검은 구름이 짙게 드리우게 될 것 임.</p> <p>사실상 우리에게 이 팀스피리트 합 동군사연습이 언제 실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담보할 수 없음.</p> <p>지난해에 그것이 없었다고 하여 올해 에 없다는 보증도 없으며 올해에 없었다 고 하여 다음해에 가서 무사하리라고 기 대할 수도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처한 엄연한 현실인 것임.</p>

우 리 측	북 측
	<p>이처럼 위험천만한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이 계속 강행되는 속에서 회담을 열고 완화와 통일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자기기만이며 민족을 우롱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음.</p> <p>그러므로 우리가 이번에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만큼 이왕이면 회담을 성공시켜 나가기 위하여 최소한 2~3년정도는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그만두도록 하자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주장인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남북고위급 제1차 회담)</p>
<p>귀측은 이른바 긴급과제의 하나로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를 주장하고 있음. 다만 이에 앞서 먼저 상대방에 대한 기습공격의 위협을 제거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일부터 착수해야 할 것임.</p> <p>한반도에서는 군사적 긴장과 대결상태는 6·25의 경험과 그 이후에 상존하는 불신과 위협 때문에 더욱 고조되고 있는 것임.</p> <p>남북간에 기습공격의 위협이 제거되고 신뢰가 구축되면 귀측이 중지를 요구하는 군사훈련 같은 것도 더이상 필요없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게 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남북고위급 제2차 회담)</p>	<p>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은 대결시대의 유물이며 70년대에 시작된 이 군사연습을 완화와 단합을 지향하는 오늘날에 와서도 계속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임.</p> <p>더욱이 외국군대의 철수가 추세로 되고 있고 모든 나라들이 자주를 지향해 나가고 있는 때에 구태의연하게 외국군대와 함께 동족을 겨냥한 핵전쟁연습을 벌인다는 것은 민족적 결지에서도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p> <p>우리가 거듭 천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남침할 의사가 없으며 남조선에 배치된 1천여개의 핵무기를 상대로 하여 싸울 능력도 없음.</p>

우 리 측	북 측
	<p>만일 귀측이 실지로 북으로부터의 어떠한 위협을 느낀다면 외국군대와 함께 전쟁연습을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군축제안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임.</p> <p>7천만겨레에게 통일의 기쁨이 아니라 핵전쟁의 참화를 들씌우게 될 극히 위험한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그것은 시급히 중지되어야 함.</p> <p>귀측이 이 합동군사연습을 완전히 중지할 수 없다면 북남고위급회담을 위해서 이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잠정적으로라도 중지할 용의를 가져야 할 것임.</p> <p style="text-align: right;">(남북고위급 제2차 회담)</p>
<p>우리의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은 귀측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여 전쟁의 재발을 방지하고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방어적인 훈련인 것임.</p> <p>지금도 귀측의 군사정책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방대한 무력과 공격 능력은 상존하고 있다고 보임.</p> <p>특히 우리국민의 1/4이 살고 있는 수도 서울은 휴전선으로부터 불과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귀측 전투부대의 전진배치는 우리에게 명확하고도 심각한</p>	<p>첫째로, 북남고위급회담의 중단을 막고 그의 원만한 추진을 보장하기 위하여 내년에는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하지 않으며 그 이후 문제는 앞으로 구성될 북남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야함.</p> <p>군사적대결상태를 해소할데 대한 문제가 본회담의 가장 긴절한 과제로 일정에 오른 이때 상대방의 면전에서 도전적인 핵전쟁연습을 감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임.</p> <p>귀측이 진실로 민족자주적인 입장에서</p>

우 리 측	북 측
<p>위협을 주고 있으며, 귀측의 전투기는 불과 10분 이내에 우리 수도권내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년 365일 내내 긴장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p> <p>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측은 유사사에 대비한 방어대책으로 탐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임.</p> <p>탐스피리트 훈련은 서로간에 신뢰가 회복되고 무력에 의한 군사적 위협이 제거될 때 그때는 불필요하게 될 것임.</p> <p>따라서 귀측은 우리에게 탐스피리트 훈련을 중지하라고 요구하기에 앞서 귀측이 공세적으로 전진배치하고 있는 부대를 후방으로 이동배치하여야 함.</p> <p>아울러 과도하게 초과 보유하고 있는 귀측의 공격용 무기를 폐기함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위협적 요소를 제거해야 함.</p> <p>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귀측의 군사적 위협이 줄어들어 대규모의 군사훈련이 중국적으로 무의미하고 불필요하게 될 정도로 남북간의 참다운 평화정착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p> <p style="text-align: center;">(남북고위급 제4차 회담)</p>	<p>우리와 문제를 해결하자고 하면 외국군대를 끌어들여 그의 보호를 받거나 외국군대의 침략전쟁연습에 가담하는 것과 같은 민족의 존엄에 저촉되는 일을 더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임.</p> <p>귀 당국이 계속 미군과 함께 탐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자주적인 실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 줄뿐임.</p> <p>우리는 이런 점으로 보아도 탐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완전히 중지하여야 하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구성될 북남군사공동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하고 최소한 내년 한해만이라도 그것을 중지하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p> <p style="text-align: right;">(남북고위급 제4차 회담)</p>

나. 기타 훈련

우 리 측	북 측
<p>「포커스렌즈」훈련은 해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임, 그런거는. 거기서는 군사훈련 안하는가? 군사훈련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또 수시로 하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할 일이 못됨.</p> <p>군사훈련이라는 것이 잠깐사이에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해서 하자 그러는게 아니지 않는가. 날짜도 미리 1년전에 잡아가지고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야기 하지 말기바람.</p> <p>(노부모방문 제6차 적십자 실무접촉)</p>	<p>며칠전 보도에 의하면 8월 19일부터 12일동안 수많은 군대와 함께 「반」전쟁에 동원되었던 미국의 최신예 전투폭격기들과 공중경보기, 현대식 미사일들이 동원된 가운데 「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을 벌인다고 함.</p> <p>북남합의서가 발효되고 그 이행이 일정에 오르고 있는 때에 귀측이 또다시 미국과 함께 우리를 가상적으로 하는 대규모 군사연습을 벌려 놓으려 하는 것은 북남합의서를 이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직 대결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달리 볼 수 없는 것임.</p> <p>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귀측이 「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을 쌍방이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을 교환하기로 합의한 바로 그 시기에 벌이려고 하고 있는 사실임.</p> <p>이것은 귀측의 말로는 다른 모든 교류를 차단하는 조건에서도 인도적 교류만은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던 귀당국의 발언도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p> <p>그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는 8월 19일부터 12일</p>

우 리 측	북 측
	<p>동안 진행한다는 「포커스렌즈」 합동군사 연습과 관련된 문제임.</p> <p>우리는 화약내 풍기는 전쟁연습이 벌어지는 곳으로 또 우리를 가상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좀 진짜 전향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함.</p> <p>(노부모방문 제6차 적십자 실무접촉)</p>
<p>셋째로, 군사훈련 「포커스렌즈」에 관한 문제임. 이거는 참으로 지난번에 귀측에서 새로운 문제로 제기돼서, 귀측은 우리 보고 훈련을 해서 이 사업을 연기하려고 하거나, 뭐 어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따져보면,</p> <p>날짜를 25일부터 잡은 것이 우리 날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18일부터 하자, 그런데 귀측이 25일부터 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잡은 것이고. 그것이 귀측에서는 우리가 그 기간을 잡아서 훈련과 관련해서 이 사업을 연기시키고자 한다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그것은 오히려 속된 말로 말도 안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음.</p> <p>이 군사훈련은, 군인들이 유사시를 대비해서 그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훈련을 함. 소대급 훈련, 중대급, 대대급 이렇게</p>	<p>다음으로 귀 당국이 미국과 함께 「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을 벌이려고 하는 문제임.</p> <p>솔직히 말해서 귀 당국이 8월 19일부터 12일간 수많은 군대와 함께 「만」전쟁 때 사용하였던 최신에 무장장비를 동원하여 「포커스렌즈」 군사훈련을 벌이려고 하는 것은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교환을 가로막기 위한 고의적인 행위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음.</p> <p>「포커스렌즈」 합동군사훈련이 우리를 가상 적으로 하는 대규모 공격연습이라는 것은 비밀이 아님. 그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더 언급하지 않으려고 함.</p> <p>북남사이에 불가침이 합의된 오늘에 와서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중지로 생긴 공백을 메운다는 구실밑에 여러</p>

우 리 측	북 측
<p>일년동안에 계속, 아마 박선생님도 군대를 다녀오셨을 줄 아는데 군대 가면 훈련을 작은 것, 큰 것 즉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이것은 이미 연중계획에 의해서 다 하는 훈련인데 그것을 지금 여기서 해라, 하지 말라 할 그런 성격이 아님.</p> <p>또 더구나 인도주의적인 문제에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얘기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님. 이렇게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를 함.</p> <p>(노부모방문 제7차 적십자 실무접촉)</p>	<p>가지 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여오다 못해 이제와서 미군과 함께 대규모 군사연습까지 벌이는 것은 명백히 북남합의서에 대한 유린이고 우리에게 대한 참을 수 없는 도발이 아닐 수 없음.</p> <p>더욱이 우리가 엄중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귀측이 「포커스렌즈」 훈련을 쌍방이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을 교환하기로 합의한 바로 그 시기와 일치시켜서 벌이려고 하고 있는 사실임.</p> <p>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사업과 상대방을 반대하는 대규모 군사연습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음. 방문단교환이 북남합의서 이행의 첫선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숭고한 사업이라는데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음.</p> <p>반면에 「포커스렌즈」 군사연습은 귀측이 미국과 함께 우리를 공격하기 위하여 벌여놓은 대규모 전쟁연습으로서 북남사이의 화해와 완화에 근본적으로 역행하는 반평화적이고 반대화적인 행위임</p> <p>「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면 우리나라의 정세는 더욱 격화되고 북남관계는 악화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도 어렵게 될 것임.</p>

우 리 측	북 측
	<p>결국 귀 당국이 「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을 방문단교환 시기와 일치시켜 벌이려는 것은 남에게 책임을 씌워서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사업을 유산시키기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책동이라고 밖에 우리는 달리 볼 수 없음.</p> <p>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교환은 귀 당국에 의해서 엄중한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음.</p> <p>그러므로 귀 당국이 8월 하순부터 벌이려고 하는 도발적인 「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이 무조건 중지되어야 함.</p> <p>귀 당국이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을 교환하기로 한 시점과 일부러 맞추어서 「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을 벌이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음.</p> <p>귀 당국은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을 가로막는 「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 계획을 취소해야 하며 그를 명백히 공포해야 함.</p> <p>(노부모방문 제7차 적십자 실무접촉)</p>

우 리 측	북 측
<p>셋째, 「포커스렌즈」훈련 문제임.</p> <p>귀측은 「포커스렌즈」 훈련이 방문단 교환기간과 같은 시기에 실시되기 때문에 방문단 교환을 합의된 날짜에 성사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심지어는 우리측이 방문단 교환에 장애를 조성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까지 덮어 씌우려 하고 있음.</p> <p>「포커스렌즈」 훈련은 연례적인 도상훈련에 불과한 것으로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귀측이 이 훈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한번도 없었음.</p> <p>또한 훈련날짜는 우리가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 교환날짜에 합의하기 훨씬 이전부터 확정되어 있었던 것임.</p> <p>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귀측의 주장이 얼마나 터부니없는 억지에 불과한 것인가를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임.</p> <p>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이산가족 노부모방문단의 교환에 하등의 장애가 될 것이 없는 군사훈련까지 방문단 교환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노부모방문단의 교환을 무산시키기 위한 한갓 구실에 불과한 것임.</p> <p>(노부모방문 제9차 적십자 실무접촉)</p>	<p>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귀당국은 노부모방문자 명단 교환을 불과 엿새 앞두고 진행하는 제6차 실무대표접촉과 때를 같이해서 방문단을 교환하기로 한 바로 그 시각에 「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을 벌일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였음.</p> <p>이와 관련해서 귀측이 군대는 훈련을 하기 마련이라고 강변하지만 그런 말로서는 방문단교환 사업 앞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는 책임에서 절대로 회피할 수 없음.</p> <p>우리는 「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이 지난 수십년 동안 주로 미군 전투 부대의 참가없이 도상훈련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북남고위급회담이 진행되던 1990년과 지난 해에는 공개하지 않고 내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음.</p> <p>그런데 귀당국이 금년에는 미군 전투부대뿐 아니라 미국이 「만」전쟁에 출동시켰던 최신예 군사장비들까지 대규모 동원해서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대신으로 「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을 벌이려고 하고 있음.</p> <p>귀측이 방문단 교환을 눈앞에 두고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중지로 생긴 공백을 메운다는 구실밑에 미국과 함께 우리를 적으로 하는 대규모 군사연습</p>

우 리 측	북 측
	<p>을 벌려 놓으려고 하는 것은 북남합의서 정신을 공공연히 유린하는 행위이며 우리에게 대한 참을 수 없는 도발이 아닐 수 없는 것임.</p> <p>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더욱이 간과 할 수 없는 것은 귀측이 「포커스렌즈」 합동 군사훈련을 본 실무대표접촉에서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을 교환하기로 합의한 바로 그 시기와 일치시켜서 벌리려고 하는 사실임.</p> <p>귀측이 「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을 꼭 8월말에 진행해 온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번에 방문단교환 시기에 맞추어서 「포커스렌즈」 군사훈련을 벌리겠다고 공포한 사실을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하는 것임.</p> <p>이것은 노부모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 사업에 또다른 걸림돌을 만들어 놓는 방법으로 그것을 유산시켜 놓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보려는 계획적이고도 의도적인 행위로 밖에 달리 볼 수 없는 것임.</p> <p>(노부모방문 제8차 적십자 실무접촉)</p>

[부 록]

1. 군사문제 쌍방주장 전문(성명, 담화, 논평 등)

가. 신뢰구축 및 군축 문제

나. 불가침 및 평화협정 문제

다. 군사훈련 문제

2. 군사문제 관련 합의서

가. 남북기본합의서

나. 남북불가침 부속합의서

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합의서

1. 군사문제 쌍방주장 전문(성명, 담화, 논평등)

가. 신뢰구축 및 군축 문제

〈북한측〉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제63차회의, 허담 보고

(1974. 11. 9)

(전 략)

오늘 남조선에 미제침략이 계속 머물러 있을 어떠한 이유와 구실도 없습니다.

요즘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거를 어떻게 하나 모면해 보려고 남조선에 있는 미군이 이제는 「유엔군」이 아니라 이른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머물러 있다느니 조선정전협정이행과 관련한 그 어떤 담보조건없이 「유엔군」이 철거하면 조선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날 위험이 있다느니 하고 떠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는 어리석은 기만술책입니다.

미군의 남조선주둔을 「유엔군」의 이름을 가지고서도 합법화할 수 없게 된 지금에 와서 미제와 남조선의 매국도당 사이에 꾸며진 그 무슨 「조약」이란 것을 가지고 합법화해 보려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험잡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담보」조건없이 「유엔군」이 남조선에서 나간다면 전쟁위험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라는 미제의 논조는 더우거나 황당무계한 소리입니다.

조선에서의 정전의 유지는 미국군대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된 평화우호적인 노력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들고나온 궤변은 결국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더이상 머물러 있을 구실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여 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 공화국정부는 조선에서 전쟁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유지공고화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려는 진지한 입장에서 출발하여 지난 3월 미국군대가 남조선에 철거하는 조건에서 우리 공화국과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중요한 제의를 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이 평화적 발기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조선과 극동지역에서의 평화유지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면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우리의 제의에 응당 대답을 하여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일본군국주의자들도 현 남조선통치배들을 부추기고 뒷받침해 주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올해 유엔총회가 37개국 공동결의안대로 남조선에 있는 미군에게서 「유엔군」의 모자를 벗기고 그들을 완전히 철거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조선인민이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신의 손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이미 성숙될대로 성숙된 문제이며 어떠한 힘도 그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입니다.

「유엔군」의 간판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조치가 취해질 때 그것은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가시고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획기적 전환의 계기로 될 것입니다.

남조선에서 외국군대가 나간 다음 조선인민은 자신의 손으로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후 략)

(1977. 1. 25)

(전 략)

2.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여 핵전쟁의 위협을 제거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와 같이 크지 않은 땅위에 지금처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밀도를 가진 방대한 무력이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대치되어 있는 것은 그 자체가 긴장을 조성하고 불안을 가져오는 근원으로 되고 있다.

더욱이 나라안에 외국군대가 있고 원자핵무기까지 배치되어 있는 형편에서는 항시적인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한핏줄을 이은 조선의 수백만 청장년들이 서로 총을 겨누고 민족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까지 커다란 지장을 주면서 귀중한 민족의 힘과 재부를 헛되이 소모하는 불합리한 사태는 더는 참을 수 없다. 하물며 남조선 청장년들이 외래제국주의자들이 쥐어준 총을 메고 핵전쟁의 위협까지 무릅쓰면서 「공산주의방과제」가 되어야 하는 그 치욕을 어느 누가 용납할 수 있겠는가.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북과 남의 군사적 대치상태는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하며 긴장상태는 완화되어야 한다.

남조선에서 핵기지는 철폐되고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살인무기들은 즉시 철수되어야 하며 미국군대는 무조건 철거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북과 남의 무력을 대폭 축소하고 군사비를 삭감하여 인민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는데 돌려야 한다.

우리는 북과 남의 제정당, 사회단체들과 전체 인민들이 쌍방 당국에 이상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그 실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열렬히 호소한다.

동시에 미국군대가 철거하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고 군대와 군비

를 축소하고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반입을 중지하기 위한 군비축소회담을 열도록 해당 군사당국에 요구할 것을 제의한다.

(후 략)

○ 한반도에 비핵평화지대 창설 제안 성명

(로동신문, 1986. 6. 24)

평화는 인류의 가장 귀중한 념원이며 한결같은 지향이다.

오늘 지구상의 수억만 인민들은 세계에 영원한 평화가 깃들고 언제나 평화롭게 살 것을 바라고 있다.

특히 세계인민들은 국제평화의 해인 올해가 지구상에서 핵전쟁의 위협을 가시고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획기적인 계기로 되기를 열망하면서 반전비핵 평화운동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그러나 인류의 절절한 념원과 다르게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핵무기의 시험, 생산축적에 계속 열을 올리고 있다.

핵군비증강책동으로 하여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전쟁의 위협은 날을 따라 더욱 더 커가고 있다.

오늘 세계적으로 핵전쟁의 위협이 가장 짙은 곳은 조선반도이다.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의 위협은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세계평화위업앞에 지닌 자기의 중대한 사명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협을 가시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의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공화국정부는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남조선에서 모든 핵무기들을 철수시키고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전환시킬데 대한 정당한 방안들을 내놓았으며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하고 그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고 있다.

공화국정부는 우리와 미국 그리고 남조선측도 참가하는 3자회담을 열고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은 것을 비롯하여 조선에서 핵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공고히 하며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의 길을 열어나갈데 대한 평화적 제안들을 수많이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그러나 공화국정부의 합리적인 제안들은 그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였다. 오늘 조선반도는 가장 위험한 핵전쟁발원지로 되고 있다.

남조선에는 핵폭탄과 핵포탄, 중성자무기를 비롯한 1,000여개의 각종 핵무기들이 반입, 배치되었으며 그의 총폭발력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000배에 이르고 있다.

남조선은 극동지역 전체에 전개된 미국핵무기의 절반이상이 집중된 극동최대의 핵기지로, 핵무기배치밀도에서 나토보다 4배나 더 높은 세계 제1의 핵기지로 되었다.

미국은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공공연히 위협하고 있으며 남조선에서 핵작전계획을 짜놓고 핵시험전쟁을 가상한 전쟁연습을 계속 벌여놓고 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곧 핵전쟁으로 되고 쉽게 조선경외로 번져가 세계적인 핵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

남조선에서 핵무기가 제거되어야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화근이 없어지고 조선인민뿐 아니라 우리 주변나라 인민들의 핵위협을 모르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제거하는 것은 조선의 평화뿐 아니라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이다.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막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자면 무엇보다 먼저 조선반도를 핵무기, 핵기지가 없는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올해 국제평화의 해에 즈음하여 고조되고 있는 세계인민들의 평화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여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

지대로 만들데 대한 자기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내외에 천명한다.

첫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반입을 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기지를 포함한 모든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무기들이 자기의 영토, 령공, 령해를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미국정부는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념원에 맞게 남조선에 대한 새로운 핵무기반입을 중지하며 이미 반입한 모든 무기들을 단계별로 축감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완전히 철수하며 조선반도에서 핵무기사용과 관련한 모든 작전계획들을 취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미국정부와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우리의 제의와 관련하여 그 어떤 협상이 필요하다면 그 협상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에 어느때나 응할 것이다.

조선반도에 비핵지대, 평화지대를 창설할데 대한 제안은 국제평화의 해인 율해에 이 지역에 조성된 긴장한 정세를 완화하고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견지에서 보나, 아세아와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견지에서 보나 가장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제안이다.

조선에 비핵지대, 평화지대가 창설되면 이 지역에서 인류에게 무서운 핵참화를 들썩우게 될 핵전쟁의 위험은 사라질 것이며 인류가 마음놓고 살 수 있는 항구한 평화가 담보될 것이다.

미국이 진심으로 평화를 귀중히 여긴다면 공화국정부의 평화적 제의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평화를 사랑하는 조선인민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조선문제로 하여 새 세계전쟁, 열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공화국정부와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전세계 평화애호나라 정부들과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만들며 조선과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사회주의나라들과 뿔럭불

가담 나라들, 세계 모든 진보적인 나라 정부들과 정당, 사회단체들, 국제기구들과 국제민주단체들, 반제평화애호단체들과 투쟁조직들, 각국의 평화애호인사들과 각계층 인민들이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조선반도를 비핵지대, 평화지대로 전변시키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적극적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해주며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철수하고 핵기지들을 철폐하기 위한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주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성명

(1987. 7. 23)

(전 략)

조선반도에서의 첨예한 군사적대치상태는 오직 완전한 군축을 실현함으로써만 해소될 수 있다.

남조선에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민주정권이 선다고 하여도 지금처럼 북과 남이 방대한 무력을 유지하면 평화와 안전이 담보될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통일된 강토에서 영원히 전쟁과 불안을 모르고 평화롭게 살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열망에 맞게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 데서 결정적국면을 열어놓기 위하여 대규모적인 단계적 무력감축을 실현할데 대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조선에서 북과 남의 무력균형을 서로 무력을 증강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서로 무력을 축감하는 방법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 원칙에 따라 북과 남은 1988년부터 1991년까지 3단계에 걸쳐 무력을 축소하며 1992년부터 각각 10만이하의 병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북과 남의 병력이 먼저 단계적으로 축소되는데 따라 남조선주둔 미군도 단계적으로 철수하며 북과 남의 무력이 10만으로 축소되면 미국은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력을 철수하고 군사기지를 철폐하여야 한다.

셋째, 조선의 북과 남은 각기 자기측의 무력축소정형을 상대측에 통고하고 세계에 공포하여야 하며 미국은 자기 군대의 철수정형을 우리측에 통지하고 세계에 공포하여야 한다.

현재 판문점에 있는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조선의 북과 남에서의 무력축소정형과 미군철수정형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하여야 한다.

넷째, 북과 남의 병력이 축소되는 기간과 그 이후에도 있을 수 있는 무력충돌의 위협성을 방지하며 계속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여기에 중립국감시군을 주둔시킨다.

다섯째, 조선반도에서의 무력축소와 철수 및 그에 대한 검증문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로의 전환,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능확대와 중립국감시군 조직 및 그 배치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조선의 북과 남, 미국사이의 회담에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들인 뵘스까, 체스꼬슬로벤스꼬, 스위스, 스웨리에 대표들이 방청으로 참가하는 다국적인 군축협상을 1988년 3월 제네바에서 진행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에서 실제적인 무력축소의 돌파구를 열기 위하여 1987년말까지 조선인민군 10만명을 일방적으로 줄일 것이다.

조선반도에서 북과 남의 무력이 대폭 축소되고 외국군사기지가 철폐되며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가 평화복도로 전환되면 조선은 그 누구에게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 비핵평화지대, 완충지대로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군축제안이 실현되면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기본요인이 영원히 제거되고 나라의 평화통일에 밝은 전망이 열려질 것이다.

또한 우리의 군축제안은 완화와 군축으로 나가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는 것으로서 그의 실현은 아세아, 태평양 지역의 정세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제안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에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성의있는 공동의 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완화를 진정으로 이룩하

려는 우리의 제안에 대하여 의심부터 앞세우지 말고 대세의 흐름에 맞게 심사숙고하여야 하며 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조선에서의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들도 우리의 평화적발기에 적극 호응해 나서리라 하고 기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전세계 평화애호나라 정부들과 인민들의 지지 성원밑에 조선반도에서 완전한 군축을 실현하여 영원한 평화가 깃들게 하며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정무원 연합회의에 관한 보도

(로동신문, 1988. 11. 8)

(전 략)

연합회의는 이러한 입장에서부터 우선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한 공동의 기초로서 다음과 같은 평화보장 4원칙을 제기하였다.

첫째로, 조선반도의 평화는 나라의 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평화는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분열된 우리 나라에서 평화는 결코 그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두개 조선>으로 분열을 고정화하기 위한 <평화>로 되어서도 안된다.

우리 민족에게는 평화도 귀중하지만 통일은 보다 더 귀중하다. 이른바 <평화정착>이라는 간판밑에 평화는 분열주의적인 <두개 조선> 조작에 이용하려는 시도는 배격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통일을 위한 평화만이 진정한 평화이며 따라서 평화는 반드시 통일지향적인 것으로 되어야 한다.

둘째로, 조선반도의 평화는 외국무력의 철수에 의하여 담보되어야 한다.

외국무력의 존재는 우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가로막고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요인이다.

우리 나라의 절반땅에 외국군대가 틀고 앉아 있는 한 평화는 실현될 수 없으며 외국무력을 그대로 두고 평화에 대하여 논한 것은 공담에 불과하다.

조선반도의 평화는 오직 외국무력의 철수에 의하여만 공고히 담보될 수 있다.

셋째로, 조선반도의 평화는 북과 남의 군축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북과 남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무력은 쌍방에 다같이 무거운 부담으로 될 뿐 아니라 무력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된다.

경쟁적인 무력증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힘의 균형을 통해서만 절대로 전쟁을 막을 수 없다.

북과 남사이의 무력충돌을 막자면 쌍방이 힘의 입장에 서서 군비경쟁을 하지 말아야 하며 무력을 최소한도로 줄이여 상대방에 대한 공격능력을 제거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의 평화는 남조선에서 외국무력을 철수시키는 것과 함께 북과 남사이에 균형있는 군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항구적인 것으로 될 수 있다.

넷째로, 조선반도의 평화는 긴장격화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의 대화를 통하여 실현되어야 한다.

긴장격화의 요인은 조선반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으며 그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다른 나라들이 아니라 남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과 조선의 북과 남이다.

조선반도안에 있는 전쟁의 화근을 외면하고 조선문제 토의에 이려저려한 나라들을 끌어들여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는 평화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통일지향, 외군철수, 북남군축, 당사자협정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보장 4원칙을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필수불가결의 원칙이며 평화문제를 우리 민족의 이익에 맞게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공동의 이정표이다.

북과 남이 이 평화보장원칙을 함께 확인하고 그를 성실히 이행한다면 우리

나라에서 평화는 가장 빠른 시일안에 가장 공고하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연합회의는 평화보장 4원칙에 기초하여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에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포괄적인 평화방안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반도에서 평화의 담보를 마련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와 미국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과 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하며 남조선에서 미국군대와 핵무기를 철수시키고 북과 남의 무력을 단계적으로 대폭 줄여야 합니다.》

연합회의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 데서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존재가 가장 큰 장애로 되며 이 문제의 해결은 북남사이의 긴장완화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연합회의는 완화와 평화에로 나가는 현 추세는 남조선에서 미군무력의 철수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성숙된 요구로 상정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조선반도에 존재하는 모든 현존무력의 단계적인 축감과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의 완화를 예견하는 다음과 같은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제기하였다.

1.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사이의 군축방안

1) 미군무력의 단계적 철수

- ① 미국은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가져올 핵무기들을 우선적으로 철수한다.

핵무기의 철수는 1990년말까지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1단계(1989년말까지)에서는 먼저 북위 35도 30분 이북지역에 배치된 핵무기를 철수하며 2단계(1990년말까지)에서는 그 이남지역의 핵무기를 철수한다.

- ② 미국은 남조선주둔 미군병력을 철수한다.

미군병력의 철수는 1991년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1단계(1989년말까지)에서는 미군사령부와 함께 지상군을 북위 35도 30분 이남의 부산, 진해 계선으로 일단 철수하며 2단계(1990년말까지)에서는 지상군의 전체를 남조선에서 완전히 철수하며 3단계(1991년말까지)에서는 해, 공군의 전체를 철수한다.

- ③ 미국은 미군무력을 철수하는 날부터 남조선에 새로 무력을 투입하거나 군사장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 ④ 미국은 남조선에게 철수하게 될 핵무기를 포함한 일체 무기와 전투 기술기재들을 남조선에 넘겨주지 않는다.

2) 북남무력의 단계적 축감

- ① 북과 남은 서로 병력을 축감하는 방법으로 무력균형을 유지한다.
병력의 축감은 군사분계선 전연지대에 배치된 병력과 특수부대, 육전대병력부터 먼저하는 원칙에서 1991년말까지 3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북과 남의 병력수는 각각 1989년말까지 40만명, 1990년말까지 25만명수준으로 축감하여 1992년부터는 10만명 이하로 유지한다.
- ② 북과 남은 병력축감에 상응하게 군사장비를 단계별로 축감한다.
군사장비의 축감은 단계별 병력축감에 맞게 하되 핵무기와 화학무기를 비롯한 특수무기는 1단계에서 완전히 폐기한다.
무력의 축감이 시작되는 때로부터 외부로부터의 군사장비의 반입을 중지한다.
- ③ 북과 남은 무력축감이 시작된 때로부터 6개월안에 모든 민간군사조직을 해체한다.

3)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에 대한 통보와 검증

- ① 미군무력의 철수정형에 대하여 미국은 북측에 통지하고 북남무력의 축감정형에 대하여 북과 남은 상대측에 각각 통지하며 호상 통지한 내용을 공개한다.
- ② 판문점에 있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능을 확대하여 미군무력의 철수정형과 북남무력의 축감정형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사업을 진행하

게 한다.

4) 북과 미국, 남조선 사이의 3자회담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하여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회담이 마련되어야 한다.

- ①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회담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남조선이 참가하는 3자회담을 진행한다.

3자회담의 테두리안에서 조미, 북남사이의 쌍무회담도 할 수 있다.

- ② 3자회담에서는 단계적인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에 대한 검증문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능확대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들인 뿔스까, 체스꼬슬로벤스꼬, 스위스, 스웨리에 대표들을 방청으로 참가시킨다.

- ③ 3자회담에서는 미군무력의 철수와 북남무력의 축감문제를 합의한데 기초하여 그것을 조미사이의 평화협정과 북남사이의 불가침선언으로 확인하고 고착시킨다.

2. 북과 남 사이에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1) 정치적 대결상태의 완화

- ① 북과 남은 호상 비방중상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상대방에 대한 지명공격을 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에 대한 비방중상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상대측 지역에 대한 삐라살포와 군사분계선일대의 전연 방송을 중지한다.

- ② 북과 남은 상대방을 비난하고 대결을 고취하는 정치행사를 중지한다. 상대방의 체제를 부정하는 법규들을 철폐한다.

- ③ 북과 남은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현한다.

북과 남은 정당, 단체와 개별인사들의 쌍무적, 다무적 접촉과 자유로운 인사내왕을 실현한다.

북과 남은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이용하며 상품교류를 실현한다.

북과 남은 교육과 과학기술, 문화예술, 보건,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과 교류를 실현한다.

북과 남은 국제무대에서 대결하거나 경쟁하지 않으며 공동협력을 실현한다.

2) 군사적 대결상태의 완화

- ① 북과 남은 쌍방 무력의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든다.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는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국 군사인원들로 조직된 중립국 감시군을 배치한다.

- ② 북과 남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대규모군사연습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전후방에서 연합부대이상의 군사훈련을 중지한다.

북과 남은 규모여하를 막론하고 외국군대와의 합동군사연습을 일체 중지한다.

- ③ 북과 남은 군사분계선일대의 지상과 해상 및 공중에서 무력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일체 군사행동을 중지한다.

- ④ 북과 남은 우발적인 충돌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쌍방 고위 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를 개설한다.

3) 북남사이의 고위급 정치군사회담

북남사이의 당면한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을 진행하여야 한다.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에는 실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권을 가진 쌍방의 고위급 정치군사대표가 참가한다.

북남고위급 정치군사회담의 테두리안에서 고위급 정치회담과 군사회담을 따로 할 수 있다.

연합회의는 이상의 포괄적인 평화방안이 북남사이에 조성된 첨예한 대결과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믿음직하게 담보하는 가장 합리적인 평화강령이라고 일치하게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포괄적인 평화방안이 실현되면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근원이 제거되고 핵전

쟁의 위험도 사라지게 될 것이며 전쟁의 온상으로 간주되어온 조선반도는 안전한 비핵평화지대로 전환될 것이다. 수십년동안 지속된 북과 남사이의 오해와 불신, 반목과 대결의 역사는 끝장나고 우리 나라에는 화해와 신뢰와 단합의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 모든것이 온 민족에게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대한 새희망을 안겨주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우리의 포괄적인 평화방안에는 완화와 평화를 지향하는 시대의 추세와 나라의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민족의 간절한 염원이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는 조선반도정세의 완화를 바란다고 하는 미국과 그리고 군축을 비롯한 군사문제를 협의하겠다고 하는 남조선당국자의 의사가 충분히 고려되어 있다.

세상사람들은 우리의 포괄적인 평화방안에 대한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태도에서 그들이 한 말의 진실성여부를 가려보게 될 것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의 완화와 조미관계의 개선을 바란다면 문화분야의 부분적인 교류와 외교관접촉, 식료 및 의약품 판매 등 극히 제한된 문제들을 가지고 누구에게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조선문제 해결의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마땅히 우리 나라의 평화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길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남조선당국도 유엔무대에 가서 군축을 하고 불가침문제를 협의하겠다고 한 말이 진실이라면 구태의연하게 미국에 <안보협력>을 요청하거나 그 무슨 <국제적 환경조성>에 낚을 돌릴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 나라 땅에서 전쟁의 화근을 제거할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후 략)

○ 「비핵지대화」 관련 북한 외교부 성명

(로동신문, 1990. 7. 30)

현시기 인류의 관심은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축감하고 그 위협을 제거하며 핵무기전파를 방지하는 데로 쏠리고 있다.

남조선땅에서 전개되어 있는 방대한 량의 핵무기와 그 위협성으로 하여 조선반도는 세계적인 초점으로 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당, 단체 연합성명과 관련한 국제적인 반응은 조선반도에서 날로 커가는 핵위협에 대한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우려와 그리고 이 지역의 비핵화를 바라는 그들의 지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세계 여러 지역의 정세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유독 조선반도에서 정세가 완화되지 않고 더욱 더 격화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핵위협 정책과 핵무기존재에 전적으로 기인된다.

남조선에 배비된 핵무기는 우리 인민의 생존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 있으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도 커다란 위협을 조성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와 아세아,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숭고한 념원에서 이미 전에 조선반도의 비핵평화지대 창설제안을 비롯한 여러가지 평화발기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여 왔다.

오늘의 변화되고 있는 정세는 조선반도에서의 비핵지대 창설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성숙된 요구로 제기하고 있다.

조선반도를 핵대결의 작전지역으로 삼고 있는 주요핵무기소유국들이 서로 대결에서 협조어로 나가며 핵무기축감에 합의하고 있는 현실은 조선반도를 핵무기 없는 지대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객관적가능성을 조성해주고 있다.

미국은 최근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룩되는 조건에서 비핵지대 창설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중근동과 남아세아, 아프리카 지역의 비핵지대 창설제안에 지지를 표시해나서고 있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평화발기들을 사심없이 대하고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과 시대적흐름에 합류해나선다면 능히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을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다고 간주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제안을 천명한다.

1. 조선의 북과 남은 조선반도에 비핵지대를 창설하는데 합의하고 이를 공동으로 선언한다.

북과 남은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드는 문제와 관련한 모든 법률적 및 실천적 문제들을 협의하고 늦어도 1992년말 전으로 법적효력을 가지는 공동선언을 채택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공동선언에는 북과 남이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소유를 금지하는 문제, 조선반도 비핵지대의 령내에서 핵무기의 배비와 통과 및 관련 군사연습을 금지하는 문제, 북과 남에 대한 사찰의 방법으로 비핵상태를 검증하는 문제 등이 규제되어야 한다고 간주한다.

2. 미국과 조선반도주변의 핵무기소유국들인 소련과 중국은 조선반도가 비핵지대로 합의선포되는 차제로 그 지위를 법적으로 담보한다.

핵무기소유국들은 우선 조선반도가 비핵지대로 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그 지위를 담보할 용의를 표명함으로써 비핵지대 창설과정을 추동해야 할 것이다.

핵무기소유국들은 조선의 북과 남이 비핵지대 창설을 공동으로 선언한 때로부터 1년이내에 조선반도 비핵지대의 지위에 저촉되는 모든 요소들을 제거하고 국제법상 요구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하지 않을데 대한 담보를 하여야 한다.

특히 미국은 남조선에 핵무기를 배비한 당사자로서 조선반도의 비핵화의 요구에 부합되게 자기의 핵무기를 철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아세아의 비핵국가들은 조선반도가 비핵지대로 되는 것을 지지하며 그 지위를 존중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에 비핵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임의의 시기에 쌍무적 또는 다무적 협상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

이 제안은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을 제거하고 조선반도에서 핵무기전파방지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나아가서는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조선반도에 비핵지대화가 실현되면 동북아세아지역에 비핵지대를 창설하는데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것이며 동북아세아지역으로 비핵지대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될 것이다.

○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는 빠를수록 좋다.

(로동신문, 1990. 10. 21)

오늘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의 요구이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것으로서 더는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는 빠르면 빠를수록 조선의 통일을 촉진하게 될 것이며 우리 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는 빠를수록 좋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남조선강점 미군의 철수가 빠를수록 조선의 평화통일이 그만큼 앞당겨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이며 조선에서 전쟁의 위협을 낳는 항시적인 근원이다.

지금 미국은 남조선에서 물러갈 대신 남조선에 대한 영구강점을 꾀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남조선으로부터 침략무력을 끌어내갈 대신 무력증강을 다그치고 새로운 핵수단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와 함께 그들은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조치를 취할 대신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연습을 더욱 빈번히

벌려놓고 있으며 하늘과 땅, 바다에서 무장도발행위를 계속 감행하고 있다. 한마디로 미국은 조선의 분열을 고착시키기 위하여 미쳐날뛰고 있으며 북침 전쟁준비를 더욱 완성하고 있다. 이것은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 시종일 관 노력하고 있는 우리 인민에 대한 횡포한 도전이다.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미군이 남조선에서 물러가야 한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빨리 끝장내는 것은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해결하는 데서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절박한 문제이다.

미군의 남조선강점이 끝장나게 되면 우리 나라의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요 인과 우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 제거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선인민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할 수 있는 결정적으로 유리한 정세가 조성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오늘 전체 조선인민은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위업을 1990년대에 기어이 성취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신념에 넘쳐있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 의하여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과 그것을 구현한 합리적인 연방국가창립방안이 마련되고 통일운동이 전민족적범위에서 앙양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에서 새롭게 천명된 조국통일 5개방침은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온 민족의 이익에 맞게 가장 빨리 이룩할 수 있는 길을 환히 밝혀주고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조선동포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적인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의 합리적인 제안들과 주동적인 조치들은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입장과 진지한 노력의 표시로서 날이 갈수록 내외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다.

우리의 적극적인 평화통일노력에 남조선인민들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 그들은 반미자주, 통일구호를 전면에 제기하고 미군철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최근 남조선의 현대사회연구소가 각지 38개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남조선 강점 미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응답자의 80%이상이 분단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하면서 미군철수를 주장하였다고 한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실지 생활체험을 통하여 미군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주되는 장애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미제가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한 불행과 재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때문에 그들은 반미자주화의 기치밑에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군은 제집으로 돌아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미국깃발을 불태우고 미군사기지와 침략기관들을 공격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높아가고 있는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반미투쟁은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려는 굳센 의지의 발현이다.

미국이 남조선강점을 언제라도 지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망상이다.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가 빠를수록 그것은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데서도 좋을 것이다.

남조선에 4만여명의 미군과 1,000여개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는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공격하고 나아가서 아세아의 다른 나라들을 침략함으로써 세계 제패야망실현의 돌파구를 열어놓으려 하고 있다.

미제가 조선반도를 「미국전략의 제1선」으로 선포한 것이나 우리 나라를 훨씬 벗어나는 사정거리를 가진 핵무기들을 남조선에 배치한 것 등은 그러한 기도의 발로이다. 이런 조건에서 만일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불길은 쉽사리 조선경외를 벗어나 넓은 지역으로 번져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조선의 평화는 물론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이 엄중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가 철수되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전쟁발원지가 없어지게 됨으로써 조선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데서 새로운 국면이 열리리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의 철수는 미국자체에도 좋을 것이다.

지금 미국은 심각한 재정, 경제 위기에 직면해있다. 미국은 해외군사기지들

을 유지하는데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고 있으며 그로 하여 경제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인민들은 세금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인민들은 조선에서 침략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자기의 자식들이 무모한 대포밥으로 희생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

미국신문 「워싱턴 타임스」는 『남조선에서의 반미감정의 원인은 미군강점에 있다』고 썼으며 미국 사회계인사 「칼 로와」는 『많은 돈을 들여가며 남조선에 미군을 두어둘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최근 조미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왔던 미국의 여러 대표들은 미군의 남조선강점이 비법적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 것이라고 한결같이 말하였다.

지어 미 국회위원들 속에서까지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수시킬데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정의와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지체없이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조국통일방안을 지지하는 집회, 시위, 서명운동 등 각종 연대성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견결히 규탄하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군축을 위한 로조일군들의 국제적 상봉」 모임에서는 미국이 남조선을 강점한지 46돛이 되는 1991년 9월 8일을 계기로 미군을 남조선으로부터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국제로조 서명운동을 전세계적 범위에서 벌려나갈 것을 호소하였다.

유엔총회를 비롯한 국제회의들에서도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에서 미군을 즉시 철수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힘있게 울리고 있다.

미국은 시대의 흐름을 똑바로 보아야 하며 분별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만약 미국이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빨리 철수시킬데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하고 남조선에 대한 강점정책을 지속하려 한다면 안팎으로부터 더욱 더 커다란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가능한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이를 보장하는 북괴의 명확한 태도 표시와 그 실천이 선행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괴의 무장공비 남파 등의 모든 전쟁도발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소위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나 폭력혁명에 의한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해 올 종전의 태도를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하는 점을 명백하게 내외에 선언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북괴가 수락,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UN에 의해서 명백하게 확인 될 경우에는 나는 인도적 견지와 통일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남북한에 가로놓인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북괴가 한국의 민주, 통일, 독립과 평화를 위한 UN의 노력을 인정하고 UN의 권위와 권능을 수락한다면 UN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북괴가 참석하는 것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구상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하고 싶은 것은, 북괴에 대하여 더 이상 무모한 북한동포들의 민생을 희생시키면서 전쟁준비에 광분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고, 보다 선의의 경쟁,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공산독재의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경쟁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후 략)

○ 「6·23 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

(1973. 6. 23)

친애하는 5천만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온 남북대화의 경험과 국제정세의 추이에 비추어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여건을 실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평화통일외교정책을 내외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우리는 해방이 되었으나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 국토는 양단되고 민족은 분열되었습니다. 당초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한 군사적 경계선이라고 하던 38선이 그후 철의 장막으로 변하고 남과 북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 38선의 해소와 통일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교섭이 있었으나 미·소간의 근본적 대립으로 실패에 들어가고 결국 한국문제는 국제연합에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1947년 제2차 국제연합총회는 남북한을 통한 자유로운 총선거의 실시를 의결하고 이를 위해 임시한국위원단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거부로 남한에서만 자유선거가 실시되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국제연합에 의하여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게 된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공산군의 불의의 침략으로 인한 한국동란으로 무수한 동포가 생명을 잃고 전국토는 초토화되었으며 3년간의 전란끝에 휴전은 성립되었으나 분단은 계속되고 통일은 요원해졌습니다.

나는 이 분단으로 말미암은 동족의 고통을 덜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970년 「8·15선언」에서 남북간의 긴장완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그 다음해 8월 12일, 우리측은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하였으며 작년 7월 4일에는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리하여 남북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근 2년이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성과는 우리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이하고 실천가능한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남북간의 장벽을 점차 제거하고 구체적인 실적을 통해서 상호간의 불신을 신뢰로 대체해 나가는 것이 대화를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길이며,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불신요소를 남겨둔채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군사 및 정치문제의 일괄선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측은 통

일을 위한 남북대화의 진행중, 밖으로는 사실상 조국의 분단을 고정화시키는 행동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현상으로 보아 우리가 기대하는 바 남북대화의 결실을 얻기 까지에는 앞으로 많은 난관이 예견되며 상당히 긴 시일이 소요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태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결과적으로 불신의 심화와 긴장의 고조마저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한편 최근의 국제정세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시대가 끝나고 현상유지를 기조로 하는 열강들의 세력균형으로 평화공존을 유지하려는 것이 그 주된 조류라 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이 지역에 있어서의 일련의 주변정세의 발전으로 미루어 보아서도 국토통일이 단시일내에 성취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국제정세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지상의 염원과 목표를 국제정세의 현실속에서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친애하는 5천만동포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 현실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국내외의 현실속에서 실현하는 현명하고도 확고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강경하게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를 이땅에 정착시킴으로써 그 바탕위에서 우리의 자주역량으로 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1.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업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
2.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우리는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써 계속 노력한다.
4. 우리는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5. 국제연합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6. 대한민국은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7.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은 평화선린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방들과의 기존 우호관계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

나는 이상에서 밝힌 정책 중 대북한관계 사항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중의 잠정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둡니다.

친애하는 남북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조국이 처해 있는 오늘의 내외정세를 냉엄히 평가할 때 이 길만이 긴장완화의 국제조류속에서 민족의 위신과 긍지를 유지하면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앞에는 결코 실망이나 좌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찬 용기와 슬기로 한반도의 평화, 겨레의 번영, 그리고 조국통일을 위해 힘차게 매진합시다.

○ 평화통일 기본3원칙

(1974. 8. 15)

친애하는 남북동포 여러분! 오늘 감격과 희망의 광복절 제29주년을 맞이하여, 나는 먼저 남북의 5천만 동포 여러분과 더불어 뜻깊은 이날을 진심으로 경축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같이 경축하는 이 광복의 역사속에는 겨레의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은 민족해방의 환희와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손으로 조국 재건의 새 설계도를 실천에 옮겨가야 할 희망과 의욕이 들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우리의 광복에는 민족의 자아회복의 현대국가의 창조라는 민족사상 커다란 새 기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광복의 의의요, 가치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가지 조국의 평화통일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후 근1대가 지나가려는 오늘에 이르러도 분단의 비극과 긴장의 먹구름속에서 아직도 광복의 참된 그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을 단순한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해방의 기쁨을 통일의 기쁨으로 승화시키려는 결의와 민족중흥의 역사를 이룩하고자 말겠다는 맹서의 제전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여기서 잠시 지난날의 역사를 회상해 볼 때 우리가 해방과 함께 통일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더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1945년 12월에 만일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자주독립을 열망하는 우리와 뜻을 같이하여 모스크바 3상회의의 신탁통치안을 거족적으로 반대하였던들 우리는 그때 이미 통일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건만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태도를 표변하여 대민족적인 신탁통치안을 찬성 지지했기 때문에 불행히도 이 땅에는 민족분열의 씨가 뿌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뒤이어 1947년 11월 UN총회는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우리 민족의 의사를 존중하여 UN감시하의 남북총선거 실시를 건의하고 선거의 감시임무를 맡을 임시위원단까지 파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또다시 이를 거부함으로써 총선거에 의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던 최초의 기회를 무참히도 봉쇄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UN한국임시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하는 한편 북한 지역을 강압적으로 지배하면서 소위 인민군을 창설하는데 광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1948년 5월에는 남한에 대한 송전을 중단했고, 같은해 6월에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예성강의 물줄기를 끊어 막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국

토와 민족을 양단하는 반민족적 만행을 서슴치 않고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것은 정세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부득이 거래의 여망에 따라 UN의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UN은 우리 정부를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합법정부로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도 지나기 전에 그들은 악랄하게도 당초에 기도했던 바 그대로 한반도를 적화할 목적으로 기습적인 무력남침을 감행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950년 6·25동란입니다. 그들은 반민족적 만행으로 동족의 귀중한 인명희생을 막대하였고, 전국토는 거의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무력남침은 국제여론의 규탄을 받았고, 드디어 UN은 그들을 침략자로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직 반공 구국의 일념으로 일치단결하여 공산침략을 물리쳤고 세계의 많은 자유수호 국가들은 우리의 이 투쟁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휴전성립후 1954년에 있었던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우리가 제의한 민족적 절차에 의한 평화적 통일 방안을 거부함으로써 조국통일의 기회를 또다시 짓밟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이른바 4대군사노선을 강행하여 군비를 계속 증강하는 한편 우리에게 대하여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력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한반도에는 긴장이 날로 격화되고 전쟁재발의 위험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긴장과 도발의 양상이 이 이상 더 격화된다면 그것은 남북을 가릴 것 없이 그야말로 우리 민족전체가 존망의 위기에 직면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같은 위기속에서도 이 땅에서 전쟁재발을 막고 긴장을 완화하여 5,000년동안 면면히 유지되어 온 우리의 민족사를 단절이 아니라 이를 더욱 빛나게 계승 발전시켜야 할 엄숙한 각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명을 수행하는 첫 길이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에 있다는 판단하에 1970년 광복절에 북한에 대해 무력 적화통일 노선을 포기하고 서로

발전과 번영을 위한 평화적 노력을 가하자고 촉구하는 8·15선언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듬해에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하였고 또한 1972년에는 온 겨레의 여망을 받들고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4반세기동안 단절되었던 남북간에 비로소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대화의 과정에서 용이하고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해결하여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간에 가로놓인 장벽을 점차적으로 제거해 나간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입장에서 모든 성의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 직후부터 통일의 기회를 저해하기만 해온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도리어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억지 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대화의 진전을 방해하였으며 마침내는 남북대화를 교착상태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나는 작년 6월 23일 평화통일의 대전제인 항구적인 평화를 이 땅에 정착시키고 평화통일의 실질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평화통일의교정책을 내외에 선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꾸준한 평화노력에 대하여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오히려 남북대화를 갑자기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우리에게 대항터무니없는 비방, 중상을 더욱 노골화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의 서해 5도 수역과 휴전선 근처에서 각종 군사적 도발행위를 격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긴장고조의 위기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간의 전쟁재발을 막기 위해 금년 초에는 북한측에 대하여 남북상호불가침협정의 체결을 제의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그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절실한 염원이요 지상명령인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성실하고도 일관성있는 노력을 꾸준히 다각적인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발전을 질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우리의 불가침협정 제의마저 외면하고, 최근에는 서해와 동해 공해상에서 우리 어선을 격침, 나포하고 경찰 경비정을 격침하는 등 비인도적이고도 불법적인 만행을 계속 자행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말로는 평화통일과 민족의 단합을 운위하고 있으나 그 실에 있어서는 동족의 분열과 무력남침만을 획책해 오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집요한 침략적 도발속에서도 줄기찬 평화노력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이 총화단결하여 그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국력이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국토의 모습과 국민의 마음은 새마을운동으로 더욱 새롭고 희망 차게 변모해 가고 있으며 수출입국의 파도는 이제 대양으로 힘차게 구비쳐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화학공업 건설의 우렁찬 발걸음을 약진하는 대한민국의 맥박이 되어 세계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유류파동과 자원난으로 야기된 작금의 세계적 경제불황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경제성장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서 준공과 더불어 개통을 자랑하게 된 서울 지하철의 건설 등 대중 복지생활의 기반을 착실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국력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전쟁재발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또한 그 바탕위에서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역사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창조력이요, 그 주체인 민족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생명력 그것입니다. 창조력에 의하여 역사는 발전하고 생명력에 의하여 민족은 계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민족의 지상염원인 평화통일은 무궁한 창조력을 가진 민족사에 당연한 귀결로 이루어지고야 말것을 동포 여러분과 더불어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찬연한 중흥과 번영도 무한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 민족의 노력에 의하여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조국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추구해 온 평화통일의 기본원칙을 명백히 천명하고자 합니다.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기본원칙은 첫째,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

다. 이를 위하여 남북은 상호불가침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간에 상호문호를 개방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대화를 성실히 진행시켜야 하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 바탕위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하에 토착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룩한다.

나는 이와 같은 우리의 평화통일 기본원칙이야말로 오늘의 국제환경 속에서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단된 조국을 통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실현성있는 길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 평화의 바탕위에서 통일을 이룩하려는 선통일의 정책기조를 지금까지 확고하게 유지해 왔고 또 앞으로도 이를 변함없이 일관성있게 계속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북한공산주의자들에게 한시바빠 민족의 양심으로 되돌아와 7·4남북공동성명과 6·23평화통일외교선언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조국과 민족의 앞날을 위해 남북대화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성실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일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우리의 6·23평화통일외교정책과 불가침협정체결 제의를 끝내 거부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외치는 통일이 평화통일이 아니라 무력통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정착이 이룩되지 않는 곳에 평화통일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또 우리 우방에 대해서도 대북한관계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한반도에서 세력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우리의 평화통일외교정책을 지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세아의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민족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민족의 생명은 오직 국가를 통해서만 성장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겨레의 생명을 영원토록 가꾸어 나갈 우리 대한민국의 지상목표는 다름아닌 조국통일과 민족중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구한 민족사의 전개속에서 이 지상목표를

이룩해 나가기 위해 다같이 민족중흥의 이상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 민족중흥의 이상주의자란 결코 환상에 사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긍정적 요소를 적극 개발하여 그것을 민족사 창조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민족중흥과 조국통일의 기조가 오직 평화에 있으며 그 평화유지의 원동력은 다름아닌 국력이라는 것을 신념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중흥의 드높은 이상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묵묵히 땀 흘려 국력배양을 극대화하는데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족중흥의 이상주의자란 다른 일방 착실한 현실주의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우리 모두가 민족중흥의 이상주의자인 동시에 또한 착실한 국력배양의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정치인과 특히 우리 사회의 지도층은 분단조국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동시에 국력을 착실히 다져나가는 것이 곧 조국통일과 민족중흥을 성취하는 가장 가깝고도 빠른 정도임을 깨달아 일체의 낭비와 비능률적인 모든 것을 깨끗이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모든 경제인과 근로인들은 서로가 다같이 경제발전의 향도요 역군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의 공익성 제고와 국력배양의 가속화에 적극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인들은 주체적 민족사관을 확립하여 보다 창조적이고 협동적인 차원에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정신의 순화와 건실한 사회기풍의 진작에 선봉이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다같이 자기의 사회적 직분에 유신과업 수행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이상 민족중흥은 틀림없이 역사의 구체적 현실로 결실되고야 말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29년전 그날의 그 감격과 그 정열을 한결같이 유신과업 수행에 총결집하여 민족의 위대한 전진을 힘차게 계속해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해방의 기쁨이 통일의 기쁨으로 승화되는 진정한 광복 조국통일의 그날을 자랑스럽게 맞이합시다.

○ 대통령 국정연설

(1981. 1. 12)

(통일대화 관련부분)

금년은 우리가 일본식민지 통치로부터 광복을 찾은지 36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해방이후 오늘까지 전개된 남북분단의 36년사는 우리의 민족사에 있어 또 하나의 비극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족간의 전쟁, 민족 이질화의 심화, 국제사회에서의 상쟁, 대화의 중단 등 그간 우리가 입은 민족적 상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한 민족, 한 언어, 한 문화의 조국이 하루속히 단일의 자주·민족·민주국가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온 민족의 지상과제입니다.

가까이 지난 10여년을 돌이켜 보면 1972년의 7·4공동성명이 발표된 이래, 남북간에 개선된 것은 없고 쌍방간에 성명전과 일방적 제안만을 되풀이 하면서 서로 말싸움으로 일관해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실천의사의 바탕없이 물거품과 같은 형식적 합의가 아니라 단 한가지의 합의라도 행동으로 입증하겠다는 쌍방의 결연한 의지인 것입니다.

7·4공동성명에 담긴 여러가지 약속을 위반하면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무력적화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무장간첩을 계속 남파하고 있으며 이른바 「통혁당 방송」과 전 휴전선에 걸친 대남방송을 통해 비방을 격화시키고 있는 동시에 해외 반한단체를 사주하여 정부 전복활동을 되풀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철통같은 안보태세와 국력의 신장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국민의 투철한 국가보위 결의 앞에서 그들의 한반도 적화기도는 부질없는 도로에 그칩니다.

지난 36년간 각기 상이한 사상과 이념과 제도하에 분단되어 살아온 배달민족이 다시 뭉쳐 통일되느냐 아니면 이대로 분단된 상태로 살아가느냐의 관건은 무엇보다도 민족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통일의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당국에 대하여 획기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 남북한간에는 여러가지 형태로, 또한 여러가지 수준에서 서로 만나 대화를 나눈바 있지만 상호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조금도 기여하지 못한채, 많은 시간과 물자와 정력만을 헛되이 소모하였으며 남북총리회담의 절차마련을 위한 작년의 실무접촉도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킴으로써 남북한의 대화는 다시 끊어진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다 아는 바입니다.

남북한이 통일에 이르는 길은, 미사여구의 일방적 제안을 남발하거나 또는 지켜지지 않을 서면 약속을 내놓는데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오늘 지난 날의 일들을 굳이 시비함이 없이 남·북한의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고 동족간의 전쟁재발을 방지하며 중단된 남북대화를 무조건 재개하여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가는데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번갈아 상호방문할 것을 엄숙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아무런 부담과 조건없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초청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그가 서울에 체재하는 동안 일체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것이며 서울과 다른 도시 및 농촌의 실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가 원하는 그 어느 장소라도 방문하는데 모든 협조를 제공할 것입니다.

본인은 또한 같은 조건으로 본인이 북한을 방문하도록 그가 초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쌍방 당국의 최고책임자 상호간의 신뢰를 쌓아 동족간의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평화통일을 이룩할 목적으로 역사적인 방문을 교환한 후에 서로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하여 끈기 있게 노력한다면 남북간의 여하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바탕위에 실천 가능한 분야의 쉬운 것부터 하나 하나씩 합의해 나간다면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통일이 달성되는 날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

○ 국토통일원장관 대북성명, 「20개시범실천사업」 제의

(1982. 2. 1)

전두환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있는 새해 국정연설을 통하여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은 남북간에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여 민족전체의 통일의를 한데 모아 통일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따라 통일국가를 완성시켜야 한다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내외에 선언하였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 통일방안에서 통일헌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쌍방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대표로 가칭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고 여기서 통일헌법을 기초할 것을 제창하면서 이같은 통일헌법의 마련을 위한 역사적 작업을 순조롭게 보장하기 위하여 통일실현까지의 실천조치로서 7개항의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북한 당국에 제의하였다.

또한 전두환 대통령은 이상의 모든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간의 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 하고 이를 위한 남북쌍방의 각료급 예비회담을 가질 것을 북한당국에 제의하였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북한측의 주장까지를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북한측이 호응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분단조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말로만 통일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남북간의 현안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간의 회담을 실현시키기 위한 각료급 예비회담을 개최하는데 북한당국이 하루속히 동의할 것을 거듭 촉구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방안의 실천정신에 입각하여 우선 당장에라도 다음과 같은 시범사업들을 실천에 옮길 것을 북한당국에 요구하는 바이다.

1. 남북간에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하나의 조치로서 서울~평양간 도로를 연결·개통한다.
2. 남북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우선 그들간에 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상황하에서 통일의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당국에 대하여 획기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 남북한간에는 여러가지 형태로, 또한 여러가지 수준에서 서로 만나 대화를 나눈바 있지만 상호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조금도 기여하지 못한채, 많은 시간과 물자와 정력만을 헛되이 소모하였으며 남북총리회담의 절차마련을 위한 작년의 실무접촉도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킴으로써 남북한의 대화는 다시 끊어진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다 아는 바입니다.

남북한이 통일에 이르는 길은, 미사여구의 일방적 제안을 남발하거나 또는 지켜지지 않을 서면 약속을 내놓는데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오늘 지난 날의 일들을 굳이 시비함이 없이 남·북한의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고 동족간의 전쟁재발을 방지하며 중단된 남북대화를 무조건 재개하여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가는데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번갈아 상호방문할 것을 엄숙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아무런 부담과 조건없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초청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그가 서울에 체재하는 동안 일체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것이며 서울과 다른 도시 및 농촌의 실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가 원하는 그 어느 장소라도 방문하는데 모든 협조를 제공할 것입니다.

본인은 또한 같은 조건으로 본인이 북한을 방문하도록 그가 초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쌍방 당국의 최고책임자 상호간의 신뢰를 쌓아 동족간의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평화통일을 이룩할 목적으로 역사적인 방문을 교환한 후에 서로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하여 끈기 있게 노력한다면 남북간의 여하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바탕위에 실천 가능한 분야의 쉬운 것부터 하나 하나씩 합의해 나간다면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통일이 달성되는 날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

○ 국토통일원장관 대북성명, 「20개시범실천사업」 제의

(1982. 2. 1)

전두환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있는 새해 국정연설을 통하여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은 남북간에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여 민족전체의 통일의를 한데 모아 통일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따라 통일국가를 완성시켜야 한다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내외에 선언하였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 통일방안에서 통일헌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쌍방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대표로 가칭 「민족통일협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통일헌법을 기초할 것을 제창하면서 이같은 통일헌법의 마련을 위한 역사적 작업을 순조롭게 보장하기 위하여 통일실현까지의 실천조치로서 7개항의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북한 당국에 제의하였다.

또한 전두환 대통령은 이상의 모든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간의 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이를 위한 남북쌍방의 각료급 예비회담을 가질 것을 북한당국에 제의하였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북한측의 주장까지를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북한측이 호응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분단조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말로만 통일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남북간의 현안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간의 회담을 실현시키기 위한 각료급 예비회담을 개최하는데 북한당국이 하루속히 동의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방안의 실천정신에 입각하여 우선 당장에라도 다음과 같은 시범사업들을 실천에 옮길 것을 북한당국에 요구하는 바이다.

1. 남북간에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하나의 조치로서 서울~평양간 도로를 연결·개통한다.
2. 남북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우선 그들간에 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의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당국에 대하여 획기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 남북한간에는 여러가지 형태로, 또한 여러가지 수준에서 서로 만나 대화를 나눈바 있지만 상호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조금도 기여하지 못한채, 많은 시간과 물자와 정력만을 헛되이 소모하였으며 남북총리회담의 절차마련을 위한 작년의 실무접촉도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킴으로써 남북한의 대화는 다시 끊어진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다 아는 바입니다.

남북한이 통일에 이르는 길은, 미사여구의 일방적 제안을 남발하거나 또는 지켜지지 않을 서면 약속을 내놓는데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오늘 지난 날의 일들을 굳이 시비함이 없이 남·북한의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고 동족간의 전쟁재발을 방지하며 중단된 남북대화를 무조건 재개하여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가는데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번갈아 상호방문할 것을 엄숙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아무런 부담과 조건없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초청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그가 서울에 체재하는 동안 일체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것이며 서울과 다른 도시 및 농촌의 실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가 원하는 그 어느 장소라도 방문하는데 모든 협조를 제공할 것입니다.

본인은 또한 같은 조건으로 본인이 북한을 방문하도록 그가 초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쌍방 당국의 최고책임자 상호간의 신뢰를 쌓아 동족간의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평화통일을 이룩할 목적으로 역사적인 방문을 교환한 후에 서로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하여 끈기 있게 노력한다면 남북간의 여하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바탕위에 실천 가능한 분야의 쉬운 것부터 하나 하나씩 합의해 나간다면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통일이 달성되는 날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

○ 국토통일원장관 대북성명, 「20개시범실천사업」 제의

(1982. 2. 1)

전두환 대통령은 지난 1월 22일 국회에서 있는 새해 국정연설을 통하여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가장 합리적인 길은 남북간에 민족적 화합을 이룩하여 민족전체의 통일의를 한데 모아 통일헌법을 채택하고, 그 헌법에 따라 통일국가를 완성시켜야 한다는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내외에 선언하였다.

전두환 대통령은 이 통일방안에서 통일헌법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쌍방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남북대표로 가칭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고 여기서 통일헌법을 기초할 것을 제창하면서 이같은 통일헌법의 마련을 위한 역사적 작업을 순조롭게 보장하기 위하여 통일실현까지의 실천조치로서 7개항의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북한 당국에 제의하였다.

또한 전두환 대통령은 이상의 모든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간의 회담을 조속히 개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 하고 이를 위한 남북쌍방의 각료급 예비회담을 가질 것을 북한당국에 제의하였다.

우리의 통일방안은 북한측의 주장까지를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북한측이 호응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분단조국의 통일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말로만 통일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남북간의 현안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간의 회담을 실현시키기 위한 각료급 예비회담을 개최하는데 북한당국이 하루속히 동의할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제시한 통일방안의 실천정신에 입각하여 우선 당장에라도 다음과 같은 시범사업들을 실천에 옮길 것을 북한당국에 요구하는 바이다.

1. 남북간에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하나의 조치로서 서울~평양간 도로를 연결·개통한다.
2. 남북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우선 그들간에 우

- 편교류 및 상봉을 실현한다.
3. 설악산 이북과 금강산 이남지역을 관광휴양지로 설정하여 자유관광공동 지역으로 개방한다.
 4. 해외동포들의 조국방문을 공동으로 주관하고 관문점을 통과하여 쌍방지역을 자유로이 방문토록 한다.
 5. 남북간의 자유로운 교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천항과 진남포항을 우선적으로 개방한다.
 6. 남북간에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모락방송 장치와 방송청취 통제장치를 제거하여 쌍방 정규방송을 자유로이 청취하도록 한다.
 7. 86년 아시안게임 및 88년 올림픽대회에 북한측 선수단이 관문점을 통과하여 참가토록 한다.
 8. 남북을 방문하려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관문점을 통과하여 쌍방지역을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9. 남북어부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유로운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
 10. 남북간의 관계개선 및 신뢰증진을 위하여 정치인·경제인·청년학생·근로자·문예인·체육인 등 각계 인사간의 상호 친선방문을 실시한다.
 11. 남북사회의 실상을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하여 쌍방 기자들의 상대방 지역내에서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한다.
 12. 민족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민족사의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13. 남북간에 각 종목별 체육 친선교환경기를 개최하며 각종 국제경기대회에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한다.
 14. 쌍방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용생산품의 교역을 실시한다.
 15. 민족경제의 번영을 위하여 남북간 자연자원의 공동개발 및 공동이용을 실현한다.
 16. 남북간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일제조업체간의 기술자교류 및 생산품 전시회를 교환·개최한다.

17. 비무장지대내에 공동경기장 시설을 마련하고 이를 남북간의 친선경기에 이용한다.
18. 비무장지대내의 동식물의 자연생태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공동학술조사를 실시한다.
19. 남북간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무장지대내의 군사시설을 완전 철거한다.
20. 남북간에 군비통제조치를 협의하며 쌍방 군사책임자간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용한다.

○ 대통령 국정연설

(1985. 1. 9)

〈통일대화 관련부분〉

올해로서 만 40년이 되는 우리 민족의 분단은 비단 이땅의 불행일뿐 아니라 세계사의 오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세기의 비극이 새로운 세기로 이어지는 일은 결단코 막아야 하며, 우리는 민족분단의 역사를 청산하고 이 땅에 통일과 번영의 새 역사를 창조함으로써 세계사에 한민족의 위업을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평화와 통일의 역사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먼저 청산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지난 40년간 지속해온 대결의 상황이라고 본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체제대결과 군사적 대치속에서 지낸 40년의 세월은 민족적 참화와 정력의 낭비 그리고 상호불신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피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6천만 겨레를 파멸로 이끌 전쟁재발의 위험은 오히려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북한은 더 이상 서로 담을 쌓고 대립과 반목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으로서 서로를 열고 상부상조하며 화합하는 새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남북한이 서로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화해와 신뢰의 기초 위에서 민족 일체감을 가꾸어 나간다면 평화와 통일의 민족적 염원을 반드시 성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인은 남북대결의 시대로부터 민족화합의 새 시대로 용기있는 일대 전환을 결행할 것을 제창하는 바입니다.

본인이 지난 1982년 1월 22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내외에 천명하고 온 겨레가 평화와 통일의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을 호소한 것도 민족자해적이며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청산하자는데 그 기초를 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남북한간에 민족적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통일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과 회담을 북한측에 제의한 바 있습니다.

남북대화는 대결청산의 토대 위에 평화와 통일을 건설할 수 있는 터전으로서 민족사의 장래를 위하여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대화 자세가 비록 성실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남북대화는 어떤 것이든 평화와 화합의 광장으로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수재물자를 인수하고 경제 회담과 적십자회담, 그리고 체육회담을 제의한데 이어 북한이 이에 호응해 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회담이 진전되어 남북한간에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민족의 번영과 평화통일의 초석이 되고 우리 겨레의 자존과 성숙을 세계에 보여주게 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작금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일고 있는 정세변화는 평화와 통일의 흐름을 바꾸기 위한 우리 남북한의 주체적인 노력을 더욱 절실히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통일의 결정적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인과 김일성 주석과의 회담이 가급적 빨리 실현되기를 북한측에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제3국의 지도자와도 수시로 빈번한 상호방문을 실현하고 있는 터에 남북한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회담을 못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민족의 평화통일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서로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관계를 개선하며 다

각적인 대화와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에 연락대표부를 상설할 것을 본인은 아울러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평화와 통일의 새장을 80년대 기필코 열어야 한다는 신념아래 인내를 가지고 북한을 대화로 포용해 나갈 것이며, 북한측이 이러한 제의에 호응해 오기를 기대합니다.

○ 유엔 제3차 군축특별총회, 외무부장관 연설

(1986. 6. 10)

(전 략)

우리는 1950년대 초에 참혹한 전쟁을 겪은 나라의 국민으로서 군사력의 사용을 특히 혐오하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한국전쟁의 황폐로부터 회복하는 데는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은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군축을 진전시키고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강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 략)

한반도는 불행히도 이같은 군사대립이 침예한 지역의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한반도에서의 군축문제가 군축의 다른 어떠한 측면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군축은 남북한간의 상호 신뢰회복과 협력을 이루기 위한 단계적 조치로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남북한을 가로지르는 155마일 군사분계선을 따라 약 150만의 중무장한 병력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북한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간에는 국경을 넘은 방문이나 전화나 편지 같은 일체의 접촉도 없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북한간에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조치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상호 이해와 존중은 여기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같은 절차에는 대화와 모든 분야에서의 접촉의 시작 및 확대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직접당사자인 남북한간의 조속한 대화재개를 추구하고 있어 온 것입니다.

(중 략)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국제대표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아무리 목표가 단순해도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지름길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목표가 높을수록 거기에 이르는 길은 더 멀다고 하겠습니다.

국제관계의 현실과 군축에 관계된 복잡한 요소들을 고려할 때, 유일한 실제적 방안은 본인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단계적 접근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구체적 결과를 얻으려면 말뿐이고 추상적이기 보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 인식하에 한국대표단은 「한반도 군축을 향한 3단계 접근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한간의 조속한 대화재개와 후속 접촉 및 협력의 확대를 통하여 우리는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조치는 남북한간의 긴장완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둘째, 적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장치로서 남북한은 「불가침협정」의 체결에 합의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그러한 다음 남북한은 한반도 군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에 관하여 협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인은 아국 국무총리의 6월 3일 남북한 책임있는 당국간의 각료급회담 제의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후 략)

(1991. 9. 24)

(전 략)

의장,

나는 제43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에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드는 날, 세계에는 확실한 평화가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세기의 세계가 빚어 온 모든 고난이 이땅을 짓밟았고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주변상황은 지난 3년간 크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변혁이 이 세계의 지축을 흔들기 전부터 냉전의 벽을 스스로 뛰어 넘어, 소련과 중동부 유럽의 모든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이웃 중국과도 교류·협력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지난 반세기 서로 오가는 길마저 단절된 채 대결해 온 이들 나라와의 새로운 우호협력 관계 속에서 우리 국민은 역사의 새로운 물결이 한반도에도 미쳐오고 있음을 보았으며 화해의 위대함을 체험했습니다.

한국민은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이 분단된 땅에도 평화와 통일의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북한의 유엔 가입으로 한반도의 평화공존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남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남북한은 다음과 같은 원칙에 합의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첫째, 남북한은 불안한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한반도에는 지금 이 시각에도 170만 명의 밀집된 군사력이 250킬로미터의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휴전의 상태에서 우리는 근 40년간 긴장된 삶을 살아와야 했습니다.

남북한은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서로에 대한 무력의 사용을 포기하고 모든

분야에서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남북한은 군사적 신뢰의 구축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군비감축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한반도에 군사적 대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서로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기동훈련과 부대이동을 사전에 통보하며, 기습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상주 감시단을 상호 파견하는 등 군사적 불신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은 동북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핵 에너지는 파괴를 위한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는 평화적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한 북한은 모든 핵물질과 시설에 대한 국제기구의 사찰에 조건없이 응해야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의 개발을 포기하고 남북한간에 신뢰구축 노력이 진전될 경우 재래식 무력의 감축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핵문제에 대해서도 남북한간의 협의를 추진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셋째, 남북한은 사람과 물자,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의 길을 열어 단절의 시대를 종식시켜야 합니다.

한반도의 남과 북에는 분단과 전쟁으로 헤어진 1,000만 이산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이 헤어진 부모형제의 생사나 거처조차 모르고 편지 한장, 전화 한 통화 주고 받을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두고 남북한간의 신뢰구축이나 관계개선을 말할 수 없습니다.

남북한간은 이 개방된 세계에서 모든 나라간에 통용되는 자유로운 통행, 통신과 통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남북한은 정치·군사·교류협력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하며 실질적 관계를 증진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유엔 동시가입으로 새로워진 상황 속에서 내달 열릴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이 남북한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를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후 략)

나. 불가침 및 평화협정

〈북한측〉

○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 정무원 총리 김일 보고

(1973. 4. 6)

(전 략)

남조선당국자들이 진짜로 우리와 싸우려하지 않는다면 군비축소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이때까지 싸우던 월남에서도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미군이 철거하는데 정전협정이 체결된지 20년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평화협정을 맺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남조선에서 미군을 내보내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이 모든 제안들은 남조선당국자들로부터 응당한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북과 남사이의 대화는 쌍방간의 합의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할 단계에서 더 전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북과 남사이에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할데 대하여 원칙상 합의는 보았지만 그의 실현을 방해하는 근원은 의연히 제거되지 않았으며 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미국이 남조선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우리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북과 남사이의 대화의 진보를 각방으로 방해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심화될수록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신식 민주주의적 지배의 마수가 얼마나 뿌리깊이 뻗어있으며 그들이 우리 나라의 분열을 영구화하고 자주적 통일을 가로막기 위하여 얼마나 음흉하게 책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더욱 똑똑히 체험하고 있습니다.

(후 략)

○ 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1977. 1. 25)

(전 략)

남조선당국자들은 마치도 자기들이 우리나라의 평화를 바라고 있는듯이 그 무슨 불가침조약에 대하여 말하고 있으나 북과 남 사이에 팽대한 무력이 서로 팽대하고 맞서고 있고 계속 무력이 증강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그대로 두고서는 그 어떤 조약이나 협정을 맺는다고 하여도 우리나라에서 긴장상태가 결코 가셔질 수 없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북과 남의 무력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오해와 불신을 낳고 대결과 적대감을 조장하며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된다. 더욱이 나라의 절반땅이 미국군대가 있고 핵무기까지 배치되어 있는 형편에서는 상시적인 전쟁의 위협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이 모든 것은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유발시키는 불씨로 될 뿐만아니라 민족경제의 발전과 인민생활의 안정 향상에도 커다란 지장을 주게 된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한 핏줄을 이은 조선의 수백만 청장년들이 서로 총을 겨누고 있어야 하며 나라안에 긴장상태를 조성하고 민족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귀중한 민족의 힘과 재부를 헛되이 소모되는 불합리한 사태를 지속시켜야 하겠는가? 하물며 남조선 청장년들이 외래제국주의들이 쥐어둔 총을 메고 핵전쟁의 위협까지 무릅쓰면서 공산주의 방과제가 되어 미 제침략자들의 뱃속을 채워주어야 하는 그 치욕스러운 사태가 어떻게 허용될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 인민에게는 불가침조약과 같은 빈말공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북과 남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완화하며 핵전쟁의 위험을 철폐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남조선에서 핵기지가 철폐되고 미국이 끌어들이는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살인무기들이 철수되어야 하며 미국군대는 무조건 철폐하여야 한다. 우리는 또한 쌍방이 무력을 대폭 축소하고 군사비를 줄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돌리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우리는 북과 남의 정당당, 사회단체들과 전체 인민들이 쌍방당국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핵전쟁의 위험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급히 강구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을 호소한다.

동시에 미국군대가 철폐하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군대와 군비를 축소하고 외국으로부터 무기반입을 중지하기 위한 군비축소회담을 열도록 해당 군사당국에 요구할 것을 재의한다.

(후 략)

○ 조선인민군 창건 29돐기념 중앙보고대회, 김익현 부참모장 보고

(1977. 2. 7)

(전 략)

그런데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의 정당한 제의에 대하여 그 무슨 「불가침조약」이란 것을 떠들어대면서 도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궤뢰도당이 떠들고 있는 「불가침조약」은 어떠한 군비축소나 군사력의 축소도 예견하지 않으며 더우기 미국군대가 남조선에 남아 있고 방대한 무력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현상태를 그대로 두자는 것으로서 평화에 대한 아무런 담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조선에서 긴장과 불안을 증대시키고 분열을 고착시키며 그 막

뒤에서 전쟁준비를 다그치려는 범죄행위를 감싸기 위한 정치적 연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남조선당국자들이 떠드는 「불가침조약」과 같은 빈말공부가 아니라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와 평화통일의 국면을 열어놓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의 위협을 가시기 위하여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그만두며 군대와 군비를 축소하고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반입을 중지할데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어느때든지 군비축소회담을 가질 용의가 있다는 것을 다시금 천명합니다.

(후 략)

○ 외교부 대변인 성명

(1979. 7. 10)

(전 략)

다 아는 바와 같이 조선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와 남조선 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가 따로 있고 우리와 미국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가 따로 있다.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북과 남의 정치, 경제, 문화의 전반적인 문제는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사람 자신이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민족내부문제이다.

한편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며 조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는 정전협정의 실제적인 당사자들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은 3당국회의에서 이 2개의 서로 다른 문제를 섞어 놓고 토의하자는 것이다.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선 사람끼리 대화를 하는데 무엇때

문에 여기에 미국이 끼어 들겠는가.

미국 사람들은 여기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미국이 여기에 끼어 드는 것은 내정간섭으로 된다.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와 미국사이에 진행할 회담에 남조선을 참가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원래 남조선은 정전협정의 주인 일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

다만, 우리와 미국사이에 우선 토론을 진행하면서 남조선 당국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될 때에만 그들의 참가문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중 략)

우리는 또한 이와는 별도로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과 회담할 것을 주장한다.

미국이 조선에서 정전상태를 끝장내고 유구한 평화를 마련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와 회담을 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과 직접 회담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때까지 미국 당국자들은 남조선의 참가없이는 우리와 대화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의 제의를 외면하여 왔다.

우리는 미국측이 정 요청한다면 우리와 미국사이에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 철거문제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문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회담에 남조선 당국자들을 옵저버로 참가시키는 것을 허용할 것이다. 이렇게 하자고 하여도 먼저 우리와 미국사이에 회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미국이 조선에 대한 그 어떠한 침략적 야망도 가지지 않으며 진정으로 조선에서 확고한 평화를 이룩하고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바라는 입장에 선다면은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하지 못한 이유와 구실이 없을 것이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와의 대화에 응해 나오지 못할 조건이 없을 것이다.

미국이 우리와의 회담에 응해 나온다면 그때에는 미군철거후 제기되는 필요한 모든 문제들이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혜의 원칙에서 능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미국은 자기의 체면을 손상함이 없이 조선문제에서 손을 뗄 수 있을 것이다.

(후 략)

○ 중앙인민위원회·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 미합중국정부와 국회에 보내는 편지

(1984. 1. 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연합회의는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데 대하여 토의결정하고 이 편지를 미합중국정부와 국회 상, 하 양원에 보낸다.

오늘 조선반도는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다.

조선에서 정전이 실현된지도 벌써 서른해가 지났으나 평화의 전망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사태는 전쟁전야를 방불케하는 침예한 국면으로 더욱 더 다가가고 있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쌍방의 막대한 무력이 날카롭게 대치되어 있는 가운데 남쪽에서는 무력증강이 계속되고 대규모 전쟁연습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현 정세는 그 어떤 우발적인 사소한 사건으로 해서도 임의의 순간에 전쟁이 터질 수 있을만큼 극도로 긴장되어 있다.

조성된 정세는 세계인민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으며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에서 정전이 실현된 다음 일관하게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방도를 여러모로 탐구하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이미 1974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에 직접 대화를 실현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옹당한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당신들은 우리가 「남침」을 하려 한다고 하면서 남조선에서 끊임없이 무력을 증강하고 전쟁준비를 다그치고 있으며 있지 않은 「남침」을 막는다는 구실을 가지고 세계인민들을 기만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남침」할 의사가 없으며 동족상잔을 하려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다. 우리는 언제나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보위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다.

날로 격화되고 있는 쌍방사이의 군사적 대결상태는 호상불신과 반목만을 조성하고 전쟁위험을 더욱 더 증대시키고 있다.

이제 조선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 전쟁은 결코 조선경내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며 불피코 핵전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조선인민뿐 아니라 미국 인민들도 편안하지 못할 것이며 전세계가 다 핵참화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 문제는 핵전쟁의 길로 계속 달음박질해 나가는가 아니면 평화의 길로 돌아서는가 이렇게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제반 사실은 지금과 같이 첨예한 대결상태를 지속시켜서는 당신들이 얻을 것이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부와 미국정부가 다같이 격폐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조선반도에 엄중하게 조성된 전쟁위험을 하루빨리 제거하고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길을 공동으로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인정한다.

출로는 오직 대결이 아니라 당사자들사이의 대화에 있다고 우리는 깊이 믿고 있다.

우리는 미국정부가 진심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오늘 조선에서의 긴장상태 격화에 책임이 있는 다른 일방인 남조선당국자들과 함께 우리와 접촉하여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기대에서 1984년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와 미국사이의 회담

에 남조선당국자들을 참가시키는 3자회담을 진행할 것을 정식으로 제기하기로 결정하였다.

3자회담을 진행할 장소로서는 관문점도 좋고 또 호상 편리하다고 인정하는 임의의 다른 곳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3자회담에서는 무엇보다도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전제를 마련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을 토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 대결상태가 어느 때 보다도 격화되고 핵전쟁의 위협이 무겁게 드리우고 있는 현 상태를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하여 생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3자회담에서는 조선정전협정의 체결일방이며 남조선에서 모든 군사적 통수권을 쥐고 있는 미국과 우리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할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문제와 조선의 북과 남사이의 불가침선언을 채택하는 문제가 선차적으로 나선다고 본다.

평화협정에는 조선전쟁의 종결을 법적으로 공식선포하고, 정전을 공고한 평화에로 전환시키며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며 불가침선언에는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여 무력행사를 하지 않으며 쌍방의 군대를 축감할 데 대한 문제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3자회담에서는 그밖에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제기하는 문제들도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3자회담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불가침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조선에서 긴장상태 완화와 조선통일의 전제조건이 마련된 다음 조선의 북과 남사이에 대화를 열고 7·4남북공동성명에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나라의 통일을 실현할데 대한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전민족대회를 열고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며 북과 남의 현존 사회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지역자치제에 기초한 연방제를 실시할데 대한 문제 등을 토의할 수 있을 것이다.

3자회담과 북과 남사이의 통일대화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성과적으로 해결될 때에 조선반도에서 항구하고 공정한 평화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모든 담보

들이 믿음직하게 마련될 것이다.

통일된 조선은 그 어떤 외국의 군사기지나 작전기지로도 되지 않고 위성국으로도 되지 않을 것이며 그 어떤 정치군사적 동맹이나 끌려에도 가담하지 않는 완전히 자주적인 엄정 중립국가로 될 것이다.

통일된 조선은 나라가 통일되기 전에 남조선에 투자된 외국의 자본을 다치지 않고 그 이권을 계속 보장할 것이며 자주성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평화공존의 원칙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되면 미국은 자기의 체면과 이해관계를 손상함이 없이 조선문제에서 영예롭게 손을 뗄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미국인민의 이익에도 완전히 부합될 것이다.

미국과 우리는 이미 한번 전쟁을 하였다. 우리 두 나라가 한번 싸웠다고 하여 영원히 적대국으로 남아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또다시 전쟁을 하여야 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미국정부가 조선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선인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미국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3자회담을 진행할데 대한 우리의 이번 제의는 변화된 현정세에서 가장 시적절하고 합당한 것이다.

역사적 배경으로 보나 현실적 절박성을 보나 조선문제를 언제까지나 미해결상태로 남겨둘 수는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위원회의 상설회의는 미합중국 정부와 국회가 우리의 새로운 평화적 발기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긍정적 반응을 보이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

(1984. 1. 26)

(전 략)

조선정전협정은 어디까지나 전쟁을 정지할데 대한 협정이지 공고한 평화를 담보하는 협정은 아닙니다. 평화도 전쟁도 아닌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30년이상 지속되어오는 가운데 지난날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한 때도 긴장상태가 가셔진 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어떤 때에는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긴박한 정세가 조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날 우리 공화국정부가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여러번 제기한 것은 조선에서 전쟁상태의 종결을 법적으로 선포하고 불안정한 정전상태에 끝장을 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조선에서 정전을 공고한 평화로 전환시킬데 대한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제의를 왜 것처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선에서 전쟁의 위협이 더욱 짙어가고 있는 오늘이야말로 조선의 공고한 평화와 평화통일을 위하여, 수만리 떨어진 미국이 조선땅에서 우리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사태의 종식과 조미관계의 새 출발을 위하여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제의에 응해나서야 할 때이라고 인정합니다.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거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협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근원이 없어질 것이며 조선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담보가 마련되게 될 것입니다.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과 함께 북과 남사이에는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군대와 군비를 대폭 축소할데 대한 불가침선언이 채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가침선언이 채택되면 우리 나라의 평화는 공고한 것으로 되고 이

른바 「미군철수후 문제」는 믿음직하게 담보되게 될 것입니다.

연합회의는 미국과의 평화협정과 북과 남사이의 불가침선언에 의하여 나라의 평화가 보장되고 자주적 평화통일의 전제가 마련된 다음 북과 남이 대화를 통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할데 대한 명확한 전망까지 밝힘으로써 전체 조선인민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과 신심을 더욱 확고히 안겨주고 있습니다.

연합회의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의 평화제안이 실현되어 조국통일의 전제가 마련되면 그때에 북과 남은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후 략)

○ 불가침선언은 신뢰조성을 위한 출발

(로동신문, 1991. 1. 11)

(전 략)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고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려는 진지한 념원으로부터 이미 1988년에 북남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고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북과 남의 무력을 대폭 줄이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를 단계적으로 철수시킬 것을 예견한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내놓았으며 지난 해에는 북남고위급회담을 마련하고 불가침문제를 비롯하여 군사적 대결상태를 실제로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이러한 성의있는 노력에 아무런 긍정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고 평화문제, 군사문제의 해결을 외면하고 있으며 도리어 군비를 대대적으로 증강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지금 그들은 「교류우선」이요, 「신뢰조성 우선」이요 하면서 군사문제해결을 뒤전에 미루려 하고 있다.

북남사이에 고향방문이나 경제교류 등도 물론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성과적으로 실현되자면 우선 속에 품은 칼부터 내놓아야 하며 북침과 남

침에 대한 위구심부터 풀어야 한다. 전쟁이 현실적 위협으로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군사문제의 해결을 회피하고 교류만을 고집하는 것은 사실상 평화도 바라지 않고 태왕과 교류 자체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북과 남사이의 불신을 가시고 대결상태를 해소하며 평화와 평화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어나가는데서 출발점으로 되는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여야 한다.

우리의 불가침선언 채택 제안에는 군축과 불가침선언 문제에 대하여 우리와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표명해온 남조선당국자들의 의사와 조선반도정세의 완화를 바란다는 미국의 의사도 충분히 고려되어 있다.

우리의 요구대로 불가침선언이 채택되고 평화제안들이 실현되면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 핵전쟁의 위협은 가시여지고 우리 나라는 안전한 비핵평화지대로 전환될 것이며 북과 남사이에는 반목과 대결이 끝장나고 신뢰와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평화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서 마땅히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미국은 우리의 진지한 평화노력과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조국통일열망을 바로 보고 힘의 립장에 선 위험한 전쟁정책을 포기하며 하루빨리 우리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조선에게 자기의 군대와 핵무기를 철수하여야 한다.

우리가 조선의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진정한 념원으로부터 북과 남 사이에 불가침선언을 채택하자고 하며 세계적으로도 외국군대의 철수가 하나의 추세로 되고있는 조건에서 미국군대가 남조선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할 구실이란 있을 수 없다.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수하라는 것은 평화와 완화에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에도 맞는 것이며 미국 인민의 리익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고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가 철수되면 우리 나라에서는 공고한 평화가 보장될 것이며 조국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는데 결정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열리게 될 것이다.

조선반도에 평화가 깃들고 조국통일의 평화적 전제가 마련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태도여하에 달려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말로만 〈평화〉와 〈랭전종식〉, 〈신뢰구축〉에 대해 떠들고 실지행동으로는 긴장을 격화시키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던 지난날의 나쁜 버릇을 버릴 때가 되었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금후 태도를 지켜볼 것이다.

○ 외교부 성명

(1994. 4. 28)

최근 조선정전협정을 유린하고 정전감시기구를 마비시키는 미국의 불법행위들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

미국은 조미관계문제를 원만히 풀 수 있는 전망이 보이던 제3단계 조미회담을 결렬시켜 놓고 지금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무력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우리 인민과 세계여론의 일치한 배격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미국은 「패트리오트」 신형미싸일을 남조선에 끌어들이고 4월말까지는 실제배비하며 올해 11월에는 핵전쟁연습인 「탐스피리트 94」 합동군사연습까지 강행하겠다고 한다. 이미 남조선에 「아파치」 직승기대대를 증강한 미국은 앞으로 1개 려단급의 각종 전투장비들을 반입하겠다고 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 주변에 집중된 미국의 해상무력도 해체되지 않고 있다. 이리하여 미국은 유엔의 이름으로 우리와 체결한 조선정전협정을 완전히 파기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놓았다.

정전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에서 외부로부터 작전물자반입과 무력증강을 하지 않는 것은 정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953년 7월 조선정전협정에 서명한 그해부터 벌써 일방적으로 협정의 합의사항들을 파기해버리었으며 남조선에 1,000여개의 핵무기를 포함한 현대적 무기들을 끌어들이었다.

지난 시기 미국은 그래도 조선정전협정이 두려워 남조선에 핵무기들을 비롯한 수많은 무력을 은폐된 방법으로 비밀리에 끌어들였으나 오늘에 와서는 신형미싸일들과 전투기술장비들을 백주에 공공연히 반입배비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 조선정전협정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미국은 지난 40여년동안 정전협정의 실제적인 당사자로서 지닌 의무에 배치되게 협정의 합의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유린말살하였을 뿐 아니라 정전감시기구마저 마비시키었다.

정전협정이 조인된 후 미국은 자기들의 협정위반행위가 중립국시찰소조에 의해 폭로되게 되자 1956년 6월에 정전협정 제2조 제3항에 따라 조직된 중립국감독위원회 시찰소조를 자기측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강제철회시켰으며 1991년 3월에는 정전협정에 비추어 아무런 법률적 타당성도 자격도 없는 남조선군 장성을 자기측 수석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정전기구가 자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

미국의 이러한 부당한 처사로 하여 오늘 조선정전협정은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할 수 없는 빈종이장으로 되고 군사정전위원회는 사실상 주인이 없는 기구로서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미국이 이때까지 정전협정을 체계적으로 파괴해 온 것으로 보나 지금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방대한 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면서 우리를 힘으로 위협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속심이 우리 나라를 포함한 아세아 사회주의나라들을 압살해 보려는데 있다는 것을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미국이 남조선에 마음대로 무력과 무장장비를 끌어들이고 조선반도의 정세도 제마음대로 격화시켜 전쟁접경으로 이끌어 가고 있지만 정전협정이 그것을 막는데 아무런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형편에서 정전협정이나 정전기구가 도대체 무엇에 필요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조선정전협정과 정전기구가 조선반도정세를 안정시키고 무력증강을 막는데

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못하고 있을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압살정책을 가리우는데 리용되고 있는 오늘 우리가 그런 협정과 기구에 더는 기대를 걸 수 없다는 것은 응당하다.

지금까지 정전상태가 유지되고 조선반도에 평화가 보장된 것은 우리 공화국의 인내성있는 평화애호적인 정책과 의지의 결과이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핵무기를 비롯한 일련의 복잡하고 첨예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전협정의 실제적 당사자들인 우리와 미국을 적대쌍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전체계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1950년대의 정전상태가 4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비정상적이다.

조선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제반 사태는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화해를 이룩하며 조선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자면 반드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현 정전기구를 대신하는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에서 무력증강이나 전쟁재발도 막고 정세를 안정시키며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실제로 믿음직하게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을 미합중국에 제기한다.

미국은 대결관념과 전쟁심리를 버리고 우리의 이 평화제안에 용해 나와야 할 것이다.

○ 합의이행을 위한 좋은 분위기가 필요하다.

(로동신문, 1995. 4. 13)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 괴뢰들이 미국이 조선반도 유사시 해군 총력의 40%를 투입할 것을 골자로 한 「남조선-미국 연합방위계획」을 최근에 수립했으며 올해 팀스피리트군사연습 재개문제도 다시 논의한다고 떠들고 있다.

남조선 파괴들이 떠드는 소리인 것만큼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명백치 않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문제는 미국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경수로문제를 가지고 복잡성을 야기시킨 미국의 속심이 밝혀지겠기 때문이다.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된 이후에도 미국의 강경보수세력은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야망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다. 그들은 남조선 강점 미군축감계를 백지화하고 무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팀스피리트훈련 중지로 생긴 공백을 메꾼다는 구실밑에 새로운 군사연습까지 하려 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우리의 아량있는 노력에 의하여 재개된 경수로협상을 앞두고 우리가 내놓은 획기적인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느니 우리에게 그 누구의 역할을 수용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지어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저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협상의 종결을 선포하고 나아가서 조·미기본합의를 파기할 것이라고 우리를 공공연히 위협해 나서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에게 대한 전면대결을 선포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제반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미국이 경수로협상에서 노리고 있는 진짜 속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금 깊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우리의 짐작이 틀리지 않는다면 미국의 실제적인 관심사는 경수로 제공이나 조·미기본합의문 이행에 있는 것보다도 우리 문제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복잡성을 조성함으로써 결국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기 위한 새로운 구실을 마련하자는데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지금의 정세는 조·미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자면 우선 그에 맞는 분위기를부터 조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증시해주고 있다.

조·미사이에 대결상태가 계속되고 긴장이 격화되는 속에서 합의이행에 기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이다.

조·미합의 이행에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자면 우리와 미국사이에 적대관계부터 해소시켜야 한다.

만일 미국이 진심으로 조·미기본합의문의 이행을 원한다면 경수로문제와 관련한 남조선 괴뢰들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할 것이 아니라 평화협정체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조·미기본합의문 이행의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성근하게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성명

(1995. 5. 3)

지난해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 때 대한 제안을 내놓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실질적 조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하였다.

그러나 미국측은 조선반도에서 정세를 안정시키고 공고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합리적인 제안에 대하여 아무런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자기의 새로운 동아시아 전략에 따라 남조선에서 미군의 단계적 축감계획을 취소하고 군사장비의 증강을 더욱 다그치고 있으며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자주 벌여놓고 있다.

미군사당국이 발표한 것만 하여도 5월에는 150대의 에이 브라암스 탱크들이, 올해 안에는 공격용 직승기 아파치 24대가 남조선에 반입된다고 한다.

더욱이 엄중한 것은 미국이 남조선을 부추켜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완충 지대로 설정된 비무장지대안에 요새 진지들과 군사시설물들을 대대적으로 구축하여 놓은데 이어 최근에 와서 탱크와 장갑차, 포들을 비롯한 중무기등을 대량 반입하여 전개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매일과 같이 현대적 무기로 장비한 수천명의 군사 인원들을 비무장지대에 끌어들여 우리측을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하고 있다.

이리하여 오늘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은 본연의 사명과는 배치되게 쌍방사이의 무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침을 위한 공격출발 진지로 전변되었다.

미국측은 중립국감독위원회 체코슬로벤스키와 폴스키 대표단이 철수한 조건에서 조선 정전협정 제37항에 따라 이 기구가 구성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그것을 저들의 침략전쟁 준비를 은폐하기 위한 노리개로 이용할 목적으로

아직도 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 놀음을 정기적으로 벌이고 있다.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는 미국측이 우리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 제안에 역행하는 행위를 계속 감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하기로 하였다.

첫째, 우리측이 관리하던 판문점에 있는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사무실과 휴게실, 오락실을 완전히 봉쇄한다.

둘째, 정전감독기구가 깨어진 조건에서 미군측 성원들과 기자들, 중립국 감독위원회 성원들이 허가없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우리측 지역으로 넘어오는 것을 일체 금지한다.

셋째, 미국측이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남조선 괴뢰들의 무력증강과 군사적 도발행위를 계속 묵인한다면 우리도 그에 대응하여 비무장지대의 지위와 관련되는 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미국측의 태도를 예리하게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다.

〈우리측〉

○ 남북간 상호불가침협정 체결 제의(대통령 기자회견)

(1974. 1. 18)

“평화협정을 맺자”하는 얘기는 내가 알기에는 지금부터 2, 3년전인 1971년 8월에 「뉴욕타임즈」의 어느 기자가 중공을 방문했을 때에 주은래 중공수상이 처음으로 끄집어 낸 이야기라고 나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북한측에서도 자주 이런 얘기를 들고 나왔고, 특히 남북조절위원회 석상에서 북한측에서는 평화협정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번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측에서 주장하는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그 어휘를 보면 평화란 말이 붙어 있어서 대단히 듣기 좋은데 과연 그 사람들이 평화를 위해서 이런 협정을 맺자 하는 얘기가, 그것이 진심이나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 이것입니다.

북한측에서 주장하는 평화협정의 내용을 따져보면 한 서너 댓가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는, 제일먼저 들고 나오는 것이 외군철수를 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한에 있는 미군을 전부 철수시키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북이 병력을 각각 10만 또는 그 이하로 줄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서로 앞으로는 군비경쟁을 하지 말고 외부로부터 장비나 군수물자도 들여오지 말자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협정이 체결이 되면 지금 있는 휴전협정은 없애버리자, 여기에 평화라는 말을 자꾸 공산주의자들이 들고 나와서 자칫 잘못하면 국민들이 평화란 어휘에 대해서 약간 현혹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보면 결국 남한에 있는 미군은 전부 나가고 군대는 10만이하로 줄이고 앞으로 외부에서부터 무기는 절대 들여 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휴전협정을 없애버리자, 이런 뜻인데 이것은 즉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한다면 우리의 국방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놓고 보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무장해제를 시켜놓고 앞으로 적당한 기회가 오면 무력으로 남침을 해서 적화통일을 하자 하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의 제의를 그대로 받아 들인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꼭 6·25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 뻔하며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화, 평화하지만 이 평화협정의 내용을 보면 대단히 위협천만한 그런 음모와 계략과 함정이 여기에 숨어 있다,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우리가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되겠다. 6·25와 같은 그런 쓰라린 경험을 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경험이 없다면 혹 한번쯤 속을지 모르지만 6·25를 겪은 우리로서는 한번은 속지마는 두번 다시는 속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요즈음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남북한 연방제 운운하는 소리를 듣고 나오는 데, 이것도 내용을 따져보면 평화협정이라는 것과 똑같은 그 수법입니다. 그야말로 양두구육격이다. 양 머리를 내놓고 뒷전으로는 개고기를 판다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평화, 평화해서 겉으로는 좋은 말을 내놓고 뒷전으로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경계해야 할 줄 압니다.

1953년 휴전협정 체결당시에 그 협정조문을 보더라도 여기에는 분명히 외부로부터의 무기반입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휴전협정이 되던 그날 이후에는 외부로부터 남한이나 UN군측이나 공산측이나 무기를 들여와서는 안된다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공산측에서는 이것을 먼저 위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무기를 자꾸 반입하기 때문에 UN측에서 여러번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지만, 공산측에서는 들은체 만체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조문은 죽은 조문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공산주의자들과의 조약이라든지 협정이란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고 이것은, 오늘날 월남휴전협정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휴전협정체결후 1년이 됩니다마는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하루에도 수십번

위반사건이 있고, 수십번 전투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라는 어휘에 대한 개념에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평화하고는 근본적으로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전쟁이라는 것은 완전히 포기하고 다시는 서로 침략을 하지 않는다, 무력을 가지고 대결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평화라고 하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자기들이 어떠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시간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평화운운하는 이야기를 들고 나옵니다.

그동안에 자기들이 무엇을 하느냐, 모든 준비를 하고 전쟁준비를 해서 준비가 되면 또 도발을 한다. 이것은 하나의 위장전술이다. 그래서 북한측에서는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요즈음에 와서는 이것을 하나의 정치선전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은 지금 전쟁을 원하지 않고 평화를 원하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남측에 제의를 했는데 남한에서는 이것을 반대를 한다. 자기들은 평화를 원하는데 남한에서는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고 돌아 다닙니다. 늘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식이 똑같은데 만약에 그들이 진심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평화협정 같은 것을 새로 대지 않더라도 지금있는 휴전협정만 잘 준수하더라도 나는 전쟁을 막을 수 있다. 또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남북이 성실히 이행한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화정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평화라는 것은 무슨 협정이다, 조약이다 하여 종이 한장에 서명을 했다고 해서 보장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평화를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 서로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의사가 명백히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사만 분명히 있다면 협정이 없더라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에 한국 공산주의자들이 휴전협정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을 했느냐 하는 것을 반문하고 싶습니다. 휴전후 지난 20여년동안 우리가 알기에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1,300여번이나 휴전협정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협정에 그러한 조문이 없어서 위반을 했느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또한 7·4공동성명을 그들이 얼마나 성실히 지켰느냐, 7·4남북공동성명을 내놓고도 최근에 와서 지금까지 아무 말썽이 없었고 조문에도 명시되어 있는 서해해역을 자기들 관할해역이라고 강변하면서 도발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7·4공동성명의 정신이나, 이것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남북의 평화정책을 위해서 새로운 협정이 꼭 필요하다면, 또 북한측에서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면 평화협정 운운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기회에 “남북간의 상호불가침협정을 체결하자”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이 불가침협정은 그 골자를 서너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이 서로 절대로 무력침범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약속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는 상호내정간섭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여하한 경우라도 현행 휴전협정은 그 효력이 존속되어야 한다는 이 세가지 골자만 포함된 불가침협정이 체결된다면 그리고 이것을 서로 성실히 준수만 한다면 나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전쟁은 예방된다고 봅니다. 평화는 유지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것을 지키겠다는 성의와 의사가 없다면 이러한 협정은 열번 스무번 뺏어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가침협정을 뺏어놓고 앞으로는 통일이 될 때까지 평화공존을 해나가자, 그동안에 서로 대화도 활발히 하고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하여 통일의 기반을 하나 하나 다져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 여름에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6·23선언의 정신과도 일치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통일을 아무리 갈망해도 하루 이틀에 통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지금과 같은 남북의 관계로서는 당장 통일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지금과 같은 남북의 관계로서는 당장 통일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시기라든지 여건도 성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통일될 때까지 평화공존을 해나가면서 그동안에 북한이 활발히 대화도 하고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하나하나 다져 나가자, 이것이 6·23선언의 정신이요 또한 우리의 주장입니다.

결으로는 평화협정을 내세우고 평화를 원하는 체 하면서 뒷전으로는 판전

을 피우는 사고방식과 행동을 가지고는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정착은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북한측에서 주장하는 평화협정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경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대통령 국정연설,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천명시 「남북한 기본관계 잠정협정」 체결의

(1982. 1. 22)

(전 략)

남북 쌍방간에 이같은 통일헌법의 마련을 위한 역사적인 작업이 순조롭게 추진되려면 우선 신뢰가 조성되어야 하고 민족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착실하게 해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남북 쌍방은 그 동안의 민족자해적이며 비정상적인 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하루 속히 민족적 화합을 실현할 수 있는 민족자애적인 정상관계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본인은 남북쌍방이 무엇보다도 상호관계를 정상화하고 이 기초위에 민족화합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를 희망하면서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의 실천조치로서 다음의 합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합니다.

첫째, 쌍방은 장차 통일국가가 수립될 때까지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둘째, 쌍방은 쌍방간 분쟁문제 해결에 있어서 모든 형태의 무력 및 폭력의 사용 또는 위협을 완전히 지양하고 모든 문제를 상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한다.

셋째, 쌍방은 상호관계에 있어서 현존하는 상이한 정치질서와 사회제도를 상호 인정하며 서로 상대방의 내부분쟁에 일체 간섭하지 아니한다.

넷째, 쌍방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전쟁방지를 위하여 현존 휴전체제를 유지하면서 군비경쟁의 지양과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조치를 협의한다.

다섯째, 쌍방은 분단으로 인한 민족의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며 민족적 신뢰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사회적 개방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쌍방은 이산가족의 인도적 재회문제를 포함해서 남북간의 자유로운 인적 왕래와 다각적인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교역·교통·우편·통신·체육·학술·교육·문화·보도·보건·기술·환경보존 등 제분야에서 협력하며 이를 통하여 민족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구체적인 노력을 경주하기로 한다.

여섯째, 쌍방은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상·이념·제도의 차이에 구애됨이 없이 전세계 모든 나라들과 각기 체결한 모든 쌍무적 및 다자간 국제조약과 협정을 존중하며 민족의 이익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협의한다.

일곱째, 쌍방은 각료급 전권대표를 임명하여 각기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부를 설치한다. 쌍방은 상호협조에 의하여 연락대표부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자기측 관할영역에 주재하는 상대방 연락대표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편의와 협조를 제공한다.

본인은 북한측이 하루속히 남북한 당국 최고책임자간의 회담에 호응하여 이자리에서 이상의 모든 문제들에 관하여 허심탄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후 략)

○ 국토통일위원장, 남북한당국 대표회담 및 유관국회의 제의 대북성명

(1984. 1. 11)

우리 정부는 남북한간에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하여 지난 1981년 1월 12일 「남북한 최고책임자의 상호방문」을 제의하였고, 같은해 6월 5일에는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간의 직접회담을 제의하면서 회담시기와 장소를 북한측에 일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1982년 1월 22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천명하였고, 작년 1월 18일에는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에서 협의·해결하여야 할 4개항의 당면과제를 제시하는 등 한반도 긴장완화와 민족화합을 통한 평화통일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사이에는 북한당국의 대화거부와 폭력도발로 말미암아 여전히 긴장이 감돌고 있으며 통일을 위한 접촉과 대화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대한 북한당국의 무모한 도발은 남북한관계를 극도의 위험한 상태로까지 악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리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북한당국이 인정한 바와 같이 남북한간의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전쟁이 되는 것이며, 이는 곧 핵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북한당국은 「버마」암살폭발사건을 일으키기 하루전인 1983년 10월8일 이른바 「3자회담」문제를 제기했으며, 다대포에 무장간첩을 침투시킨 바로 그날인 1983년 12월 3일에도 이를 또 주장하였고 그리고 오늘 아침 다시 이른바 「3자회담」을 공개 제의하였습니다.

북한당국이 천인공노할 「버마」사건을 저질러 놓고 이에 대한 시인·사과는 커녕 동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허위선전하고 오히려 긴장격화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시키려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성실한 대화의 자세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민족 내부문제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북한간에 대화를 갖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한이 대화를 갖고 민족의 현안문제와 장래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 민족의 존엄을 지켜 나가는 길이라고 본인은 확

신합니다.

오늘날의 경색화된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개척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미 제의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이 개최되어야 하며,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책임있는 남북한당국 각료급회담이라도 열어야 할 것입니다. 남북한간의 긴장상태 해소와 군비경쟁중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불가침선언 문제도 이러한 남북대화에서 협의·결정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남북대화를 순조롭게 진행시켜 가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보장과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환경조성에 도움이 된다면 한반도 분단과 한국동란에 직접·간접으로 책임있는 관계국들이 함께 참가하는 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당국이 진정 민족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통일성업에 참여할 의사를 갖고 있다면 하루 속히 폭력을 버리고 이러한 폭넓은 대화의 광장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북한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의 주장이 위장평화의 책략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들어내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북한당국이 우리와 함께 긴장완화와 민족화합의 요구에 호응해 나선다면 80년대 안에 통일문제 해결의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제40주년 광복절 경축사

(1985. 8. 15)

(전 략)

1950년 6월 25일 북한공산집단의 남침으로 우리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으며, 한 강토와 한 나라에서 같은 민족으로 살아야 할 우리는 이 순간에도 군사적 대치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북분단이야말로 민족의 역량을 낭비하고 민족의 안녕을 위협하는 온갖 시련과 고통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스스로의 생존과 번영을 확고히 보장하고 세계사의 진운에 공헌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이 민족분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신뢰와 화합의 신기원을 열어 평화와 통일을 성취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지금 남북한간에는 이산가족문제와 경제분야에 관하여 그리고 양측 국회간에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대화가 남북한 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여는 뜻깊은 시발이 되도록 내실있게 이를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한관계의 확고한 기초는 하루라도 빨리 마련되어야 하며, 그것은 무엇보다도 남북이 서로 상대방을 침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약속하고 그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교류와 협력의 원칙을 합의함으로써 튼튼하게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상호불가침의 명제는 6천만 우리겨레 모두가 한시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지상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관해서 그것을 추구해 왔으며, 우리의 결의와 실천노력은 오랜 세월에 걸친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평화적 통일을 그 전문에 명시하고 모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함으로써 불가침을 국가최고의사로 민족과 세계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특히 지난 1982년에 통일을 이룩할 때까지의 실천조치로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고, 그 내용으로서 모든 형태의 무력 및 폭력사용 금지와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과 상대방의 내부분쟁 불간섭을 포함한 7개항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북한의 두 당국간에 상호불가침 문제를 비롯해서 남북한의 정상적인 관계를 여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하루라도 빨리 토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인 것입니다.

북한측은 근자에 남북간에 불가침을 선언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남북간은 물론, 어떤 당사자 사이에도 합의문서를 채택하는 것, 그 자체도 필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의사항을 존중하여 이를 준수하고 실천하려는 의지와 행동이 있는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북측이 지난 40년간에 줄기차게 추구해온 적화혁명전략을 포기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대남적화통일이라는 기본노선을 계속 고수할 경우, 그들이 말하는 불가침선언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위장구호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계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소 불가침조약을 비롯한 수많은 불가침조약이 그 일방의 파기로 휴지화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2년동안 북한측이 휴전협정을 얼마나 난폭하게 위반했으며, 그로 인해 북한측에 대한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불신이 얼마나 고조되었는가 하는 점이야말로 실천의지와 이행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북한측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바란다면, 이를 위한 어떤 협정이나 선언을 채택하는 것과 함께 누가 보더라도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이행할 것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는 노력과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불필요한 외교적인 경쟁과 대결을 지양하고 국제무대에서 상호협력할 것을 밝히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도 상호불가침의 실천의지를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당사자간의 합의가 실효성 있게 지켜지기 위해서는 한반도와 이해관계가 밀접한 주변국가들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통의 관심과 이해를 개발시킴으로써 그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건설적으로 기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여기에서 본인은 북한측이 이러한 남북한관계의 기본적인 방향에 관해서 성실한 자세를 보이고, 현재 진행중인 남북회담의 내실을 거두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협력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본인이 81년에 제의한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에도 긍정적인

자세로 나오게 되기를 본인은 지금도 소망하고 있으며, 이것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광복 40년이 되는 이 뜻깊은 해에 남북관계의 새로운 차원을 펼침으로써, 분단과 분열의 금세기를 청산하고 통일과 화합의 새 세기를 건설하는 굳건한 초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온 겨레와 더불어 소망하는 바입니다.

(후 략)

○ 외무부 성명, 「남북외무장관회담」 제의

(1987. 8. 3)

(전 략)

한국정부는 민족화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온 겨레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왔으며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는 어디까지나 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한 당사자간의 회담을 통해 협의·해결해 나가는 것이 겨레의 염원에 부응하는 올바른 길이라고 믿고 있다.

평화와 통일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문제이며 그 주체는 당연히 우리 민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측이 남북한 관계개선과 긴장완화에 진정으로 관심이 있다면 그 토대가 되는 신뢰구축에 성실성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동안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신뢰회복을 위해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회담, 남북국회회담 예비접촉을 진행해 왔으며 '85년 가을에는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까지 상호교환함으로써 흩어진 혈육간에 재회의 눈물을 흘리는 감격의 순간도 맛보았다.

더욱이 이 가운데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경제회담은 이제 쌍방이 조금만 양보하고 협력한다면 구체적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북한측이 '86. 1, 「팁스퍼리트」 훈련을 구실삼아 일방적으로 모든 회담을 중단시킨 채, 3자군사당국자회담을 제의한 데 이어 또다시 미국을 포함한 3자군축협상을 제네바에서 갖자고 들고 나온 것은 남북한당사자 해결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제차 강조하지만 남북한간의 현안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회담 등 그동안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기존대화를 재개하여 성실히 발전시켜 나가면서 수자원회담을 하루속히 열어 상호신뢰의 기반을 다져나가는 데 있다.

또한 남북한간의 군축문제협의를 남북한 유엔가입 및 주변4강에 의한 교차승인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남북한 교류협력의 실현을 통한 신뢰회복과 평화정착이 이룩되어야 그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북한의 군축문제는 한반도가 당면한 현실상황하에서 군사충돌 방지는 물론, 평화유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남북한 불가침협정 체결과 유엔가입 및 교차승인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남북한 외무장관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한다.

이 회담에서는 기존대화의 재개·발전과 수자원문제의 협의·해결 등 신뢰구축문제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및 평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군축을 포함한 제반문제, 그리고 남북총리회담을 성사시켜 궁극적으로는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을 실현시키는 문제 등 양측의 모든 관심사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

동 회담은 남북한 외무장관이 금년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총회개최 직후부터 9월말 사이에 뉴욕에서 개최하든가 또는 같은 시기에 상호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측이 남북간의 신뢰회복과 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충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

○ 노태우대통령,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천명시 남북연합체제 구성 제의

(1989. 9. 11)

(전 략)

통일로 가는 중간단계로서 먼저 남과 북은 서로 다른 두 체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공영하면서 민족사회의 동질화와 통합을 촉진해 나가야 합니다.

남북간에 개방과 교류·협력을 넓혀 신뢰를 심어 민족국가로 통합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사회·문화·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남북간에 존재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정치적 통합의 여건은 성숙될 것입니다.

통일을 촉진할 이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쌍방이 합의하는 현장에 따라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연합체제 아래에서 남과 북은 민족공동생활권을 형성하여 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토록 하여 민족공동체의 발전을 보다 가속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통일국가로 가는 중간과정의 과도적 통일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남북연합은 최고결정기구로 「남북정상회의」를 두고, 쌍방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남북각료회의」와 남북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평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북은 각료회의와 평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합의사항 이행 등 실무를 위해 공동사무처를 두고 서울과 평양에 상주연락대표를 파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사무처를 비롯한 남북연합의 기구와 시설을 비무장지대 안에 평화구역을 만들어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구역은 점차 「통일평화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남북각료회의」는 남북의 총리를 공동의장으로 하여 각각 10명 내외의 각

료급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안에 인도, 정치·외교, 경제, 군사, 사회·문화분야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각료회의」는 남북간의 모든 현안과 민족문제를 협의조정하고 그 실행을 보장하되, 구체적으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으로는 1천만 이산가족의 재결합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치·외교분야에서는 남북간에 정치적 대결상황을 완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민족역량의 쓸모없는 낭비를 막으며 해외동포의 권익은 물론, 민족적 이익을 함께 신장시킬 것입니다.

경제 및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우선 남북사회의 개방과 다각적인 교류·교역·협력을 추진하고 민족문화를 함께 창달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동번영의 경제권을 형성하면 남북 모두의 발전을 이루고 민족성원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군사분야에서는 과도한 군비경쟁을 지양하고 무력 대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휴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꿔 나가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중 략)

새 공화국 출범이후 저는 남북간에 화해와 통일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 남북의 정상들이 서로 만나는 것임을 여러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저는 「남북정상회담」이 가능한 한 빨리 열려 본격적인 남북협력과 통일의 시대를 열 현장에 합의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 현장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본방안, 상호불가침에 관한 사항, 통일의 중간단계로서 남북이 연합하는 기구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합

의가 담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루속히 이같은 민족공동체 헌장이 마련되어 온 겨레 앞에 공포되기를 기대합니다.

(후 략)

다. 군사훈련 문제

〈북인측〉

○ 외교부 성명

(1986. 1. 11)

오늘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막으며 북과 남사이의 대화에 보다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는데서 더욱더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북과 남사이에는 여러 갈래의 회담들이 진행되었다.

그것은 분열의 고통을 겪고있는 조선인민에게 기쁨을 주었으며 이것을 계기로 전민족범위에서 통일에 대한 열망이 한층 더 높아졌다.

우리는 올해에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북과 남사이의 대화를 추진시키는데서 보다 큰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인정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조선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공화국과 미국, 남조선 사이에 3자회담을 하여야 하며 북과 남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회담들을 잘 추진시키고 최고위급회담도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히시었다.

지금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에호인민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획기적인 새로운 제의를 열렬히 환영하면서 올해에 조선반도의 정세가 완화되고 대화에서 좋은 결실을 가져옴으로써 북과 남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대결상태를 해소하는데서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

북남대화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려면 북과 남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여야 하며 그러자면 무엇보다 먼저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하지 않을데 대한 조치가 시급히 취해져야 한다.

우리는 조선반도의 정세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이미 군사정

전위원회를 통하여 조선에서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완전히 중지하며 대화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모든 군사연습을 중지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이 현실적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을 하면서 마주앉아 대화를 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것이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호상 불신을 심화시키며 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되리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지난해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대규모의 팀스피리트 85 합동군사연습을 벌려 놓음으로써 모처럼 마련되었던 북남대화를 오랜 기간 중단시키고 정세를 격화시켰다.

이러한 사태가 반복된다면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는 언제가도 완화될 수 없을 것이며 북과 남의 대화는 또다시 중단되는 불미스러운 결과가 빚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무성의한 태도로 하여 또다시 남북대화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대화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긴장상태의 격화를 막기 위한 전환적인 대책을 시급히 취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게 나서고 있다고 인정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북과 남사이의 대화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로서 1986년 2월 1일부터 공화국북반부의 전령역에서 큰 규모의 군사연습을 하지 않으며 북남대화가 진행되는 기간 모든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이 결정을 내외에 엄숙히 알리면서 미국정부와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이 발기에 호응하여 1986년 2월 1일부터 남조선의 전지역에서 군사연습을 하지 않을데 대하여 선포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길 것을 제의한다.

군사연습은 그것이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조선반도에서 하든 그 주변에서 하든 다 대화상대방에 위협으로 된다.

우리는 군사연습을 그만둘데 대한 우리의 제안과 관련하여 미국과 남조선 측이 그 어떤 협상을 필요로 한다면 언제나 그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천명한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며 북과 남사이의 대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데 대한 우리의 이 제안은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에호인민들의 염원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조선반도의 현실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평화에호적인 제안이다.

이 제안이 실현되면 조선에서 북과 남사이의 관계는 현저히 개선되고 조선반도에는 평화의 기운이 점차 조성되게 될 것이다.

조선반도에서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대규모의 군사연습이 중지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호상불신을 제거하고 신뢰를 구축하는데서도 좋은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서로의 신뢰를 구축하고 화해를 이룩하며 대화를 진전시켜 조선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실현하려는 립장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이번 공명정대하고 평화에호적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올해는 국제평화의 해이다.

세계평화에호인민들은 이 평화의 해에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전쟁과 분쟁이 없이 평화롭게 살아나가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이 있을 것을 원하고 있다.

조선반도는 세계에서 핵전쟁의 위협이 가장 첨예하게 조성되고 있는 곳이다.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가 완화되고 공고한 평화가 이룩되어야 아세아와 세계평화에호인민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세계 모든 평화에호나라 정부들과 인민들이 조선반도에 조성된 정세에 깊은 주의를 돌리고 조선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좋은 분위기 속에서 북남대화를 잘 진척시켜 나갈데 대한 우리의 전환적인 제안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적극 지지협력해 주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 우리의 평화정책의 중대한 승리

(로동신문, 1992. 1. 10)

북남고위급회담에서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대한 합의서」가 채택되고 북과 남사이에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합의를 본데 이어 1월 7일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92년도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공동으로 발표하였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극도에 이른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의 유리한 전제를 마련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견결히 수호하기 위하여 우리 당과 국가가 일관하게 견지하여온 평화애호적인 대내외정책과 그의 실현을 위한 전제 조선인민의 장기적이고도 간고한 투쟁에 의하여 이룩된 중대한 승리이다.

1976년에 시작된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으로 말하면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침략과 전쟁정책의 일환으로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예비전쟁, 핵시험 전쟁이다.

우리 인민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해마다 이 군사연습에 술한 병력과 현대적인 살인무기들을 투입하여 하늘과 땅, 바다에서 우리를 공공연히 위협공갈하였으며 최근년간에 와서는 그것을 옹근 하나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방대한 규모에서 계단식으로 확대하였다.

이 모험적인 군사연습소동으로 하여 모처럼 마련된 여러갈래의 북남대화들은 중단상태에 빠져들어가고 평화통일의 앞길에는 난관이 조성되었으며 우리 인민의 머리우에는 언제 터질지 모를 핵전쟁의 검은 구름이 가실 날이 없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선에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와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일관한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16년 동안이나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그만둘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특히 우리는 조선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건설적인 조치로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가입하였으며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위한 획기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우리는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이 핵무기보유국으로서 옹당 비핵 국가인 우리 나라를 핵무기로 위협하지 말아야 할 자기의 의무를 리행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계속 강행하면서 우리에게 핵 위협을 가하였으며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대한 핵사찰만을 강요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사실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대한 핵사찰문제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의한 의무수행과 관련되는 문제로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로 제기되었다.

결국 핵사찰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더욱 복잡한 문제로 번져갔으며 최근에는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이를 걸고 우리공화국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겠다고 횡포를 부리는 엄중한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핵담보협정체결과 핵사찰문제에 대한 우리의 립장은 정정당한 것이었다.

우리는 핵사찰문제가 공정하게 해결되려면 남조선에 배비된 미국의 핵무기가 완전히 철수되고 우리의 평화적 핵시설과 남조선에 있는 미국핵기지에 대한 사찰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핵전쟁연습인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이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관하게 주장하였다.

우리는 그 누가 압력을 가한다고 하여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우리의 이러한 립장은 전체 조선인민과 현실을 공정한 눈으로 보고있는 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드디어 미국은 지금에 와서 전술핵무기의 철수제안을 내놓고 남조선에 실전배치된 자기의 핵무기존재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철수하였으며 그토록 반대하던 동시사찰을 받아들이고 이를 위한 협상제의에 응해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가 내놓은 비핵지대화 제안의 일부 내용을 수용하여 우리와 비핵화선언을 합의하여나서는데 이르게 되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에게는 핵담

보험정에 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우리는 핵담보협정문제의 해결을 위한 환경과 조건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 협정에 서명하고 해당한 절차에 따라 핵사찰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을 확약하고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합의한 지금에 와서 사실상 남조선에 미군이 남아있을 구실이 없게 되었으며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계속할 그 어떤 명분도 세울 수 없게 되었다.

결국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중지를 공동으로 발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당연한 귀결로 되는 것이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조국과 민족,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전체 인민의 투쟁이 낳은 빛나는 결실로 되는 것이다.

사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대규모적인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에 자체의 힘으로 맞서 나간다는 것은 매우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 인민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하루이틀도 아니고 매해 몇달씩 생산에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많은 인원을 자기 일터에서 떼내어 방어태세를 갖추게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모험적인 군사연습소동으로 하여 우리가 입은 손실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큰 것이었다.

우리 인민은 불굴의 투지로 이를 견디며 내면서 사회주의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지켜 싸웠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이 우리의 「남침위협」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떠들었지만 우리에게는 그 누구를 공격할 능력도 없었으며 또 그럴 의사도 없었다.

우리로서는 오로지 평화적인 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체방위만을 하자고 해도 아름찬 것이었다.

지금에 와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그만두겠다고 한것은 간고분투하여온 우리의 투쟁이 열매를 맺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 반사회주의 책동에 맞서 당의

령도를 받들어가는 길에서 이룩한 성과에서 커다란 민족적 긍지와 필승의 신념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며 우리의 미래를 확신성있게 내다보게 된다.

물론 오늘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탐스퍼리트」훈련의 중지를 발표하였지만 그것은 영원히 그만두겠다고 한것은 아니다.

또 그들의 본성이 하루하침에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 자신이 앞으로 우리에게서 그 무슨 구실을 찾게 되면 우리를 반대하는 「탐스퍼리트」 합동군사연습이 계속될 것이라는 언동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는 승리에 자만도 취하지 말아야 하며 높은 혁명적 경각성을 가지고 그 어떤 불의의 사태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미국은 완화와 화해에로 나가는 세계의 흐름에 맞게 랭전시대의 사고방식과 힘의 정책을 비려야 하며 남조선당국도 북남합의서를 리행하는데서 성실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 인민은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며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 것이다.

○ 침략자들에게 단호한 징벌을 가할 것이다.

(「조평통」서기국 보도, 1993. 3. 5)

지금 남조선에서는 「탐스퍼리트 93」 합동군사연습의 실동단계를 앞두고 미국과 남조선통치배들의 북침핵전쟁준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외신보도들에 의하면 미제는 「탐스퍼리트 93」 전쟁연습에 괄도의 엔더슨기지에 있는 초음속대형전략폭격기 「비-1비」 3대와 군산기지를 거점으로 「에프-117에이」 스텔스폭격기 4대를 참가시킨다고 한다.

「탐스퍼리트」 전쟁연습에 처음으로 투입되는 「비-1비」 전략폭격기는 핵폭탄투하를 사명으로 하고 있는 최신행공격기이다.

이런 군용기의 투입은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이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실전으로 이행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전쟁초기단계에 공화국 북반부의 전략적 목표를 타격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의 핵전쟁 도발흉계는 이미 「팀스피리트 93」 합동군사연습의 전개단계인 2월초부터 로골적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 17일부터 25일사이에만 하여도 미제는 미국본토와 일본의 요코다, 이와구니, 오키나와를 비롯한 태평양지역 군사기지들로부터 미군의 핵적재 전투폭격기와 수직리착륙 추격습격기들을 남조선의 군산기지와 작전지역들에 이동배치하였으며 지난 2월 28일에는 초대형 핵항공모함 「인디펜던스」호와 유도미싸일순양함 「방커 힐」호를 「팀스피리트 93」 전쟁연습에 참가시키기 위하여 일본 나가사끼현의 사세보항에 입항시켰다.

이번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엄중성은 지난 시기와는 달리 병력과 군사장비를 수송하는 전개단계에서부터 모험적인 각종 북침전쟁연습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미제는 지난 2월 한달동안에만도 수많은 각종 전투기들을 외연도, 안면도, 려주, 평창, 공주 등지에 출동시켜 남조선괴뢰 공군비행대들과의 합동밀에 우리를 기습선제타격하기 위한 도발적인 공중연합작전연습을 감행하였다.

한편 미제의 비호밑에 남조선당국자들도 2월 24일 전선중부에서 「팀스피리트 93」 합동군사연습의 성공을 위한 「도하작전시범」이라는 불장난을 벌린데 이어 2월 25일에는 과주군 백련리, 련천군 적거리, 남조선 강원도 철원군 지경리에 괴뢰군 대구경포집단들을 내몰아 비무장지대 린점지역들에 100여발의 포탄을 마구 퍼부었으며 양구군 건솔리부근의 전투진지를 차지한 괴뢰군무장악당들은 우리의 면전에서 수백발의 대구경기관총과 자동소총 사격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미제는 도발적인 북침전쟁연습을 벌리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공화국북반부 전반적 지역에 대한 공중정탐행위도 집중적으로 감행하고 있다.

지난 2월 17일부터 27일사이에 미제는 육군전술정찰기들과 「유-2」 고공전략정찰기들을 포함한 각종 정찰기들을 군사분계선 린점 전연지대상공에 출동

시켜 공화국북반부 전반적 지역에 대한 공중촬영과 전자정찰 행위를 감행하였다.

미제가 2월 한달동안에 여러가지 기종의 정찰기들을 내몰아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공중정탐행위를 감행한 횟수는 무려 1990여차에 달한다.

이 모든 것은 미제가 「팀스피리트 93」 합동군사연습의 전개단계에 들어가서는 불의에 실전으로 이행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하는 매우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다.

그러나 미제와 남조선통치배들이 핵전쟁을 일으키는 것으로 우리 인민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만일 침략자들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감히 새 전쟁의 불집을 터뜨린다면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는 당과 수령을 목숨으로 사수하는 총대가 되고 폭탄이 되어 침략자들에게 단호한 징벌을 가하고 우리식사회주의 제도를 끝까지 지킬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통치배들은 우리의 경고를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 북한 외교부 대변인, 「포커스렌즈」 훈련 관련 성명

(1992. 8. 19)

지금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남조선에서 도발적인 「을지 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을 벌리고 있다.

이번 군사연습에는 미국본토병력 4,000여명을 포함하여 남조선주둔 미군 등 1만 4,000여명이 참가하게 되며 만전쟁에서 사용되었던 「패트리오트」 미사일과 「에프-117」 스텔스전투폭격기, 공중조기경보기 등 최신에공적무기들이 새로 많이 투입되었다고 한다.

「을지 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은 지난 시기 남조선에서 해마다 진행하던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기 위한 로골

적인 군사행동으로서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전체 조선인민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된다.

오늘 국제관계에서 동서사이의 령전구조가 허물어지고 동북아세아지역 나라들이 화해를 바라고 있는 때에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남조선에서 대규모적인 「을지 포커스렌즈」 합동군사연습을 한사코 벌리는 것은 조선반도에서의 평화와 완화과정을 막고 전진하는 북남대화에 제동을 걸기 위한 계획적인 긴장격화책동이다.

지금 「조선반도의 북남사이에는 화해와 불가침,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와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 발효된데 뒤이어 그 리행을 위한 대화와 협상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8·15를 계기로 제3차 범민족대회와 제2차 북남 해외동포 청년학생 통일대축전이 성황리에 진행되어 완화와 통일기운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

세계평화에 호인민들은 조선반도의 정세가 완화로 좋게 발전하고 있는 데 대하여 환영을 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완화와 통일지향에 역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남대화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는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소동을 또다시 벌리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의 이와 같은 행동은 「북남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협력, 교류에 관한 합의서」의 정신에도 완전히 위반된다.

더우기 북과 남사이에 합의서의 리행을 위한 부분별 공동위원회들이 발족되어 오래지 않아 자기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때에 대화상대방을 반대하는 큰 규모의 군사연습을 벌려야 할 그 어떤 명분이란 있을 수 없으며 그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에게 조선반도의 평화와 남북대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이 힘으로 그 누구를 위협하여 거기에서 그 무엇을 얻어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심히 잘못된 생각이다.

미국이 진실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불신과 대결이 가장 침해한

조선반도에서도 화해와 완화의 걸음을 내디더야 하며 북남대화과 통일과정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외세에 추종하여 북남합의서의 리행에 제동을 거는 것과 같은 자주성이 없는 행동을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자들은 화해와 완화에로 나가는 오늘의 세계적 흐름에 맞게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 것이다.

○ 「조평통」대변인 성명

(1993. 8. 10)

지금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 있으며 제4차 범민족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90년대 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어 있다.

그러나 단합과 통일로 향한 민족의 이 도도한 흐름을 외면하고 있는 남조선당국자들은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극히 무모한 핵전쟁의 길로 나서고 있다.

지난 8월 5일 미국과 남조선통치배들은 미태평양사령부에서 열린 「년례안보협의회의 정책검토위원회 회의」라는데서 우리를 반대하는 모험적인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을 래년에도 감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어 6일에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을지 포커스렌즈」 훈련을 벌릴 것이라고 하였다.

오늘 더욱 많은 해내외동포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지지환영하고 제4차 범민족대회를 계기로 민족대단결과 평화통일 기운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 있는 때에 남조선당국자들이 외세와 야합하여 핵전쟁연습을 또다시 감행하려는 것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격화로 몰아가는 매우 위험한 불장난으로서 이것은 온 민족의 평화와 통일 념원에 대한 엄

중한 도전이다.

더욱이 남조선당국자들이 우리와 「핵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자고 제의해 놓고 다른 한편으로 대화상대방을 위협하는 핵전쟁연습소동을 벌리려는 것은 그들의 대화제의를 기만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는 남조선당국의 책동을 민족적 단합과 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열망에 도전하는 용납 못할 반민족적 범죄행위로, 우리 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한 로골적인 핵전쟁 도발소동으로 낙인하면서 이를 단호히 규탄한다.

이번에 남조선통치배들이 외세와 공모하여 핵전쟁연습계획을 발표한 것은 그들이야말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할데 대한 북남합의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배신자들이며 동족사이의 대결과 분열을 추구하는 반민족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준다.

남조선에서는 현 정권이 「문민」의 간판을 쓰고 발족된 후 오늘까지 그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우리를 반대하는 도발적인 각종 전쟁연습이 감행되어 왔다.

그들은 온 겨레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적인 북침핵전쟁연습인 「팀스피리트 93」 합동군사연습과 「93제병합동시범」훈련, 「93을지」전쟁연습을 비롯하여 각종 유명무명의 전쟁연습을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매일과 같이 광란적으로 벌려 왔다.

특히 남조선통치배들은 우리와 미국사이에 회담이 진척되고 공동성명이 발표된데 대하여 매우 못마땅해 하고 불안초조해 하면서 우리에게 그 무슨 국제적인 제재와 압력을 가해 줄 것을 애걸하며 동분서주하는 한편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기 위한 비렬한 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모든 사실은 제4차 범민족대회의 서울개최를 총칼로 막아나서며 겨레의 평화통일념원에 핵전쟁연습소동으로 대답해나서는 남조선의 현 정권이야말로 선행한 군부 파쇼독재 정권과 조금도 다를바 없는 전쟁과 분열주의 정권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대결과 전쟁을 통하여 얻을 것이란 자멸의 길뿐이다.

남조선통치배들은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게 될 부
모한 핵전쟁도발책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우리의 응당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핵전쟁의 길
로 나간다면 그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다시금 우리를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을 벌리는 것이
조미공동성명의 리념을 훼손하며 금후 조미회담의 진전과 핵문제해결에도 좋
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대하여 심사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통일을 념원하는 7천만 겨레가 전민
족대단결 10대강령의 기치밑에 하나로 굳게 뭉쳐 미국과 남조선통치배들의
범죄적인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90년대 통일을 위하여 계속 힘차게 투
쟁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

○ 북한 외교부 대변인 담화발표

(1995. 4. 19)

최근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14일 미국방성은 4월말부터 5월중순까지 남조선에서
미군과 남조선 괴뢰들이 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 무슨 조선반도 유사시에 대처하여 해외로부터 파견되는 증원군과의 통
합작전수행을 위한 이번 연습에는 남조선 주둔 미군과 괴뢰군, 그리고 해외주
둔 미군까지 포함하여 수많은 병력과 최신형 군사장비까지 동원된다고 한다.

미국이 우리를 반대하여 새로운 합동군사연습을 또다시 벌여놓으려 하는
것은 대화일방인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모독이고 조·미기본합의문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의 재관으로써 우리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 제안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는 조선반도 정세를 긴장격화로 몰아가는 미국의 위협한 군사적 움직임에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옹당한 대응조치에 대하여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조·미기본합의문이 발표된 이후에도 미국은 남조선에 무력을 계속 증강하면서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압력과 위협을 체계적으로 증대시켜 왔다.

지난 3월에만 하여도 미국은 악명높은 항공모함 인디펜던스호를 비롯한 방대한 무력을 동원하여 제주도 근해에서 남조선 해군과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벌였다.

최근에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5개의 항공모함전단을 비롯하여 대규모의 미군무력을 신속히 투입하기 위한 「한·미연합방위계획」이라는 위협한 반공화국 전쟁계획까지 작성해 놓았으며 얼마 전에는 우리의 핵시설들에 대한 선제타격과 전면전쟁을 예견하여 지난해에 짜놓았던 작전계획까지 신문지상에 공개하였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무심히 대할 수 없는 것은 합의문 이행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부당한 주장으로 조·미 쌍방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때에 미국이 무슨 목적으로 이러한 전쟁소동을 벌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1993년 6월에 채택된 뉴욕 공동성명과 지난해 8월에 발표된 제네바합의성명, 그리고 10월 조·미기본합의문에 관통되어 있는 기본정신은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 정책을 그만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은 옹당 우리를 반대하여 이미 해오던 모든 군사행동들을 중지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오히려 합의문 채택이후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책동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고립·압살하려는 미국의 본심에는 변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지금 미국이 경수로형 문제와 관련하여 있지도 않는 남조선형 경수로를 고집하면서 남조선을 한사코 경수로 제공에 끌어들이려 하는 것도 이러한 본심과 연결시켜 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그 무슨 유엔에 의한 제재설을 운운하면서 강요해오던 부당한 요구

를 군사적 무력까지 동원하여 실현해 보려고 우리에게 압력과 위협을 가하는 데는 기본합의문에 기초하여 핵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남조선을 끼고 우리에게 대한 압살기도를 추구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는 것이 명백하다.

남조선형 경수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우리의 입장은 바로 이러한 심각한 문제로부터 출발한 것이며 이것은 천만번 정당한 입장이다.

미국이 남조선을 내세워 우리를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실로 어리석은 망상에 지나지 않으며 실패를 면치 못할 것이다.

만일 미국이 조·미기본합의문에서 공약한 대로 우리와의 관계개선에로 나아갈 의지가 없다면 우리 역시 그에 대한 기대를 가질 필요가 없게 될 것이며 다만 우리의 자립적 핵동력공업을 동결할 데 대한 보상을 받으면 될 것이다.

오늘 조선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엄중한 정세는 조·미사이에 적대적 교전관계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평화반도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급선무로 해결하여야 할 근본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경수로 제공을 비롯하여 기본합의문의 이행도 결국은 이 문제의 해결여하에 따라 결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문제해결의 기본방도인 조선반도에서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 나아갈 것이며 이를 반대하는 적들의 도전에 대해서는 응당한 조치를 취해 나아갈 것이다.

〈우리측〉

○ 국무총리 대북성명문

(1984. 3. 10)

본인은 북한 정무원총리에게 보낸 2월 10일자 편지에서 「남북한당국 최고 책임자회담」과 「각료급회담」 등 남북한 당사자회담을 열고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지난 3월 7일 보내온 회답에서 우리 민족이 갈망하는 남북한 직접대화에 등을 돌린 채 주한미군철수 등 30여년 동안 반복해 온 낡아 빠진 주장들 만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측의 답신은 이산가족을 비롯한 남북한 동포들 간의 서신교환과 상호방문을 하루속히 실현시키자는 본인의 제안에 대해서 한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북한측은 온 민족이 분격하고 전세계가 규탄하고 있는 「버마」암살 폭발 만행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라는 우리측의 요구마저 묵살하였습니다.

「버마」암살폭발사건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잔악무도한 반민족적 도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은 민족의 화합과 평화통일을 바라는 마음에서 은인 자중하면서 북한측에게 「버마」사건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이 그들의 회담제의에 대한 진실성을 입증할 수 있는 우리의 최소한의 요구였습니다.

남북한 당사자 대화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대화를 위한 우리측의 최소한의 요구마저 외면한 북한측의 불성실한 태도는 북한이 대화를 통한 남북한 관계 개선과 통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전혀 성의가 없음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측이 「버마」암살폭발만행과 때를 맞추어 내놓은 이른바 「3자회담」제안은 남북한간의 현안문제를 대화로 풀어 나가겠다는 생각에서 나온것이 아니라 그들의 폭력노선을 은폐하려는 위장술책임이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북한측은 이번 서한에서 국군통수권을 시비하고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면서 남북한 당사자회담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억지주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국가원수가 엄연히 행사하고 있는 국군통수권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은 우리의 주권에 대한 모독이며 사실을 왜곡한 망발입니다.

북한측은 한반도 긴장조성의 책임이 주한미군과 우리측에게 있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한반도 긴장조성의 근본원인은 「버마」암살폭발만행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북한측이 대남적화통일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폭력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주한미군으로 말하면, 북한의 6·25 남침이 없었더라면 1949년에 철수했던 미군이 다시 한반도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북한이 휴전후에도 재남침 기도를 버리지 않은 채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면서 1968년 1월에는 무장특공대를 침투시켜 청와대 습격을 기도했고, 남북대화가 진행되던 70년대 초부터는 휴전선 일대에 남침용 땅굴을 파내려 왔으며 작년 10월에는 「버마」암살폭발만행을 자행하는 등 폭력과 무력도발을 계속해 온 것은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일입니다.

주한미군은 이같은 북의 남침위협에 대처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유지할 목적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주둔하고 있는 것이므로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간의 쌍무적 협정사안이며 북한측이 간섭할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북한측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기에 앞서 무력통일의 기도를 포기하고 남북대화에 호응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북한측은 우리측이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없다는 구실을 내세워 남북한 직접대화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측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원칙에 따라 우리측이 제의한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와 1971년부터 1977년까지 계속된 남북적십자 회담에는 왜 응했으며, 또한 1980년 2월부터 8월까지 열차례에 걸쳐 진행된 남북한 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접촉에는 무슨 목적으로 참석하였었는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와서 북한측이 남북한 당사자회담을 반대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통일문제에 대한 민족자결과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을 스스로 부인하는 자가당착의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는, 너무나 많이 쌓여 있습니다.

혈육과 헤어진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산가족의 고통, 모든 분야에서의 단절, 날로 심화되고 있는 불신과 반목, 첨예화된 군사적 대치상태 등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한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이마를 맞대고 하나하나 풀어나가야 합니다.

통일문제는 지금과 같은 대결과 불신의 관계속에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민족자결과 화합의 바탕위에서 남북한 당사자가 대화를 갖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회복해 나갈때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으나 민족자결정신과 평화에 대한 신념을 갖고 노력한다면 남북한 겨레가 스스로 화합하고 통일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한측이 평화통일을 말하면서도 남북한이 접촉하는 것조차 거부한다면 그들이 어떠한 대화를 제의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신뢰성이 없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한이 한자리에 마주 앉아야 합니다.

북한측은 해외에서까지 우리의 국가원수를 시해할 의도로 야만적 테러행위를 저지른 데 대하여 하루속히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고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회담」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당장 어렵다면 「남북한 각료급회담」에 동의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한 당사자간 회담이 진행된다면 한반도 문제와 관련이 있는 관계국들이
참여하는 회담도 개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북한측이 민족의 염원을 더이상 거역하지 말고 성실한 자세를 가지
고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에 호응해 오기를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 우리측 분야별 회담 수석대표, 북측성명 반박 대북 합동성명

(1986. 1. 20)

지금 남북의 온 겨레는 작년 한 해 동안 진행되어 온 여러 갈래의 남북대
화가 새해에는 더욱 잘 진전되어 훌륭한 열매를 거두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새로운 장이 열리기를 고대하고 있다.

특히 작년 9월에 있었던 역사적인 「이산가족 고향방문 및 예술공연단」의
교환사업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남북이산가족들과 온 겨레는 올해
에도 회담이 잘 진전되어 커다란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남북경제회담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상호 진지한 토의를 진행해 온
남북간의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사업 추진과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 구성에
관한 합의서가 하루속히 채택되어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이 구체적으로 실현되
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측은 1월 20일 남북회담 대표단 명의의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방송을 통해 발표하고 우리측의 관례적인 군사훈련을 핑계삼아 1월 22
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제6차 남북경제회담을 비롯하여 2월 18일로 예정된
남북국회회담 제3차 예비접촉과 2월 26일로 예정된 제11차 남북직접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북한측의 이와 같은 부당한 대화중단 처사에 대하여 온 겨
레와 함께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세상이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측의 「팀스피리트」 훈련은 방어를 목적으로 한 평화유지 훈련이며, 과거 10년 동안에 걸쳐 계속 실시되어 온 연례적인 것으로서, 올해에도 있을 것임이 세 갈래의 남북회담에 대한 쌍방간의 일자합의가 이루어질 때에 이미 예견되었던 것이다.

군사훈련으로 말하면 이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면 세계 어느나라이건 간에 당연히 실시하는 것이 상식이며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군사훈련을 비밀리에 하는가 공개적으로 하는가, 공격적인가 방어적인가에 있으며 이에 따라 정세를 긴장시키는가 또는 상대방을 위협하는 것인가에 있는 것이다.

우리측의 이 군사훈련이 북한측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측이 북한측에게 그 실시내용과 훈련기간을 과거 여러차례에 걸쳐 정식으로 사전 통보해 왔으며 또한 참관까지도 초청해 왔다는 사실에서 입증되고 있다.

북한측은 지난해만 해도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연대급 및 사단급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북한 전지역에 걸친 대규모의 각 병과 군대가 참가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면서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거나 우리측에 통보해 온 사실이 없다.

북한측의 군사훈련이 이처럼 비밀리에 실시되고 있는 점과 비무장지대 일대에 공격적인 무력을 증강하고 있는 바로 그 점이 우리측으로 하여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방어적 군사훈련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우리는 북한측이 관례적인 군사훈련에 대해 시비하면서 예정된 회담을 거부하는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대화앞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밖에 보지 않을 수 없다.

남북은 과거 쌍방의 군사훈련이 실시되는 기간중에도 남북총리회담을 위한 실무대표접촉 등 여러차례의 회담을 가진 바 있으며, 가까운 예로는 「팀스피리트」 훈련이 진행 중인 1984년 4월초 남북체육회담을 시작할 때에도 북한측

은 이를 회담과 관련시켜 시비하지 않았다.

북한측이 진정으로 남북대화를 성의있게 진행할 의사를 갖고 있다면 이치에 맞지않는 구실을 핑계삼아 회담개최에 불응할 것이 아니라 쌍방간에 합의된 사항부터 먼저 잘 준수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측의 일방적인 회담연기와 합의사항 위반행위는 결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과거에도 여러번 되풀이 해 온 상투적인 수법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측은 제작년 11월 23일 판문점 총격사건을 도발하고서도 그 책임이 마치 우리측에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면서 예정된 남북경제회담을 유산시켰을 뿐 아니라 작년초에는 우리측의 연례적인 군사훈련을 비난하면서 이미 날짜까지 합의된 경제회담과 적십자회담의 개최를 거부한 바 있다.

남북간의 긴장상태는 북한측의 주장처럼 우리측의 군사훈련에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40년간의 분단상태에서 누적된 상호불신과 적대관계의 결과이다.

남북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간에 신의를 가지고 신뢰를 축적하는 일이며 그것은 쌍방간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는 대화자세를 갖는 데서부터 구현되어야 한다.

북한측이 진정으로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통일을 원한다면, 「팀스피리트」 훈련을 구실로 대화를 거부할 것이 아니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호응해 나옴으로써 남북간의 신뢰구축에 성의를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미 쌍방이 합의하고 온 겨레앞에 엄숙히 약속한 모든 회담을 예정대로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2. 군사문제 관련 합의서

가. 기본합의서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 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

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2장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15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4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13일

남북고위급회담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원식	정무원총리 연형묵

나. 남북 불가침 부속합의서

-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장 남북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무력불사용

제1조 남과 북은 군사분계선일대를 포함하여 자기측 관할구역밖에 있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에 대하여 총격, 포격, 폭격, 습격, 파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행위를 금지하며 상대방에 대하여 피해를 주는 일체 무력도발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조 남과 북은 무력으로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라도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 관할구역에 정규무력이나 비정규무력을 침입시키지 않는다.

제3조 남과 북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남북사이에 오가는 상대방의 인원과 물자, 수송 수단들을 공격, 모의공격하거나 그 진로를 방해하는 일체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 밖에 남과 북은 북측이 제기한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상대방의 영해·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와 남측이 제기한 서울지역과 평양지역의 안전보장문제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계속 협의한다.

제2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계획적이라고 인정되는 무력침공 징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상대측에 경고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것이 무력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한 사전대책을 세운다.

남과 북은 쌍방의 오해나 오인, 실수 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우발적 무력충돌이나 우발적 침범 가능성을 발견하였을 경우 쌍방이 합의한 신호

규정에 따라 상대측에 즉시 통보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대책을 세운다.

제5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의 무력집단이나 개별적인 인원과 차량, 선박, 함정, 비행기 등이 자연재해나 항로미실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상대측 관할구역에 침범하였을 경우 침범측은 상대측에 그 사유와 적대의사가 없음을 즉시 알리고 상대측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상대측은 그를 긴급 확인한 후 그의 대피를 보장하고 빠른 시일안에 돌려보내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돌려보내는 기간은 1개월이내로 하며 그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제6조 남과 북사이에 우발적인 침범이나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같은 분쟁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쌍방의 군사당국자는 즉각 자기측 무장집단의 적대행위를 중지시키고 군사직통전화를 비롯한 빠른 수단과 방법으로 상대측 군사당국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군사분야의 모든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쌍방 군사당국자가 합의하는 기구를 통하여 협의해결한다.

제8조 남과 북은 어느 일방이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이 합의를 위반하는 경우 공동조사를 하여야 하며 위반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한다.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제9조 남과 북의 지상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0조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11조 남과 북의 공중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지상 및 해상불가침 경계선과 관할구역의 상공으로 한다.

제4장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제12조 남과 북은 우발적 무력충돌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장 사이에 군사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13조 군사직통전화의 운영은 쌍방이 합의하는 통신수단으로 문서통신을 하는 방법 또는 전화문을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 군사당국자들이 직접 통화할 수 있다.

제14조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기술실무적 문제들은 이 합의서가 발효된 후 빠른 시일안에 남북 각기 5명으로 구성되는 통신실무자접촉에서 협의 해결한다.

제15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후 50일 이내에 군사직통전화를 개통한다.

제5장 협의·이행기구

제16조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남북합의서 제12조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에 따르는 임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 남북군사분과위원회는 불가침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더 필요하다고 서로 합의하는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다.

제6장 수정 및 발효

제18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9월 17일

남북고위급회담	북남고위급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한민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총리 정원식	정무원총리 연형묵

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년 5월 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남북사이의 불가침을 이행·보장하고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이하 “군사공동위원회”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1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군사공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 ② 군사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차관급(부부장급)이상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하게 한다.

- ③ 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이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④ 수행원은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⑤ 쌍방은 군사공동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한다.
- ② 불가침의 이행과 준수 및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필요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실천한다.
- ③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합의사항을 실천한다.
- ④ 위에서 합의한 사항의 실천을 확인·감독한다.

제3조 군사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과 서울·평양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③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 ④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개로 할 수도 있다.
- ⑤ 군사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⑥ 군사공동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4조 군사공동위원회 회의에서의 합의사항은 쌍방 공동위원장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는 중요한 문건은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회에서의 합의문건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키는 경우 그것을 군사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6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북측대표단 단장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정무원총리 연형묵

서기 1995년 6월 3일 70부 발간	
발간업체 : (주)성림문화 2278-7011~5	
대표자 : 조 성 태	
조달청 등록번호 : 11-11-0278(91. 12. 24)	
참 여 자	남북회담사무국 군사회담과
	5 급 이 재 호
	7 급 서 명 용